

“사법·입법감시, 법률·인권교육, 법률운동 30년 전통 //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한국NGO연합 사법감시단 주관단체”

法律(消費者)聯盟

WWW.GOODLAW.ORG

金大仁(법정지포럼 이사장) 魯香基(전 한국기자협회장) 申平(로펌대표, 前법관) 嚴虎聲(변호사, 前국회의원) 李子賢(정개혁 상임대표) 趙柄倫(교수 前헌법학회장) 趙泰任(세계부인회 총회장)

(우) 08786 서울시 관악구 썩고개로 87, 6층 전화. 02) 523-8760~7 E-MAIL: GOODLAW@GOODLAW.ORG

▣ 법률연맹 발표, 국회의원 의정활동(2020.5.30.~2021.5.29) 분야별 평가 및 헌정대상 수상자 명단 ▣

국회의원(21-1) 의정활동(12분야) 1년차 성적 'D'학점(67.74점)

의정종합평가 “헌정대상” 1위 윤준병(민), 2위 장철민(민), 3위 이용우(민)

=== 정당/정권을 위한 국회(의원)가 아닌,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가 될 수 있기를 --- 건의함 ===
회의/참석(본회의 상임위 소위 등)과 절차정지는 독재를 막는 **최소한의 수단**이다<F.A.하이테크>
상/하 양원제 국회로 헌법을 개정하여, 현재의 심각한 졸속 입법을 원천 해결해야 한다
다수결/합의처리/악법무관, 의원10명안팎의 ‘소위’ 통과가 거의 본회의 통과가 되는 입법은 망국적/

- ▣ 법안투표율(100%) 1위 김민기 의원(민) 1위 김영호 의원(민) 1위 어기구 의원(민)
- ▣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수 1위 송옥주 의원(민) 2위 임이자 의원(국힘) 3위 서영교 의원(민)
- ▣ 국회 본회의 재석률 1위 김민기 의원(민) 2위 박병석 의원(무) 3위 정필모 의원(민)

▣ 의원법안 통과율은 17.59%, 정부법안 통과율은 48.51%(미국은 정부에 법률안 제안권이 없음)

▣ 국회법 제57조 위반(매월3회이상 회의) - /중요한 27개 법안 소위 한곳도 안지켜

▣ 국방위 등 6개 상임위 - “월 2회 이상 개회의무(국회법 49조의2②) 위반”

▣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및 경과보고서 채택 등 19개 회의에서 여·야간 막말막장

▣ 의원의 본회의 불출석·자리뜨기는 “입법/재정통제/정부건제 등의 4대 책무” 를 방기하는 직무유기

▣ 국회 본회의는 통법부로 전략!! 법안별 찬성율 93.95%, 찬반토론 21개 법안도 부결은 없어

1. 4선 이상 당선의원 중 ‘헌정대상’ 은 김영주, 노웅래, 안규백, 이명수 의원(4선) 4명 뿐

▣ 전체 국회의원(298명1)중 94명은 “F” 학점

2. 국회의원의 본회의 재석률 ‘C’ 학점(74.13%) -- 출석률(94.66%)에 비해 저조(출석체크만?)

-- 국회의 대정부 통제권한인 대정부질문 산회시엔 의원 재석률이 24.26%로 떨어져

▣ 출석률과 재석률의 차이 35%이상(출석도장만 찍고 자리떴다고 의심)인 의원 8명

▣ 당선횟수별 재석률 : 초선의원(78.42%)은 최고, 4선 의원(62.90%)은 최저

1) 현직 국회의원 300명 중 국회의장, 당선된 지 6개월 미만 의원 제외 <국회의원의 당적 표시 및 정당 통계는 평가 기간말 2021. 5.29. 현재 기준임>

3. **상임위 평균 출석률 89.54%**로 본회의 출석률보다 저조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무색/**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는 1년 평균 9.4회 회의, 국회법(매월3회 의무) 안지켜
- 국회법(49조②)위반, 연 24회 **상임위 회의의무**, 국방위 등 6개 위원회 안지켜
 - 당선횟수별 상임위 전체회의 출석률 : 재선의원(92.38%) > 4선의원(76.75%)
 - 교섭단체별 상임위 전체회의 출석률 : 민주당(92.56%) > 국민의힘 (85.24%)
 - 가장 충실해야 할 **법안심사 소위**에서의 심사시간은 **1개 법안당 5분14초**꼴 심사
 - 국민청원을 외면하는 청원심사소위원회—1년에 고작 2회(교육, 환노), 총 44분 동안 회의
 - 정무위 등 **13개 상임위는 단 한차례도 “청원심사소위”** 개최 안함(40건 청원 적체중)
4. 제21대국회 1차년도(21-1) 국회의원 **법안투표 ‘B’** 학점(81.02%)
- **법안투표 낙제**(60%미만) 44명, 포기의원(40%미만) 17명
 - 다선의원일수록 법안투표에 무책임 - 4선(19명) 평균 법안투표율 69.70%
 법안투표율 하위(40%이하) 17명중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 9명
 정당별 법안투표율: 더불어민주당(87.86%) > 국민의힘(72.50%)
5. 지난 **1년간 한 건의 대표발의 법안도 처리 못 시킨 입법활동 0점 의원**이 총 25명
- 지역별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수— 전북의원(9.7개) - 1위, 강원의원(3개) - 최하위
 - 통과된 법안의 **공동발의**건수는 여전히 높아 100개 이상 졸속발의한 의원 74명 <평균은 72.59개>
 - 통과된 1,716개 법안중, 원안가결-126개(7.34%) , **대안반영 폐기**-1,313개(76.51%)
 - 연간 가결(원안/수정)된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안** : 403개(통과법안의 23.49%)
 - 원안·수정가결된 의원발의법안 중 48개(11.91%)는 용어순화·폐지·타법개정 등이었음 --
6. 국회의원 **감싸기 심각** — 국회윤리특위 전체회의 1차례 총 15분, 소위는 구성조차 안해
 -- 국회의원 징계안 **14건 중 사실상 1건도 처리 안 돼** (제식구 감싸기)
7. 제21대 국회 1차년도 **예결특위 : 무려 558조 예산을 55시간 만에 졸속심사**
코로나 19 영향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만 3차례
8. 제21대 국회 1차년도 **대정부질문 : 대폭축소**(본회의 일수는 늘었으나, 질문의원수는 줄어)
정부견제기능 약화
9. 제21대 국회 **국정감사활동 : D 학점**, **국감현장 도처에 법치민주주의 실종 여전**

10. 이번 평가를 총괄한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김대인** 총재는 “**다수결이건 합의 처리였건, 악법여부간, 의원10명 안팎의 ‘법안소위’**에서 **여/야간사위원 2명과 전문위원까지, 3~4명의 의견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상임위/법사위/본회의에서도 대개 자동 통과되는 것은 매우 위대로운 입법행태**”라며, “**법안소위, 상임위전체회의, 본회의**에서 법안내막도 잘 모르는 **거수기통과**가 아닌, 철저히 검토하는 책임감있는 **입법활동과, 예/결산 통제와 국가5부 견제** 등 국회의원의 **4대 의무**에 충실해 주기를 기대한다” 고 강조했다.

붙임 : 제21대국회(21-1) 국회의정활동 종합 국민보고서. 1부. 끝.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전화. 02) 523-8760~7 goodlaw@goodlaw.org <문의 : 홍금애 실장 / 윤소라 부장>

제21대 국회 1차년도(21-1), 국회의원 의정활동 종합평가 대국민보고서

정치적 중립, 전문성을 담보한 의정종합 평가기관 법률소비자연맹 조사 / 분석 / 평가

《 목 차 》

제1부 제21대국회 1차년도(21-1), 헌정대상 수상자 및 의정활동 성적	7
— 국회 의정활동 평가 중 가장 공신력있고 정밀한 정량·정성평가의 종합의정평가	
□ 법률소비자연맹 평가, 제21대국회 1차년도(21-1) 의정활동 상위의원 20명의 성적	
□ 법률소비자연맹 분석, 제21대 국회 1차년도 한 건도 대표법안을 통과 못시킨 의원	
I.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의원 김영주(4선), 윤준병 의원(1위) 등 75명 《다선, 가나다순》	9
1. 교섭단체별 수상의원 : 더불어민주당 47명으로 가장 많아	11
2. 성별 수상의원 : 여성의원이 12명으로 전체 여성의원 중 21.43%	11
3. 당선횟수별 수상의원 : 초선의원이 35명으로 가장 많아	11
4. 선거구별 수상의원 : 광주의원의 50.00%인 4명 선정	11
II. 제21대 국회 1차년도(21-1), 국회의원 의정활동 성적 : 67.74점	12
1. 전체성적 : 60점 미만 94명 (전체의원의 31.54%)	12
2. 당선횟수별 의정활동 성적 : 재선의원이 73.77점으로 가장 높아	13
3. 정당별 의정활동 성적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69.84점으로 가장 높아	13
4. 선거구별 의정활동 성적 : 세종시가 84.75점으로 높아	13
III. 국회의정활동 조사·평가 개요	15
1. 목적 및 취지	15
2. 조사과정	15
3. 평가대상기간 및 평가대상 국회	16
4. 평가대상의원	16
5. 2021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위원회의 헌정대상 평가기준표	16
IV. 선진국회 의정활동을 위한 법률소비자연맹의 제언	18
1. 국회부터 법 지키고, 지키지 못할 법·규정은 서둘러 개정해야	18
2. 의사정족수를 강화하여, 국회의원의 본회의 재석률을 제고해야	18
3. 대정부질문의 사후점검을 할 수 있는 조직과 결과보고를 해야	18
4. 법안심사과정에서의 전문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민간전문가의 화롱	19
가. 검토보고서 통일화	19
나. 전문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전문가인력 풀(Pool)구성 필요	19

다. 소위 법안심사시 정부의견은 참고사항만 되어야	19
5. 법안투표율 제고를 위해 법안에 대한 정보 제공 충실해야	20
6. 법에 정한 30일 국감 실시하고, 국감의 재탕·삼탕 ‘붕어빵’화 차단해야	20
가. 시정조치 요구사항은 끝까지 파헤쳐 ‘붕어빵’국감이 되지 않게 해야	20
나. 국정감사법 제2조 준수(정기국회 전 30일), 원칙 못지킬 것이면 개정해야	21
다. 외교통일위원회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생산적으로	21
라.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부실, 지연 근절	21
마. 적절한 피감기관 선정으로 ‘수박 겉 핥기’식 국감 종식	22
7.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한 장기 계류를 없애고 신속 심사해야	22
8.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의 효율화와 활동 강화	22
가. 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의 법안심사소위 참여/진술권 보장	22
나. 참여한 대립이 있는 법안의 경우 소위 구성원(특히 전문위원)의 의견만 듣지 말고 공개적으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음	23
다. 국회 보좌진이나 전문가의 진술권 보장	23
라. 회의수와 회의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함	23
마. 청원소위 충실화	23
바. 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방법마련 절실	24
사. 충실한 결산심사를 위한 시간 확보	24

제2부 제21대 국회 1차년도(21-1), 국회의원 의정활동 성적25

I. 제21대 국회1차년도(21-1), 본회의 재석률 성적 : 12점 만점에 평균 8.89점 25

1. 제21대 국회 1차년도 48차례 본회의 149회 재석률 분석	25
2. 국회의원의 본회의 총149회 출석/재석체크 결과, 평균 재석률 74.13%	26
3. 국회 본회의장 재석 등은 국회 4대 책무 이행을 위한 기본적 의무	27
4. 법률소비자연맹 분석, 제21대 국회 1차년도 의원의 본회의 재석률 통계	27
가. 교섭단체별 재석률 상·하위 10인 / 지역별 1위의원·꼴찌의원	27
나. 제21대 국회 본회의 1차년도 재석률 통계 분석	30
5. 제21대 국회 1차년도 본회의 출석, 개의, 산회시 분석	34
6. 본회의 중에 출석하지 못한 사정이 많았던 의원	35
가. 청가서(결근 사유서)를 많이 제출한 의원 : 5회 이상 6명	35
나. 본회의 중에 출장을 간 의원	36
7. 제21대 국회 본회의 개황 : 회의 횟수는 비슷, 감정싸움으로 17개 본회의에서 장내 소란	36

II. 제21대국회 1차년도(21-1), 상임위 전체회의 출석률 : 7점 만점에 6.27점 38

1. 16개 상임위 전체회의 총 431회 전수조사	38
2. 상임위원회 회의시간 및 출석률 조사결과	39
3. 국회윤리규범 준수 절실	40

4. 제21대 국회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률 분석	40
5. 제21대 국회 1차년도 상임위 전체회의 현황	43
Ⅲ. 제20대국회 3차년도(20-3), 국회의원의 법안투표(참여)성적 : 10점 만점에 8.11점	47
1. 총 882회 전자표결 투표 횟수 전수조사	47
2. 제21대 국회 1차년도 국회의원의 법안투표율 분석	48
3. 법안표결 불참은 무책임한 입법권 포기	49
4. 제21대 국회 교섭단체별 상위 10위 의원과 지역별 국회의원 법안투표율 1위 의원	49
5. 제21대 국회 1차년도 국회의원의 법안투표율 세부 분석	51
6. 제21대 국회 1차년도 법안처리 본회의의 현황 : 본회의의 48회 중 14회 본회의에서 821개 법안가결 처리	56
Ⅳ. 제21대 국회 1차년도(21-1), 통과된 의원법안의 발의 성적	58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 점수 : 20점 만점에 10.95점	
통과된 공동발의 법안 점수 : 10점 만점에 09.82점	
1. 제21대 국회 1차년도 통과된 1716개 법안 조사	58
2. 법안의 생명은 적시성과 실효성	60
3. 제21대 1차년도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건수 상위의원과 통과율 상위의원	60
4. 제21대 국회 1차년도에서 통과(대안반영폐기법안 포함)된 법률안 통계 분석	62
5. 제21대 국회 1차년도 국회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의 통과율 분석	65
6. 제21대 1차년도 통과된 공동발의 법안수 상위의원	67
7. 제21대 국회 1차년도 통과된 공동발의법안 주요통계	68
8. 제21대 국회 의원발의 법률안 처리개황	71
Ⅵ. 제21대 국회 1차년도(21-1) 기타 주요 의정활동 실적	75
1. 제21대 국회 1차년도 국정감사 : 국정감사 종합성적은 D 학점	75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자료를 토대로 해	
국정감사 현장출석 3점, 국리민복상 수상의원 및 준 우수위원 평가	
가.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성적은 D학점	81
나. 국정감사 질의 횟수 및 질의응답 시간	88
다. 눈에 띄는 국정감사 쟁점과 상임위 국감 약평 《상임위 무순》	90
라. 마구잡이 피감기관 선정, 전문성 부족 및 형식적 국감 여전	98
마. 증인채택 문제 등으로 인해 의사진행 발언만 풍성	99
바. 국회사무처의 코로나 방역 가이드라인은 옳은가	100
사. 제21대 국회 2차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반드시 준수하고 개선돼야	101
2. 국회의원 윤리특위 활동 : 처리건수'0'건으로 위원장, 간사 감점	105
가. 국회윤리특별위원회의 역사	105
나. 제21대 국회 1차년도 윤리특위 구성	105
다. 윤리특별위원회 첫회의	106

라. 윤리특위의 회의와 처리건수	106
3. 제21대국회 1차년도(21-1), 대정부질문 : 여야 공방장 여전, 대정부견제기능 우수 가점	108
가. 제21대 국회 1차년도 대정부질문 : 정책질의보다는 여/야간 공방전으로 전락	108
나. 제21대 국회 1차년도 대정부질문 현황	109
다. 대정부질문의 충실화와 언론과 NGO의 상시적인 국회의정모니터링이 필요	110
라. 제21대 국회 1차년도 대정부질문 주요 현황 분석	110
4. 제21대국회 1차년도(2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 예결위 법정시한 준수, 추경심사만 3차례 ..	116
가. 원구성 파행으로 반쪽 예결위로 시작	116
나. 제21대 국회 1차년도 예결위 구성	117
다. 제21대 국회 예결위 활동 : 총 121시간 32분 회의, 출석률은 91%에 불과	118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구성과 활동	119
마. 2021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 7회	119
바. 예결위 예산심사 가점의원 선정	120
5. 21대 국회 1차년도 특별위원회 : 상임위정수특위, 윤리특위의 활동안합	120
6. 제21대 국회 1차년도 소위원회 활동 : 6회 이상 회의만 소위 출석률에 따라 점수부여	121
가. 제21대 국회 1차년도 총 320회 소위원회 회의 조사	121
나. '법안심사'의 관문이며, 실질적 입법 결정과정인 법안심사소위의 실태 분석	122
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의 철저한 점검 필요	123
라. 제21대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현황	123
마. 제21대 국회 1차년도 상임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실적	127
바. 제21대 국회 1차년도 청원심사소위원회 실적	129
◆ 참고자료	129
◆ 제21대 국회 본회의 회의 현황	
◆ 제21대 국회 예산안 확정절차 및 주요국의 예산제도	
◆ 제21대 국회 1차년도 국정감사 통계	
◆ 제21대 국회 국회윤리위원회 징계관련 규정	

국회의원 헌정대상위원회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계량화하여 분석·평가하는 모델을 세계최초로 개발하여, 제21대 1차년도 국회의원의 의원성적을 12개 항목의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하였고, 이념이나 정파를 떠나, 묵묵히 충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온 의원들을 선정·발표한다. 제21대 국회 제1차년도 국회의정 종합평가회 및 헌정대상 시상은 이러한 감시·평가활동의 결과로 유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격려를 보냄으로써, 제21대 국회 2차년도에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유도하고, 민생·경제발전과 국민행복국가 건설을 위하여, 사법부·행정부 등 국가 5부를 견제·견인하여 충실하게 만드는 데 있다.

제1부 제21대국회 1차년도(21-1),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의원 및 의정활동 성적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상위의원 20명의 주요<12개 항목 중>성적

의원명	순위	평점	선거구	점수	국감성적 (12~17)	통과대표법 안(20)	통과공동법 안(10)	본회의 재석(12)	상임위 출석(7)	법안투표 (12)
				상황	국리민복 / 준우수	발의건수	발의건수	재석률	출석률	투표율
윤준병	1	97.27	전북 정읍시고창군	점수	17	20	10	9.83	7.00	9.88
				상황	국리민복	12	125	81.88%	100.00%	98.78%
장철민	2	96.74	대전 동구	점수	17	20	10	10.39	7.00	8.87
				상황	국리민복	13	114	86.58%	100.00%	88.69%
이용우	3	96.72	경기 고양시정	점수	17	20	10	9.99	7.00	9.26
				상황	국리민복	23	93	83.22%	100.00%	92.58%
유동수	4	96.29	인천 계양구갑	점수	17	20	10	9.50	7.00	9.38
				상황	국리민복	8	91	79.19%	100.00%	93.80%
박찬대	5	95.40	인천 연수구갑	점수	17	20	10	8.94	7.00	9.20
				상황	국리민복	9	56	74.50%	100.00%	91.97%
신현영	6	95.25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점수	17	20	10	10.07	5.96	8.98
				상황	국리민복	9	45	83.89%	85.19%	89.78%
천준호	7	95.25	서울 강북구갑	점수	17	18	10	10.07	7.00	9.94
				상황	국리민복	9	45	83.89%	100.00%	99.39%
박용진	8	94.87	서울 강북구을	점수	17	20	10	8.62	6.09	9.99
				상황	국리민복	10	59	71.81%	86.96%	99.88%
임이자	9	94.20	경북 상주시문경시	점수	17	20	10	8.67	6.13	9.33
				상황	국리민복	27	98	72.26%	87.50%	93.31%
이장섭	10	93.64	충북 청주시서원구	점수	17	18	10	9.74	6.80	9.11
				상황	국리민복	5	76	81.21%	97.14%	91.12%
이정문	11	93.36	충남 천안시병	점수	12	20	10	10.07	6.39	9.96
				상황	준우수	10	109	83.89%	91.30%	99.64%
김경만	12	93.34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점수	17	16	10	10.55	7.00	9.85
				상황	국리민복	7	184	87.92%	100.00%	98.54%
고용진	13	93.22	서울 노원구갑	점수	17	20	10	7.41	7.00	8.89
				상황	국리민복	16	86	61.74%	100.00%	88.93%
조응천	14	93.06	경기 남양주시갑	점수	17	20	10	8.46	7.00	7.71
				상황	국리민복	11	39	70.47%	100.00%	77.13%
전용기	15	93.03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점수	17	20	10	11.19	7.00	9.95
				상황	국리민복	12	129	93.29%	100.00%	99.51%
홍성국	16	92.30	세종 특별자치시갑	점수	12	20	10	10.63	7.00	9.90
				상황	준우수	10	175	88.59%	100.00%	99.03%
김도읍	17	92.07	부산 북구강서구을	점수	17	20	10	8.50	4.91	8.93
				상황	국리민복	11	53	70.80%	70.21%	89.29%
서동용	18	91.54	전남 순천광양 곡성구례을	점수	12	20	10	9.91	7.00	9.99
				상황	준우수	9	69	82.55%	100.00%	99.88%
조승래	19	91.07	대전 유성구갑	점수	12	20	10	10.87	7.00	8.63
				상황	준우수	10	82	90.60%	100.00%	86.25%
박홍근	20	91.04	서울 중랑구을	점수	17	20	10	9.50	7.00	7.97
				상황	국리민복	17	159	79.19%	100.00%	79.68%

제21대 1차년도 **대표발의**(국§79③) **법률안을 1건도 통과 못시킨 의원 - 박병석 의장 등 25명**

의원명	당선회수	선거구		정당	비고
권은희	3선	비례		국민의당	
김 응	초선	서울	송파구갑	국민의힘	
김태년	4선	경기	성남시수정구	더불어민주당	
김희곤	초선	부산	동래구	국민의힘	
류호정	초선	비례		정의당	
박병석	6선	대전	서구갑	무소속	
박성준	초선	서울	중구성동구을	더불어민주당	
박 진	4선	서울	강남구을	국민의힘	
변재일	5선	충북	청주시청원구	더불어민주당	
신원식	초선	비례		국민의힘	
양기대	초선	경기	광명시을	더불어민주당	
용혜인	초선	비례		기본소득당	
유경준	초선	서울	강남구병	국민의힘	
윤호중	4선	경기	구리시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초선	비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3선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더불어민주당	
정경희	초선	비례		국민의힘	
정찬민	초선	경기	용인시갑	국민의힘	
조수진	초선	비례		국민의힘	
조정훈	초선	비례		시대전환	
조태용	초선	비례		국민의힘	
최강욱	초선	비례		열린민주당	
최형두	초선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국민의힘	
홍영표	4선	인천	부평구을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초선	비례		열린민주당	2020.3.25.의원직 승계

1.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의원

■ 헌정대상 모범상 수상의원 (가나다순)

김희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률분야)	전주혜 의원 (국민의힘, 인권분야)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방송분야)	

■ 헌정대상 수상의원 (다선, 가나다순)

의원명	당선헌수	정당	선거구	
김영주	4선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갑
노웅래	4선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마포구갑
안규백	4선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갑
이명수	4선	국민의힘	충청남도	아산시갑
김도읍	3선	국민의힘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을
김민기	3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용인시을
박완주	3선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	천안시을
박홍근	3선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중랑구을
서영교	3선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중랑구갑
윤재옥	3선	국민의힘	대구광역시	달서구을
이종배	3선	국민의힘	충청북도	충주시
이헌승	3선	국민의힘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진구을
인재근	3선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도봉구갑
강기윤	재선	국민의힘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고용진	재선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노원구갑
김성원	재선	국민의힘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주	재선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전주시병
김정재	재선	국민의힘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김희국	재선	국민의힘	경상북도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박완수	재선	국민의힘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박용진	재선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강북구을
박재호	재선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	남구을
박 정	재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파주시을
박찬대	재선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	연수구갑
서삼석	재선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성일종	재선	국민의힘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송기헌	재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	원주시을
송석준	재선	국민의힘	경기도	이천시
신정훈	재선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
안호영	재선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어기구	재선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	당진시
위성곤	재선	더불어민주당	제주자치도	서귀포시
유동수	재선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	계양구갑

의원명		당선희수	정당	선거구	
이만희	李晩熙	재선	국민의힘	경상북도	영천시청도군
임이자	林利子	재선	국민의힘	경상북도	상주시문경시
정점식	鄭点植	재선	국민의힘	경상남도	통영시고성군
조승래	趙承來	재선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	유성구갑
조응천	趙應天	재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남양주시갑
진성준	陳聲準	재선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강서구을
추경호	秋慶鎬	재선	국민의힘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자근	具滋根	초선	국민의힘	경상북도	구미시갑
김경만	金京萬	초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미애	金美愛	초선	국민의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광역시을
김병주	金柄周	초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승수	金承洙	초선	국민의힘	대구광역시	북구을
김영배	金永培	초선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성북구갑
김예지	金睿智	초선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원이	金元二	초선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목포시
민형배	閔馨培	초선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광산구을
박대수	朴大壽	초선	국민의힘	비례대표	
서동용	徐東榕	초선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서범수	徐範洙	초선	국민의힘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현영	申賢榮	초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양금희	梁琴喜	초선	국민의힘	대구광역시	북구갑
윤준병	尹準炳	초선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정읍시고창군
이병훈	李炳勳	초선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동구남구을
이 용	李 鏞	초선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용빈	李龍彬	초선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광산구갑
이용우	李龍雨	초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고양시정
이원택	李源澤	초선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김제시부안군
이장섭	李將燮	초선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	청주시서원구
이정문	李楨文	초선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	천안시병
이종성	李鍾成	초선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주환	李周桓	초선	국민의힘	부산광역시	연제구
이해식	李海植	초선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강동구을
임오경	林五卿	초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광명시갑
장철민	張喆敏	초선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	동구
전용기	田溶冀	초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필모	鄭必模	초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희용	鄭熙溶	초선	국민의힘	경상북도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조명희	曹明姬	초선	국민의힘	비례대표	
조오섭	曹五燮	초선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북구갑
천준호	千俊鎬	초선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강북구갑
최혜영	崔惠英	초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홍성국	洪性國	초선	더불어민주당	세종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갑

1. 정당별 수상의원

구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	계
수상의원수	47	28	0	75
의원수	174	102	22	298
수상비율	27.01%	27.45%	0.00%	25.17%

2. 성별 수상의원

구분	남	여	계/평균
수상의원수	63	12	75
의원수	242	56	298
수상비율	26.03%	21.43%	25.17%

3. 당선횟수별 수상의원

구분	초선	재선	3선	4선	5선이상	계
수상의원수	35	27	9	4	0	75
대상의원수	151	73	42	19	13	298
수상비율	23.18%	36.99%	21.43%	21.05%	0.00%	25.17%

4. 선거구별 수상의원

선거구	수상의원	의원정원	수상비율	수상의원 <각 지역별, 가나다 순>
서울특별시	12	49	24.49%	고용진, 김영배, 김영주, 노용래, 박용진, 박홍근 서영교, 안규백, 이해식, 인재근, 진성준, 천준호
부산광역시	5	18	27.78%	김도읍, 김미애, 박재호, 이주환, 이현승
대구광역시	4	12	33.33%	김승수, 양금희, 윤재욱, 추경호
인천광역시	2	13	15.38%	박찬대, 유동수
광주광역시	4	8	50.00%	민형배, 이병훈, 이용빈, 조오섭
대전광역시	2	6	33.33%	장철민, 조승래
울산광역시	1	6	16.67%	서범수
세종시	1	2	50.00%	홍성국
경기도	7	59	11.86%	김민기, 김성원, 박정, 송석준, 이용우, 임오경, 조응천
강원도	1	8	12.50%	송기현
충청북도	2	8	25.00%	이장섭, 이종배
충청남도	5	11	45.45%	박완주, 성일종, 어기구, 이명수, 이정문
전라북도	4	10	40.00%	김성주, 안호영, 윤준병, 이원택
전라남도	4	10	40.00%	김원이, 서동용, 서삼석, 신정훈
경상북도	6	13	46.15%	구자근, 김정재, 김희국, 이만희, 임이자, 정희용
경상남도	3	16	18.75%	강기윤, 박완수, 정점식
제주도	1	3	33.33%	위성곤
비례대표	11	46	23.91%	김경만, 김병주, 김예지, 박대수, 신현영, 이용, 이종성, 전용기, 정필모, 조명희, 최혜영

이하의 보도자료의 내용은
법률소비자연맹 홈페이지(WWW. GOODLAW.ORG)의
공지사항에 공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I. 제21대 국회 1차년도(21-1), 국회의원 의정활동 성적 : 67.74점

《국회의장 박병석 의원 등을 제외한 298명 기준》

1. 의정활동 종합성적 : 67.74점 / 100점 만점 환산(D학점)

제21대 국회 1차년도 종합의정활동 성적은 **평균 67.74점**이었다.

국회의원 평가기준에 의해 평점을 매긴 결과, 종합의정활동 낙제점 의원은 **94명**이나 되었다.

298명의 국회의원 중 90점 이상이 **27명**이었다. 80점대가 **40명**, 그리고 70점대가 **66명**이었다. 가장 많은 의원이 분포하고 있는 60점대가 **71명**이었다. 60점 미만의 “F학점”의 의정성적을 얻은 의원은 모두 **94명**이었다. 60점미만대 중에서도 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의원은 **39명**이나 되었다.

《제21대 국회 의정활동 종합성적 분포(100점 만점)》

구분	90점이상	80점이상~90점미만	70점이상~80점미만	60점이상~70점미만	50점이상~60점미만	50점미만	계
학점	A	B	C	D	F		
의원수	27	40	66	71	55	39	298

2. 교섭단체별 성적 : 더불어민주당 성적이 69.84점으로 높아

국민의힘의 평균점수는 **66.86점**으로 더불어민주당 **69.84점**보다 3점 정도 저조하였다. 비교섭 정당과 무소속의 경우에는 **55.21점**으로 평균 **67.74점**보다 크게 밀들었다.

《교섭단체별 제21대 국회 1차년도 의정활동 종합성적》

구분	의원수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
90점 이상	27	25	2	0
80점이상~90점미만	40	17	23	0
70점이상~80점미만	66	45	18	3
60점이상~70점미만	71	45	20	6
50점이상~60점미만	55	23	26	6
50점미만	39	19	13	7
계	298	174	102	22
평균	67.74	69.84	66.86	55.21

3. 당선횟수별 분석 : 재선의원의 성적이 73.77점으로 가장 높아

당선횟수별로 초선의원의 경우에는 90점 이상이 15명이었고, 평균 68.83점으로 재선의원보다 낮았다. 재선의원의 경우에는 90점 이상 9명이었는데 평균의정활동 성적은 73.77점으로 가장 높았다. 재선의원들이 의정활동을 고르게 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선의 경우에는 64.70점, 4선의 경우에는 57.26점, 그리고 5선이상의 다선의원의 경우에는 51.68점으로 가장 낮게 나왔다.

《당선횟수별 제21대 국회 1차년도 의정활동 종합성적》

구분	의원수	선수				
		초선	재선	3선	4선	5선이상
90점이상	27	15	9	3	0	0
80점이상~90점미만	40	15	16	5	4	0
70점이상~80점미만	66	37	19	8	2	0
60점이상~70점미만	71	39	19	7	2	4
50점이상~60점미만	55	31	6	12	3	3
50점미만	39	14	4	7	8	6
계	298	151	73	42	19	13
평균	67.74	68.38	73.77	64.70	57.26	51.68

4. 선거구별 : 세종시가 84.75점으로 높아

선거구별로 세종지역 출신 국회의원 2명의 평균 의정활동점수가 84.75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지역구보다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평균의정활동점수가 68.99점으로 평균 67.74점보다 높게 나왔다.

지역중 두 번째로 높은 성적은 광주지역으로 8명 의원의 평균 성적이 76.96점으로 높았다. 가장 낮은 경우는 울산시로 62.08점이었으며, 그다음으로 제주도로 63.26점이었다.

《선거구별 제21대 국회 1차년도 종합의정활동 종합성적》

선거구	수상의원수	지역구의원정원	수상비율	지역별 평균
서울특별시	12	49	24.49%	65.79
부산광역시	5	18	27.78%	64.83
대구광역시	4	12	33.33%	65.89
인천광역시	2	13	15.38%	64.46
광주광역시	4	8	50.00%	76.96
대전광역시	2	6	33.33%	69.75
울산광역시	1	6	16.67%	62.08

선거구	수상의원수	지역구의원정원	수상비율	지역별 평균
세종특별자치시	1	2	50.00%	84.75
경기도	7	59	11.86%	66.43
강원도	1	8	12.50%	67.36
충청북도	2	8	25.00%	63.35
충청남도	5	11	45.45%	71.01
전라북도	4	10	40.00%	76.27
전라남도	4	10	40.00%	76.76
경상북도	6	13	46.15%	71.73
경상남도	3	16	18.75%	63.74
제주특별자치도	1	3	33.33%	63.26
비례대표	11	46	23.91%	68.99
계/평균	75	298	25.17%	67.74

《선거구별 제21대 국회 1차년도 종합의정활동 순위(높은 순)》

선거구	수상의원수	지역구의원정원	수상비율	지역별 평균
세종특별자치시	1	2	50.00%	84.75
광주광역시	4	8	50.00%	76.96
전라남도	4	10	40.00%	76.76
전라북도	4	10	40.00%	76.27
경상북도	6	13	46.15%	71.73
충청남도	5	11	45.45%	71.01
대전광역시	2	6	33.33%	69.75
비례대표	11	46	23.91%	68.99
강원도	1	8	12.50%	67.36
경기도	7	59	11.86%	66.43
대구광역시	4	12	33.33%	65.89
서울특별시	12	49	24.49%	65.79
부산광역시	5	18	27.78%	64.83
인천광역시	2	13	15.38%	64.46
경상남도	3	16	18.75%	63.74
충청북도	2	8	25.00%	63.35
제주특별자치도	1	3	33.33%	63.26
울산광역시	1	6	16.67%	62.08

Ⅲ. 국회의정활동 조사·평가 개요

1. 목적 및 취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이 얼마나 충실한 의정활동을 하는지를 계량화하여 제대로 분석·평가하는 것은 유권자인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임.

국민의 대표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국회 회의출석, 법안 발의,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등 대정부통제기능 수행, 예산통제(예결 활동)수행활동 등 12개 평가분야로 나누어서 조사하고 이를 최대한 계량화 하고,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하여 공천기준 등 국회의정활동 종합평가의 자료로 활용. (소위 국회의정활동의 ‘짜통상’을 추방하고, 유권자들에게 최고 정밀한 유권자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임.)

2. 조사과정

- (1) 국회 본회의 복합재석률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법안투표율 등은 국회 회의록을 기본으로 하여 국회공보, 국회회의 경과보고서 등도 참고하여 조사를 하였고, 국회 회의록에는 결석의원이 명시되지 않는 관계로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변동시(사·보임시)에는 수작업을 통해 사·보임 여부를 확인작업(사·보임여부에 대해 협조를 한 의원실의 경우에는 협조한 내용 반영)을 하였다.
- (2)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내용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였고, 예산결산심의와 관련이 없는 질의인지 여부를 국회 회의록 등을 통해 정밀 분석하였다.
- (3) **코로나19로**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는 연인원 1천여명이 온라인에서 모니터링을 하였으며, 출석현황은 국회공보와 회의록을 통해 재확인 조사를 하였다.
- (4) 대정부질문의 경우에는 국회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 질의 답변 내용을 모니터링하였고, 국회 회의록을 통해 질문하는 의원들의 질문내용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병행하였다.
- (5) 대표법안 및 공동법안 발의 수는 제21대 국회 1차년도에 가결된 법안과 그 위원회 대안으로 만들어져 폐기된 법안의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를 조사하여 통계화하였다.
- (6)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 활동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조사하였으며, 소위원회 위원 등의 개선 현황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 홈페이지

지 안내와 국회공보와 위원회 전체회의 내용을 통해 일부 확인하였다.

3. 평가대상 기간 및 국회

2020. 5. 30. ~ 2021. 5. 29. (제379회 임시국회 ~ 제387회 임시국회)

4. 평가 대상의원

제21대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는 현직 국회의원 중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를 제외함** <당적 및 교섭단체별 통계는 2021. 5. 29. 현재 기준으로 하였으며, 개별평가에서 다른 기준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혔음>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기준 설정의 배경]

1. 지난 제19대 국회의 첫해(2012)부터 평가기준을 안내하였고(2011. 종합평가시작), 국정의원 의정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최대한 객관적 지표를 산출하여 공정한 평가를 하고자 수차 국회의원·보좌관, 국회출입기자, 법·정치분야 등 전문가들과의 자문과 토론을 거쳐 기준을 설정하였음.
2. 국민대표, 입법, 예산, 정부감시견제 등 국회의 기능을 집약적으로 행사하는 국정감사의 비중을 생각할 때, 평가비중은 50%이상이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비율이 25%정도이므로, 75%<225명>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지 못하는 국회의원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17점으로 하고, 50%이상 국회의원은 준 우수의원으로 12점을 배점함.
3. 국회의원의 입법권은 국회 기능의 핵심으로 발의법안에 대한 표결참여 등은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할 수 있는 바, 자신이 대표발의 또는 공동발의한 법안의 표결과정에 불참, 기권, 반대하는 경우에는 엄중한 감점을 부여함으로써 입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4. 법안발의 건수에 있어, 유사법안, 폐기법안의 재활용 등 법안발의의 남발이 새로운 국회 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다수의 지적에 따라 일정 건수 이상에 대해서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기로 함.
5. 평가기준은 과거의 의정활동 평가보다는 미래 의정활동에 대한 방향제시에 역점을 둬.
6. 대정부질문과 예결특위의 경우 회의 안전과 관련 없는 질문을 지양하도록 하기 위해 질문 내용을 모두 분석하여 평가에 반영함.
7.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활동은 회의록을 기준으로 하여 활동유무와 출석률 등을 평가에 반영함.
8. 이번 제21대 국회 1차년도에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견제하려는 국민의힘 간의 대립으로 야당 없는 국회회의가 빈번히 이루어진 것을 일부 감안함.

5. 21대 국회 1차년도 평가 기준

국회의원실에 두차례 공문을 통해 평가기준 등을 사전 안내하였으며, 종합 평가 기준 및 배점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제21대국회 1차년도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헌정대상위원회의 평가기준표》

01) 본회의(전체) 재석(12)		○ 재석률X12점 / 재석=개의+속개+산회+출석
02) 상임위원회 출석(7)		○ 출석률X7점
03) 법안표결 참여(10)		○ 표결참여율X10점
법안 발의 성적(30)	04) 대표발의(20)	① 가결된 대표발의법안 1개X4점 ② 대안반영폐기된 법안 중 대표발의 법안 1개X2점 ③ 대표발의지만 단순용어 순화 등 문제 법안 1개X1점 ①+②+③ 합산한 점수를 최대20점까지 인정함.
	05) 공동발의(10)	① 가결된 공동발의법안 1개X0.5 ② 대안반영폐기된 법안 중 공동발의 법안 1개X0.5점 ①+② 합산한 점수를 최대 10점까지 인정함.
06) 국정감사 현장출석(3)		○ 100%는 3점, 90%이상~100%미만 출석 2점, 60%이상~90%미만은 1점, 60%미만은 0점
07) 국정감사 우수의원(17)		○ 국정감사우수의원상(위원장상) 수상시 17점 ○ 상위 50%까지 준우수의원(위원장)으로 12점
08) 대정부질의 가점		○ 대정부질의 목적에 맞게 가장 잘 질의한 경우 +2점
0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 예결특위에서 예결관련 질의를 잘한 의원의 경우 +2 ○ 출석 70%미만인 경우 -1점, 50%미만인 경우 -2점
10) 윤리특별위원회 감점		○ 국회윤리위 상정시 -3점 (단, 징계안 발의자가 15인 이상이고 윤리위에서 한 번 이상 안건으로 상정되어 회의를 한 경우에 한함) ○ 윤리특위의 심의결과가 없는 경우 윤리특위 위원장과 간사들은 -3점
11)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		○ 비상설특위의 경우 1달 1회 이상 회의를 하고, 의결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 및 간사는 3점, 출석률이 75% 이상인 구성의원 모두에게 +2점, 15회 이상 회의를 한 경우 위원장과 간사의원 +1 ○ 비상설특위의 경우 아무런 의결사항이 없고 회의의무일수(1달 1회)의 50%미만의 회의만 한 경우에는 위원장 및 간사는 -3점, 구성의원은 -2점 ○ 감점은 없으나, 출석률이 50%미만인 경우 -2점, 70%미만인 경우 -1점 ○ 가점과 감점은 3~-3 사이에서 함.
12)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활동		○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는 6회 이상 회의를 한 소위원회의 구성원들 중 100% 출석은 5점, 90%이상은 출석 4점, 80%이상은 3점, 70%이상은 2점, 60%이상은 1점, 60%미만은 0점 ○ 가산점은 최대 5점까지만 인정

IV. 선진 국회 의정활동을 위한 법률소비자연맹의 제언

1. 국회부터 법 지키고, 지키지 못할 법·규정은 서둘러 개정해야

국회 상임위원회 상설소위 설치규칙은 지난 1998년부터 제정되어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규정과 현실이 따로 놓고 있다. 또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청원을 중시하여 청원심사기간(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 제2항)을 준수해야 하는데, 지키지 않고 있다.

국회가 법을 만드는데 있어서 신중해야 하는 예가 되는 사건이 있다. 2014. 2. 10. 국회의원 270명이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발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저작권법상의 친고죄 조항을 2006년 비친고죄 조항으로 줄속 개악한 것의 영향이 있는바, 이로 인해 연간 150만명이나 되는 국민이 법파라치들로 인해 고소고발을 당하고 합의금을 내라는 내용증명을 받는 등 고통받고 있음에도 국회는 침묵하고 있다. 신속히 저작권법 침해범죄를 친고죄조항으로 환원 개정해야 한다.

국회법에 상임위원회는 월 2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는 월 3회 개최하라고 되어 있으나, 지키지 않고 있다.

2. 의사정족수를 강화하여, 국회의원의 본회의 재석률을 제고해야

국회의원의 재석률을 보면, 거의 낙제 수준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 대한 국회의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의사정족수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73조가 정하고 있는 의사정족수가 재적의원의 5분의 1이상으로 한 것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 전체 300명 국회의원 중 60명 이상만 출석하면 회의가 진행되도록 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헌법 제1조 제5절 제1항에 상하 양원 모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의사정족수가 매우 낮다. 1960년에는 1/3이상으로 했다가 1988년 1/4로 완화하였고, 1997년 또 다시 1/5로 완화했다.

3. 대정부질문의 사후점검을 할 수 있는 조직 구축과 결과보고를 해야

대정부질문에서 질문의원들은 한번에 13명, 12명씩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상대로 많은 질문을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후점검

을 하는 조직이 없다. 개별의원실에서 할 것인지 정당차원에서 할 것인지, 국회사무처 차원에서 할것인지를 논의하여 실효성있는 대정부질문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정부질문이 ‘카더라’ 식의 가짜 뉴스를 생산해 내는 절차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질문의 내용과 답변 그리고 사후적인 조치나 대책을 점검하는 조직이 있어서 대정부질문을 하고 나면 그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나오도록 되어야 한다.

4. 법안심사과정에서의 전문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민간전문가의 화통

가. 검토보고서 통일화

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작성에서 위원회별로 다르고 법률안별로 달라서 작성 기준이나 원칙이 없고, 심사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필수적으로 듣고 있으나, 보고내용에 있어서는 요약보고를 하고 있어 시민들이 법안의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나. 전문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전문가인력 풀(Pool)구성 필요

법률소비자연맹이 국회운영위원회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및 입법조사관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증과 학위, 경력을 분석해 본 결과,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의 상임위원회 순환보직과 상임위원회 관련 전문성을 입증할만한 자료들이 부족하여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외부전문가나 전문가단체 풀(POOL)을 구축하여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다. 소위 법안심사시 정부의견은 참고사항만 되어야

국회는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의원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를 위한 구속력 있는 법을 제정하는 회의체이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소관 정부부처의 실무자들의 의견에 좌지우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상임위 소위 심사과정에서 정부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계류되거나 대안반영폐기되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국회는 정부입맛에 따른 통법부가 되고 있다, 정부는 의견서만 내고 회의에 참석하지 말고 국회에서 필요할 때만 불러 질문을 하든지, 발의 국회의원의 제안설명을 강화하는 것이 더 절실히 요구된다. 그렇게 되면, 법안발의에 대한 국회의원의 법률안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다.

5. 법안투표율 제고를 위해 법안에 대한 정보 제공 충실해야

법안투표율 제고를 위해서는 본회의 전에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에 대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법안심사에서 숙려기간을 부여 하거나, 최소한 어떠한 법률안이고 이에 대한 심사과정이 어떠한지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법안의 의결과정인 상임위 소위 심사·의결, 상임위 전체회의 심사·의결,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의결, 국회본회의 의결과정에서 유일하게 법률안의 찬반 여부가 실명표시되는 것은 국회 본회의과정 뿐인데, 법안표결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본회의 전에 의결할 법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6. 법에 정한 30일 국감 실시하고, 국감의 재탕·삼탕 ‘붕어빵’ 화 차단해야

가. 시정조치 요구사항은 끝까지 파헤쳐 ‘붕어빵’ 국감이 되지 않게 해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질의한 의원이 그 내용이 시정되었는지를 직접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실명제’를 도입하고, 복합적 이슈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의 ‘시정조치팀’가동, 국회내 국정감사 및 조사의 시정조치 사항 이행을 ‘실효적으로 평가하는 조직 구성’ 등 국회가 제도개선을 통해 국감지적사항을 목살해온 30년 국정감사의 적폐를 근절시킬 것을 촉구한다.

시정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매년 반복된 ‘붕어빵’ 국정감사가 되고 있는 것은 피감기관이 국정감사기간만 지나면 된다는 안이한 사고로 대처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위원이나 감사반장(위원장)이 시정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국감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제 국회가 제도적으로 시정조치요구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실명제(질의한 의원표기) 및 위원회별로 평가팀을 만들고, 국정감사 전에 시정요구처리상황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위원회 차원에서 직접 점검하도록 하여 매년 중복질의 되는 일이 없이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감사 중 질타를 통해 허위 시정처리보고를 발본색원을 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시정조치에 질의한 의원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보니, 정부의 시정조치 보고에 대해 질의한 의원도 관심이 없고, 질의하지 않은

의원은 더욱 관심이 없고, 상임위에는 담당하는 사람도 없다보니, 시정조치 허위 보고가 무책임하게 다음해에 다시 질의되는 현상이 없어지질 않고 있어 국감이 부정부패 면죄부가 되는 오·남용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나. 국정감사법 제2조 준수(정기국회 전 30일), 원칙 못지킬 것이면 개정해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라고 하고 있는 바, ‘정기 집회일 이전에 30일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나, 한 번도 지키지 않고, 예외규정을 이용하여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칙 중심의 사회를 만들려면 국회부터 원칙을 준수하거나, 아니면 지키지 못할 조항이면 원칙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외교통일위원회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생산적으로

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해외현지에서 실시하여 국민의 신속한 알권리 보장이 어렵고, 국정감사의 효과도 반감된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필수불가결한 재외공관에 대해서만 현지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기타 재외공관에 대해서는 화상 국정감사 등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제20대 3차년도 국회부터는 감사내용이 화상으로 녹화되어 누구든 볼 수 있도록 하였지만 아직도 여전히 해외 국감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시간 비행 등 비효율적이고, 국정감사 내용은 국감당시 알 수 없으므로 반드시 개선해서 국정감사 공개원칙에 따라 재외공관 국감에 대한 인터넷 생중계가 필요할 것이며, 문제가 있는 재외공관을 선별해 방문하거나 화상 국감을 실시하는 방안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2020년도 국감은 코로나19로 인해 화상국감이 실시되었지만 아직까지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음.>>

라.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부실, 지연 근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에서 서류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주무장관에게 해명요구,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요구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거부, 부실, 지연이 여전한 것은 문제이다.

매년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자료제출에 대한 거부나 부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

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넘어가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제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감기관의 입장에서는 강제력을 동원하기 전까지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어서 입법자인 국회의원이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마. 적절한 피감기관 선정으로 ‘수박 겉 핥기’ 식 국감 종식

매년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수의 기관을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국정감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국정감사의 위세를 보이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과도한 피감기관 선정으로 인해 일반 증인은 물론 피감기관에 대해 질의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고, 서면으로 대체하는 등으로 수박 겉 핥기식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제21대 국회 2차년도에서는 피감기관 선정과정에서부터 신중하고, 저인망식 피감기관 선정보다는 문제가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집중과 선택의 관점에서 피감기관을 선정해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7.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한 장기 계류를 없애고 신속 심사해야

장기적인 적체와 심사과정에서 심사도 하지 않으면서 상정만 하면 이중적인 낭비가 심하므로 국회의원 법률안에 대해서 접수 순서대로 신속히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법에 규정된 의사일정 요일제, 연중 상시 국회 그리고 무쟁점 법안 신속처리제 등 일하는 국회 그리고 예측 가능한 국회를 실질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법안이 적체되지 않으려면 국회 입법조사처 등의 법안검토와 외부 전문가의 활용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8.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의 효율화와 활동 강화

가. 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의 법안심사소위 참여/진술권 보장

의원이 법률안 발의를 한 경우에는 대표발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나 심사 소위원회에 참여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과 관련 정부부처의 의견만 듣는 것으로 처리 되고 있다. 그러므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회의에 대표발의 의원도 참

여하여 법률안의 제안설명과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자세히 반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나. 참여한 대립이 있는 법안의 경우 소위 구성원(특히 전문위원)의 의견만 듣지 말고 공개적으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음

법안의 내용에 대한 찬반이 갈려서 대립이 심한 경우, 예를 들어 검경 수사권 독립과 같은 법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검찰 출신 전문위원은 해당 법안심사과정에서 회피를 하도록 하게 하거나, 사계 전문가의 의견을 공개석상에서 들을 필요가 있다.

다. 국회 보좌진이나 전문가의 진술권 보장

상임위원회의 법안소위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전체회의 때보다는 진의의 기회가 더 많이 보장 되어야 하는데, 국회 보좌진도 법안심사를 할 때, 해당 부처의 답변에 대해 예비적으로 보충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의원이 수많은 법률안에 대해 다 살필 수 없어 보좌진의 도움을 받으나, 심사과정에서는 피감기관의 답변이 다를 경우에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없으므로 반대의견이 있는 의원이 지정한 전문가나 의원의 담당 보좌진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겠다.

라. 회의수와 회의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함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적은 수의 소속 의원이 하고, 법안 관련 해당부처 실무자도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내실있는 법안 심사를 위해 정기적 법안 심사소위 개최(2019. 7.17 시행)에 더하여 충분한 질의 응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마. 청원소위 충실화

국회는 민의의 전당으로 국민은 청원법과 국회법에 의해서 청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청원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기일을 도과하여 사장 시키고 있는 것은 문제로서 청원심사소위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일을 하지 않은 국회 윤리특별위가 국회 청원을 담당하여 신속히 처리를 하는 방안도 연구되어야 한다. 국회 청원의 신속처리는 민의 대변기관인 국회의 중요한 역할이다.

바. 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방법마련 절실

법안심사소위와 예산심사소위에 같이 활동하는 의원들이 많은 것을 감안하여, 평상시에는 적체된 법안을 모든 의원이 같이 심사하고 예결산 기간에는 예결산소위의 활동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모든 의원이 같이 예결산 심사를 하는 등 소위원회의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법안심사소위의 경우에는 2020. 12. 시행 한달 3회 개최 원칙 준수》

사. 충실한 결산심사를 위한 시간 확보

결산심사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상임위 예결산소위의 역할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그 소위원회인 계수조정소위원회와 비슷하고, 또한 국회 예산정책처와도 업무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개선이 요구되었다. 충실한 결산 심사기간 확보와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예산심사과정에서 충분한 반영 등 실효성이 있는 사후조치가 필요하다.

제2부 제21대 국회 1차년도(21-1), 국회의원 의정활동 성적

1. 제21대 국회1차년도(21-1), 본회의 재석률 성적 :

12점 만점에 평균 8.89점

법률연맹 발표, 국회의원(21-1)들의 본회의출결/재석상황(총149회) 전수조사

국회의원들, 본회의 출석률은 'A'-94.66%, 재석률은 74.13%로 'C' 학점

- 제21대 국회 1차년도 재석률 우수의원 (95% 이상) -- 김민기(민), 박병석(무), 정필모(민) 의원
- 본회의 재석률 60%미만 'F' 학점 : 불성실의원 -- 25명 (전체의원 8.33%)
- 본회의 지각(개회시)은 평균 85명, 조퇴는 144명으로 근태불량 -- 불성실의원의 세비는 삭감해야!
- 의원의 본회의 불출석·자리뜨기는 “입법/재정통제/정부견제 등의 4대 책무” 를 방기하는 직무유기
- 의원이 “무단 결석시 ‘국회의원수당법 특별활동비 감액 규정’ 을 적극 적용하라” (국회법 제32조 2항)

“ 본회의장 재석률 제고를 위해, 교섭단체별 하위의원과 지역별 끝씨의원을 공개 ”

- ◆ 출석체크만 하고, 자리 안 지키는 ‘고질병’ 여전 : 제21대 국회 본회의 재석률 ‘C’ 학점
- ◆ 양대 정당의 본회의 재석률 비교 : 더불어민주당(77.89%)이 국민의힘(69.24%)보다 훨씬 앞서
- ◆ 당선횟수(선수)별 재석률 : 초선의원(78.42%)은 상대적으로 성실, 4선의원(62.90%)은 최저
- ◆ 지역별 재석률 1위 의원 : 서울(김영호) 부산(이주환, 정동만) 대구(류성걸) 인천(허종식)
(비례대표 포함) 광주(민형배) 대전(박병석) 울산(이상현) 세종(홍성국) 경기(김민기)
강원(허영) 충북(임호선) 충남(이정문) 전북(한병도) 전남(소병철, 주철현)
경북(정희용) 경남(민홍철) 제주(위성곤) // 비례대표(정필모) 각 의원

1. 제21대 국회 1차년도 48차례 본회의의 149회 재석률 분석

입법/사법감시 법률전문NGO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총재 김대인)는 제21대 국회1차년도(2020. 5. 30.~2021. 5.29.) 총 48회 본회의에(2020. 7.16.개원식을 겸한 개회식을 비롯 개회식 3회 포함하면 51개 모임) 국회의원²⁾의 출석, 재석(속개/산회시)상황을 국회회의록에 의거, 출석·재석 점검(총149회)을 전수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2) 재석률 분석에 있어서 제21대 국회는 원구성 파행으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당론에 의해 제379회 임시회 4개 본회의에 불출석하여 이를 제외하고 분석하였고,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 체포동의안 가결로 인해 수감중인 의원의 수감기간을 제외하여 통계하였음 (그러나 상위명단 등에 표시하지 않았음)

본회의 재석률 : 많은 국회의원들이 출석체크만 하고 퇴장하므로 본회의장이 텅텅 비게 되자, 국회사무처에서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회의시작(개회), 오후 회의계속개회(속개), 회의 끝날 때(산회)에 의원의 재석여부를 점검하였으나, 본회의 시간 중 잠깐이라도 다녀간 국회의원은 출석한 것으로 회의록에 기록하는데, 단순한 출석표시와 위 3회의 재석 점검숫자를 합계한 수치를 기준으로 해당 의원이 재석한 숫자를 나누어서 백분율로 표시한 것임. (엄밀히 말하면 출석·재석률이라고 표현해야 하나, 통상은 본회의 재석률이라고 표현하고 있음)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4조(회의출석) ①국회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식해외출장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32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청가서(請假書) 또는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활동비에서 그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2. 국회의원의 본회의 총149회 출석/재석체크 결과, 평균 재석률 74.13%

(1) 본회의장에서 10번에 9번 이상 자리를 지킨 의원은 18명에 불과한 반면, 10번에 6번도 제대로 자리에 있지 않은 의원은 25명이나 되었다. 70%대 본회의 재석률 의원이 125명으로 가장 많았다.

《제21대 국회 1차년도 국회의원의 본회의 재석률 분포 현황》

본회의 재석률	의원수	본회의 재석률	의원수
90%이상	18	50%이상~60%미만	16
80%이상~90%미만	67	40%이상~50%미만	7
70%이상~80%미만	125	40%미만	2
60%이상~70%미만	65	계	300

(2) 교섭단체별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평균 재석률이 77.89%로, **국민의힘** 의원의 평균 재석률 69.24%보다 높게 나왔다.

(3) **당선횟수별**로는 국회의원 본회의장 재석률이 가장 높은 의원은 **초선의원**들로, 평균 78.42%이었으며, 4선 의원의 재석률은 62.90%로 가장 낮았다.

(4) **지역별**로 보면, 본회의장 재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지역(87.25%)** 그 다음은 **광주지역(82.05%)**이었고, **서울지역(73.22%)**은 평균(74.13%)보다 조금 낮았으며, 의원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지역**은 77.68%였다. 가장 저조한 지역은 **부산지역(66.16%)**이었다.

(5) 본회의의 출석률과 재석률을 비교해서 그 격차가 35%P 이상인 의원은 모두 8명이었다. 2021. 3. 25. 의원직을 승계한 **김의겸 의원**은 선서한 4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부터 6번의 본회의에 100%출석을 하였지만, 재석률은 61.11%에 불과했다.

(6) **텅빈 본회의장**에서는 여야 간의 말싸움으로 인해 장내소란이 벌어졌다. **대정부질문** 등 다른 의원들이 발언이나 질문을 하는 본회의에서 17회의 본회의 도중에 장내소란이 있었으며, 한 본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장내 소란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7) **국회 본회의장**은 의원 없는 텅 빈 본회의장을 연출하여 국민들로부터 빈축을 사왔다. 제21대 국회 1차년도도 예외는 아니어서, 끝날 때 23명이 남아 있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021. 5. 21. 본회의 말미에** “현재 시각 12시 46분, 마지막까지 동료 의원들의 자유발언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의 명단을 속기록에 남김으로써 주민들이 모범적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님들을 기억하도록 하겠다” 고 했다. 우리 **법률연맹도 포지티브 운동**을 하지만, **본회의장 재석을 제고**를 위해 고육책으로 교섭단체별/ 지역별 재석률 하위와 꼴찌의원을 발표하기로 했다.

3. 국회 본회의장 재석 등은 국회 4대 책무 이행을 위한 기본적인 의무

이번 조사를 총괄한 **법률연맹 총본부 김대인 총재**는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재석(在席) 등은 ‘입법·재정통제·정부견제’ 등 4대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이다.(국회윤리실천규범 제14조 성실한 출석의무). 매년 조사결과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 재석하는 비율이 74.13%로,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석률 94.66%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은 출석 도장만 찍고 자리를 뜨기 때문이므로, 충실한 의정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 며, “국회의원의 충실한 본회의 출석/재석은 입법기능 등 4대 책무에 충실한 의정활동인 바, 이를 제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 된다” 고 강조했다.

4. 법률소비자연맹 분석, 제21대 국회 1차년도 의원의 본회의 재석률 통계

〈당표기 및 통계는 2021. 5. 29. 현재 기준 이하 같음〉

가. 교섭단체별 재석률 상·하위 10인 / 지역별 1위의원·꼴찌의원

(1) 더불어민주당 재석률 상하위원

1) 더불어민주당 재석률 상위의원

의원명	당선횟수	선거구		성별	본회의 재석률	출석/재석 횟수
김민기	3선	경기	용인시을	남	99.33%	148
정필모	초선	비례	대표	남	97.99%	146
민형배	초선	광주	광산구을	남	93.96%	140

의원명	당선횟수	선거구		성별	본회의 재석률	출석/재석 횟수
허영	초선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남	93.96%	140
홍기원	초선	경기	평택시갑	남	93.96%	140
김영호	재선	서울	서대문구을	남	93.29%	139
김주영	초선	경기	김포시갑	남	93.29%	139
전용기	초선	비례	대표	남	93.29%	139
임호선	초선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남	92.62%	138
김민철	초선	경기	의정부시을	남	91.28%	136
오영환	초선	경기	의정부시갑	남	91.28%	136
윤미향	초선	비례	대표	여	91.28%	136

2) 더불어민주당 재석을 하위의원

의원명	당선횟수	선거구		재석률	출석/재석횟수	비고
이인영	4선	서울	구로구갑	43.62%	65	통일부장관
이탄희	초선	경기	용인시정	49.66%	74	
우상호	4선	서울	서대문구갑	59.06%	88	
송재호	초선	제주	제주시갑	61.07%	91	
고용진	재선	서울	노원구갑	61.74%	92	
박범계	3선	대전	서구을	61.74%	92	법무장관
우원식	4선	서울	노원구을	61.74%	92	
박주민	재선	서울	은평구갑	62.42%	93	
황희	재선	서울	양천구갑	64.43%	96	문체장관
송갑석	재선	광주	서구갑	65.10%	97	

(2) 국민의힘 소속 본회의 재석을 상/하위 의원

1) 국민의힘 소속 본회의 재석을 상위의원

의원명	당선횟수	선거구		본회의 재석률	출석/재석 횟수
김성원	재선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92.70%	127
정찬민	초선	경기	용인시갑	86.86%	119
류성걸	재선	대구	동구갑	83.21%	114
정희용	초선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83.21%	114
김예지	초선	비례	대표	82.48%	113
이종성	초선	비례	대표	81.75%	112
강대식	초선	대구	동구을	81.02%	111
김승수	초선	대구	북구을	80.29%	110
이용	초선	비례	대표	79.56%	109
최승재	초선	비례	대표	79.56%	109

2) 국민의힘 본회의재석을 하위의원

의원명	당선횟수	선거구		본회의 재석률	출석/재석 횟수
김태호	3선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40.27%	60
조경태	5선	부산	사하구을	46.72%	64
하태경	3선	부산	해운대구갑	48.91%	67
권성동	4선	강원	강릉시	49.66%	74
권영세	4선	서울	용산구	51.09%	70
홍문표	4선	충남	홍성군예산군	51.82%	71
장제원	3선	부산	사상구	54.01%	74
김은혜	초선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54.74%	75
조수진	초선	비례	대표	56.20%	77
황보승희	초선	부산	중구영도구	56.20%	77

(3) 지역별/선거구별 재석을 1위 의원 / 하위 의원

1) 지역별 본회의 재석을 1위 의원

지역	의원명	당선횟수	선거구		정당	본회의 재석률	출석/재석 횟수
서울	김영호	재선	서울	서대문구을	더불어민주당	93.29%	139
부산	이주환	초선	부산	연제구	국민의힘	75.18%	103
	정동만	초선	부산	기장군	국민의힘	75.18%	103
대구	류성걸	재선	대구	동구갑	국민의힘	83.21%	114
인천	허종식	초선	인천	동구미추출구갑	더불어민주당	81.21%	121
광주	민형배	초선	광주	광산구을	더불어민주당	93.96%	140
대전	박병석	6선	대전	서구갑	무소속	97.99%	146
울산	이상현	재선	울산	북구	더불어민주당	78.52%	117
세종	홍성국	초선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갑	더불어민주당	88.59%	132
경기	김민기	3선	경기	용인시을	더불어민주당	99.33%	148
강원	허영	초선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더불어민주당	93.96%	140
전북	한병도	재선	전북	익산시을	더불어민주당	87.25%	130
전남	소병철	초선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더불어민주당	88.59%	132
	주철현	초선	전남	여수시갑	더불어민주당	88.59%	132
충북	임호선	초선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더불어민주당	92.62%	138
충남	이정문	초선	충남	천안시병	더불어민주당	83.89%	125
경북	정희용	초선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민의힘	83.21%	114
경남	민홍철	3선	경남	김해시갑	더불어민주당	77.18%	115
제주	위성곤	재선	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81.21%	121
비례대표	정필모	초선	비례		더불어민주당	97.99%	146

2) 지역별 본회의 재석률 하위 의원

지역	의원명	당선횟수	선거구		정당	본회의 석률	출석/재석횟수
서울	이인영	4선	서울	구로구갑	더불어민주당	43.62%	65
부산	조경태	5선	부산	사하구을	국민의힘	46.72%	64
대구	홍준표	5선	대구	수성구을	무소속	39.60%	59
인천	윤상현	4선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무소속	30.87%	46
광주	송갑석	재선	광주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65.10%	97
대전	박범계	3선	대전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61.74%	92
울산	이재익	3선	울산	남구갑	국민의힘	60.58%	83
세종	강준현	초선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을	더불어민주당	85.91%	128
경기	이탄희	초선	경기	용인시정	더불어민주당	49.66%	74
강원	권성동	4선	강원	강릉시	국민의힘	49.66%	74
전북	이상직	재선	전북	전주시을	무소속	51.43%	72
전남	이개호	3선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더불어민주당	73.15%	109
충북	박덕흠	3선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무소속	51.09%	70
충남	홍문표	4선	충남	홍성군예산군	국민의힘	51.82%	71
경북	송언석	재선	경북	김천시	무소속	46.72%	64
경남	김태호	3선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국민의힘	40.27%	60
제주	송재호	초선	제주	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	61.07%	91
비례	권은희	3선	비례	대표	국민의당	50.36%	69

나. 제21대 국회 본회의 1차년도 재석률 통계 분석

(1) 제21대국회 1차년도 의원 재석률: 74.13%(출석률보다 20.5%p 적어)

분석결과, 제21대 국회 1차년도 국회의원의 본회의 재석률은 74.13%였다.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어 체포 구속된 상황이 있는 의원의 체포 구속 기간을 제외하고, 제21대 국회 원구성으로 교섭단체인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이 불출석한 4개 본회의에서의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불출석을 제외한 수치이다.

제21대 국회의 본회의 출석률은 평균 94.66%로 본회의 출석률과 재석률의 차이가 20%p 차이가 났다.

《제21대 국회 본회의 출석률 및 재석률 비교》

구분	재석률	출석률	개의회 참석률	산회시 참석률
300명 평균	74.13%	94.66%	73.88%	53.49%

(2) 1년간 본회의 재석률 최상위 :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민기, 정필모 등 90% 이상 18명에 불과

제21대 국회 1차년도에서는 김민기 의원이 99.33%(제20대 국회 4년간통계에서는 96.95%)로 가장 높은 재석률을 기록하였으며, 박병석 국회의장이 97.99%로 2위, 정필모 의원이 97.99%로 공동 2위였다. 18명 중 무소속 박병석 의장,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을 제외하고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었다.

《제21대 국회 1차년도 본회의 재석률 상위 6인》

의원명	당선했수	선거구		정당	재석률	재석횟수
김민기	3선	경기	용인시을	더불어민주당	99.33%	148
박병석	6선	대전	서구갑	무소속	97.99%	146
정필모	초선	비례	대표	더불어민주당	97.99%	146
민형배	초선	광주	광산구을	더불어민주당	93.96%	140
허영	초선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더불어민주당	93.96%	140
홍기원	초선	경기	평택시갑	더불어민주당	93.96%	140

(3)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본회의 재석률이 가장 높아(77.89%)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평균 재석률이 77.89%로 국민의힘 의원의 평균 재석률 69.24%보다 높게 나왔다. 본회의 단순 출석률 역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본회의 출석률 96.73%로 양호한 반면, 국민의 힘은 91.59%였다.

본회의 시작(개회시)할 때 재석체크에 있어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8.92%였고, 비교섭은 60.71%에 불과했다.

본회의가 끝날 때(산회시)의 재석체크에 있어서도 평균 53.49%였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7.19%, 국민의힘 의원은 48.25%였다.

《제21대 국회 1차년도 교섭단체별 본회의 재석률 및 출석률 현황》

구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	평균
평균 재석률	77.89%	69.24%	67.69%	74.13%
평균 출석률	96.73%	91.59%	92.72%	94.66%
의원수	174	102	24	300

(4) 국회의원 본회의장 재석률은 초선이 78.42%로 가장 높아

국회의원 본회의장 재석률이 가장 높은 의원은 초선 의원들로, 평균 78.42%로 전체 평균 74.13%보다 4%p 정도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재선 의원의 재석률

이 72.51%로 높았고, 3선 의원의 재석률은 68.74%, 5선 이상 의원의 재석률이 67.44%으로 낮아졌으며, 4선 의원의 재석률은 62.90%로 가장 낮았다.

《제21대 국회 1차년도 당선횟수별 재석률 현황》

구분	초선	재선	3선	4선	5선이상	평균/계
본회의 재석률	78.42%	72.51%	68.74%	62.90%	67.44%	74.13%
본회의 출석률	95.62%	95.47%	93.22%	88.89%	92.23%	94.66%

(5) 본회의 재석률, 최고는 세종 87.25%, 최저는 부산지역 66.16%

본회의장 재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지역으로 87.25%로 평균보다 15%p 가량 높게 나왔다. 그 다음은 광주지역으로 평균 재석률은 82.05%였다. 3위는 전남지역으로 81.34%였다. 서울지역은 73.22%로 평균 74.13%보다 조금 낮았으며, 의원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지역은 77.68%였다. 평균(74.13%) 미달 지역은 꼴찌인 부산지역 비롯해 경남, 강원 등 12개 시도나 되었다.

《제21대 국회 선거구별 국회의원 본회의 재석률/출석률 현황》

광역시도별	평균재석률	평균출석률	의원수
세종	87.25%	100.00%	2
광주	82.05%	94.61%	8
전남	81.34%	98.82%	10
대전	80.82%	96.64%	7
경기	77.68%	96.69%	59
평균/계	74.13%	94.66%	300
충북	73.68%	95.23%	8
전북	73.47%	96.13%	10
서울	73.22%	94.61%	49
경북	71.81%	92.64%	13
울산	71.60%	93.64%	6
인천	70.71%	94.67%	13
제주	70.69%	88.89%	3
대구	70.51%	91.64%	12
충남	70.18%	93.13%	11
강원	68.42%	92.82%	8
경남	66.89%	91.06%	16
부산	66.16%	90.71%	18

참고로 비례대표의원 47명의 재석률은 76.86%로 평균보다 약간 상회하였다.

(6) 본회의 출석률과 재석률의 차이가 큰 의원 : 35%P 이상 차 8명

본회의의 출석률과 재석률을 비교해서 그 격차가 35%P이상인 경우인 의원은 모두 8명이었다. 출석률이 높지만 재석률이 낮은 경우는 본회의장에 출석체크는 하였지만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고 자리를 뒀다는 의미가 된다.

2021. 3. 25. 의원직을 승계한 김의겸 의원은 선서한 4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 부터 6번의 본회의에 100%출석을 하였지만, 재석률은 61.11%에 불과해 그 차가 38.89%P였다.

《제21대 국회 1차년도 출석률과 재석률의 차이가 큰 의원》

의원명	당선횟수	선거구		정당	성별	재석률	출석률	출석과 재석차
장제원	3선	부산	사상구	국민의힘	남	54.01%	93.62%	39.60%
이용호	재선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무소속	남	57.05%	96.08%	39.03%
권은희	3선	비례		국민의당	여	50.36%	89.36%	39.00%
김의겸	초선	비례		열린민주당	남	61.11%	100.00%	38.89%
홍준표	5선	대구	수성구을	무소속	남	39.60%	78.43%	38.83%
조경태	5선	부산	사하구을	국민의힘	남	46.72%	85.11%	38.39%
박덕흠	3선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무소속	남	51.09%	89.36%	38.27%
이태규	재선	비례		국민의당	남	59.12%	95.74%	36.62%

(7) 본회의 재석률 60%미만 의원(25명) (재석률 저조순)

의원명	당선횟수	선거구		정당	성별	재석률
윤상현	4선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무소속	남	30.87%
홍준표	5선	대구	수성구을	무소속	남	39.60%
김태호	3선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국민의힘	남	40.27%
이인영	4선	서울	구로구갑	더불어민주당	남	43.62%
송언석	재선	경북	김천시	무소속	남	46.72%
조경태	5선	부산	사하구을	국민의힘	남	46.72%
하태경	3선	부산	해운대구갑	국민의힘	남	48.91%
권성동	4선	강원	강릉시	국민의힘	남	49.66%
이탄희	초선	경기	용인시정	더불어민주당	남	49.66%
권은희	3선	비례	대표	국민의당	여	50.36%
권영세	4선	서울	용산구	국민의힘	남	51.09%
박덕흠	3선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무소속	남	51.09%
이상직	재선	전북	전주시을	무소속	남	51.43%
홍문표	4선	충남	홍성군예산군	국민의힘	남	51.82%
장제원	3선	부산	사상구	국민의힘	남	54.01%
김은혜	초선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국민의힘	여	54.74%
조수진	초선	비례		국민의힘	여	56.20%
황보승희	초선	부산	중구영도구	국민의힘	여	56.20%
윤영석	3선	경남	양산시갑	국민의힘	남	56.93%

의원명	당선회수	선거구		정당	성별	재석률
이용호	재선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무소속	남	57.05%
강기윤	재선	경남	창원시성산구	국민의힘	남	57.66%
우상호	4선	서울	서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	남	59.06%
이태규	재선	비례		국민의당	남	59.12%
박진	4선	서울	강남구을	국민의힘	남	59.85%
이명수	4선	충남	아산시갑	국민의힘	남	59.85%

5. 제21대 국회 1차년도 본회의 출석, 개의, 산회시 분석

가. 제21대 국회 1차년도 본회의 출석률이 100%인 의원은 98명

국회 본회의는 48회의 출석과 개회식 3회의 참석 등 51회의 출석통계를 보면 출석체크를 한 의원은 무소속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98명이었다.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원이었으며 정의당, 열린민주당, 무소속 의원 등이었다.

반면 본회의 출석률이 70%를 넘지 못한 의원은 4명이었다.

《본회의 출석률이 70% 미만인 의원》

의원명	당선회수	선거구		정당	본회의 출석률
이인영	4선	서울	구로구갑	더불어민주당	58.82%
윤상현	4선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무소속	64.71%
이탄희	초선	경기	용인시정	더불어민주당	64.71%

※ 이인영 의원은 통일부 장관 겸임.

나. 본회의 시작(개의) 시각을 비교적 잘 지킨 의원 5명

회의시작 시각을 잘 지킨 의원이 있는지 살펴보면, 제21대 국회에서 개의 시에 100% 재석한 의원은 모두 4명이었다. 개의시 재석 체크를 한 횟수는 48회 였는데, 회의 시작 시간에 자리를 잘 지킨 의원은 박병석 국회의장, 김민기 의원과 정필모 의원 그리고 홍성국 의원이었다.

《제21 국회 1차년도 회의시작(개의) 시간을 비교적 잘 지킨 의원》

의원명	당선회수	선거구		정당	개의참석횟수	개의의무횟수	개의시참석률
김민기	3선	경기	용인시을	더불어민주당	48	48	100.00%
박병석	6선	대전	서구갑	무소속	48	48	100.00%
정필모	초선	비례	대표	더불어민주당	48	48	100.00%
홍성국	초선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갑	더불어민주당	48	48	100.00%

다. 회의 종료(산회) 시각에 자리를 잘 지킨 의원은 5명

48회의 본회의 중 한번 산회 재석체크를 하지 않아(2021. 3. 24. 제385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47회 재석 체크를 하였는데 그 횟수를 조사해 본 결과, 김민기 의원이 47번 중에 47번 자리에 있어 100%를 달성하였으며, 10번 중 9번 이상 있었던 의원은 김민기 의원을 포함해서 박병석 국회의장, 민형배 의원, 정필모 의원, 김영호 의원 등 5명에 불과했다.

《회의 종료시(산회시)에 자리를 비교적 양호하게 지킨 의원》

의원명	당선회수	선거구		정당	산회참석횟수	산회의무횟수	산회시참석률
김민기	3선	경기	용인시을	더불어민주당	47	47	100.00%
민형배	초선	광주	광산구을	더불어민주당	45	47	95.74%
정필모	초선	비례		더불어민주당	45	47	95.74%
박병석	6선	대전	서구갑	무소속	44	47	93.62%
김영호	재선	서울	서대문구을	더불어민주당	43	47	91.49%

회의종료시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회의록에 남기면서 남아있는 의원들을 호명하기도 하였는데, 회의종료시에 재석체크를 10회 미만으로 한 의원은 5명이었다. 김의겸 의원은 6번 중 1번 재석체크를 하였다.

의원명	선수	선거구		정당	산회시(본회의 끝날 때)		
					재석횟수	의무횟수	산회참석률
윤상현	4선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무소속	5	47	10.64%
김의겸	초선	비례		열린민주	1	6	16.67%
홍준표	5선	대구	수성구을	무소속	8	47	17.02%
박덕흠	3선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무소속	8	43	18.60%
권은희	3선	비례		국민의당	9	43	20.93%

6. 본회의 중에 출석하지 못한 사정이 많았던 의원

가. 청가서(결근 사유서)를 많이 제출한 의원 : 5회 이상 6명

국회법 제32조³⁾에 근거하여, 의원은 사고로 인해서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울

- 3) **국회법** 제32조(청가 및 결석) ①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못한 때에는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외에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별활동비에서 그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신설 1994.6.28.>
- ③ 제1항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경우 청가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회 본회의 중 한 번이라도 청가한 의원은 총 139명이었으며, 전체 본회의 48회 중 5회 이상 청가서를 낸 의원은 16명이었다. 이인영 의원, 한정애 의원, 전해철, 권칠승 의원 등 국무위원 겸임 의원이 청가서를 많이 냈으며, 이인영 통일부 장관 겸임 의원을 제외하고는 이탄희 의원과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정정순 의원이 18회로 가장 많았다.

《청가를 많이 한(5회 이상) 의원 현황》

의원명	당선헬수	선거구		정당	청가횬수
이인영	4선	서울	구로구갑	더불어민주당	19
이탄희	초선	경기	용인시정	더불어민주당	18
정정순	초선	충북	청주시상당구	더불어민주당	18
윤상현	4선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무소속	17
송재호	초선	제주	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	11
한정애	3선	서울	강서구병	더불어민주당	8
우원식	4선	서울	노원구을	더불어민주당	7
윤영덕	초선	광주	동구남구갑	더불어민주당	7
황보승희	초선	부산	중구영도구	국민의힘	6
조오섭	초선	광주	북구갑	더불어민주당	6
송갑석	재선	광주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5
송영길	5선	인천	계양구을	더불어민주당	5
전해철	3선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더불어민주당	5
이종배	3선	충북	충주시	국민의힘	5
용혜인	초선	비례	비례대표	기본소득당	5
권칠승	재선	경기	화성시병	더불어민주당	5

나. 본회의 중에 출장을 간 의원

제21대 국회 본회의 중에 출장을 간 의원은 모두 4명이었는데, 제38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참석하지 못하였다. 출장의원은 김상희 국회부의장, 이규민 의원, 이명수 의원, 인재근 의원이었다. 이 출장의원들은 2차 본회의의 법안처리과정에 격리 권고로 참석하지 못했다.

7. 제21대 국회 본회의의 개황 :

회의 횬수는 비슷, 감정싸움으로 17개 본회의에서 장내 소란

제21대 국회 제1차년도는 필리버스터 본회의로 인해 본회의시간이 200시간이

넘었다. 본회의의 개의시간이 제대로 안 지켜져 여야간의 합의에 많은 난관이 있었음을 보여 주었다. 10시나 오후 2시가 아닌 시간대에 본회의가 개의된 것이 11회나 되었다.

회의 중 막말소동 및 끼어들기도 심각해 장내 소란이 17개 본회의에서 있었다.

< 제21대 국회 1차년도 대표적으로 장내 소란이 있었던 본회의 >

회기	차수	회의일	주요안건 내지 장내소란 발생시
380	4	2020.07.22.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380	5	2020.07.23.	경제에 관한 질문
380	6	2020.07.24.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380	8	2020.08.04.	법안처리
382	4	2020.09.14.	정치에 관한 질문
382	5	2020.09.15.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382	7	2020.09.17.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382	9	2020.09.24.	5분자유발언 시
382	10	2020.10.28.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382	14	2020.12.02.	5분자유발언
382	15	2020.12.0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처리시
383	1	2020.12.10.	무제한 토론시
383	2	2021.01.08.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실태, 백신수급 상황 및 접종시기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384	4	2021.02.04.	비교섭단체(정의당) 대표발언
386	1	2021.04.19.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386	2	2021.04.20.	경제에 관한 질문
387	1	2021.05.13.	개의 및 의사진행발언시

《2000년 이후 역대 국회의 본회의 회의시간》

국회	제16대국회 (2000.5.30.~2004. 5. 29)	제17대 국회 (2004.5.30.~2008.5.29)	제18대국회 (2008. 5.30~2012.5.29.)	제19대 국회 (2012. 5.30~2016. 5. 29)	제20대 국회 (2016.5.30.~2020.5.29.)	제21대 국회 (2020.5.30.~21.5.29)
본회의 회의시간	765시간 17분	707시간 4분	719시간 44분	836시간 40분	514시간 18분	203시간 28분
의원정수	273인	299인	299인	300인	300인	300인
주의	1. 지난국회의 본회의 회의시간은 역대 국회 경과보고서에 의함 2. 20대 국회 본회의 회의시간은 개회식을 포함한 시간이며, 산회가 없는 경우 회의중지시까지의 시간만을 회의시간에 포함시킴					

II. 제21대국회 1차년도(21-1), 상임위 전체회의 출석률 : 7점 만점에 6.27점

법률연맹, 21대 국회 1차년도 16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총 431회) 상황 전수조사 발표

국방위 등 6개 상임위 - “월 2회 이상 개회의무(국회법 49조의2②) 위반”

- ▣ 원 구성 파행으로 379회 임시회 중 상임위에서 모두 30회 ‘국민의힘이 빠진’ 반쪽회의강행
- ▣ 국회 본회의 출석률⁴⁾ 보다 --- 낮은 상임위원회 출석률(89.54%)
- ▣ 상임위 무더기 법안상정/심사 - 보건복지위(위원장 김민석) 399개 법안 처리
- ▣ 장관 겸임 의원은 상임위 회의참석을 못하므로 국회법(39조)따라 상임위원은 사임해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및 경과보고서 채택 등 19개 회의에서 여·야간 막말막장

“ 회의(會議)의 ①개회와 ②출석과 ③평등 절차는 독재/횡포를 예방척결하는 최소한의 수단이다. F. A. 하이에크 ”

- ▣ 제21대국회 법사위(위원장 윤호중)가 42회 회의할때, 국방위(위원장 민홍철)는 21회 회의
- ▣ 제21대국회 법사위(위원장 윤호중)가 127시간회의할때, 농림위(위원장 이개호)는 44시간 회의
- ▣ 제21대 국회 국회의원의 상임위 회의별 전체회의 출석률 : 89.54%
- ▣ 다선의원 일수록 상임위 출석에 등한/무책임 - 4선의원 19명의 평균 출석률 : 76.75%
- ▣ 교섭단체별 상임위 출석률 : 더불어민주당(92.56%) > 국민의힘(85.24%)
- ▣ 법사위는 전체 42회 회의중, 무려 14회나 ‘국민의힘’ 참석 없는 상임위 전체회의 강행

1. 16개 상임위 전체회의 총 431회 전수조사

사법/입법감시 법률전문 NGO/NPO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총재 김대인)는 제21대 국회 1차년도(2020.5.30.~2021.5.29.)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상임위원회 총431회 전체회의 활동을 조사하여 상임위 전체회의 출석률을 발표했다.

상임위원회 -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여러 의원들로 구성된 집단으로,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제21대 국회는 17개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소관 안건(법률안, 예산안, 결산 등)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의 판단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국회법 제49조의 2의 제2항 - 위원회(소위원회는 제외한다)는 매월 2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12.22.> 1. 해당 위원회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실시기간 2. **그밖에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기간

국회법 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제4항 -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

4) 국민의힘 등 파행 본회의 등을 고려한 의원별 본회의 출석률은 94.66%이고, 회의별 재적의원 대비 출석의원수를 평균한 본회의별 평균 의원출석률은 91.66%임

2. 상임위원회 회의시간 및 출석률 조사결과

(1) 제21대 국회 1차년도 16개 상임위《국회법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중 정보위 제외》 상임위《국회법 제36조(상임위원회의 직무)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는 **총 431회 전체회의를 하였으며, 시간으로는 1012시간 52분**(실제 회의시간으로 정회시간 제외) **회의를 하였다.** 1회당 평균 2시간 21분꼴로 회의를 하였고, 각 상임위별 1년 동안 평균 26.94회 정도 회의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1차 년도에 가장 많은 시간 회의를 한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로 **42회 127시간 47분 회의를 하였고, 최소시간 회의를 한 위원회는 24회 44시간 35분 회의를 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였다.

(3) 분석대상 299명의 의원별 평균 상임위 출석률은 89.54%이었으며, 100% 출석률을 기록한 의원은 모두 70명이었다.

《제21대 국회 1차년도 상임위 전체회의 출석률 분포》

출석률분포	100%	90%대	80%대	70%대	60%대	60%미만	계
의원수	70	121	63	26	12	7	299

(4)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률(89.54%)이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석률(94.66%)보다도 저조한 것은 여전하였다.

(5)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는 **소관부처 업무보고나 현안보고**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그다음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예산처리** 등이었다. **법안심사의 경우에는 한번에 100개가 넘는 법안을 상정해 놓고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건복지위의 경우에는 한번에 399개 법안(2020.11.17.)을 상정해 법안소위에 회부하였다** (각 상임위원별 상정건수 많은 회의일 공개 - 9쪽 참조).

(6) **상임위원회**는 원 구성 파행으로 제379회 임시회 동안 **법사위 6회, 기획재정부 위 3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3회 등 30회 반쪽**(교섭단체인 미래통합당의 불참) 상임위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법사위의 경우에는 1년 동안 42번 회의 중 14번이 국민의힘 의원이 불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반쪽 회의였다.

(7)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등이 열린 상임위원회에서는 여/야간의 입장차와 날카로운 대립으로 “장내소란” 등이 19회 빚어졌다. **법제사법위원회**의 2020년 12월 8일 제382회 정기회 제14차 전체회의에서는 **공수처법, 상법 등 쟁점법안** 처리로 3차례의 장내 소란이 빚어졌다.

(8) **국회법 제49조 2의 제2항**에는 “위원회는 월 2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나, 달리 정할 수 있는 겸임 상임위원인 국회운영과 여성가족위를 제외하더라도 **국방위(21회)**, 교육위와 **보건복지위(22회)**, 기획재정위, **정무위와** 외교통일위(23회)가 **국회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이는 국정감사기간 중의 증인채택을 위한 상임위 회의(국감직전 및 도중 외교통일과 여성가족위 제외 14개 상임위 40회 회의)까지 포함된 것으로 **평상시 상임위 활동이 부실했음**을 나타낸다.

3. 국회윤리규범 준수 절실

이번 조사를 총괄한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김대인 총재는 “국회법 32조와 국회윤리규범 제14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국회의원의 기본적이며 중요한의무가 회의출석”이라며,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국회에서 상임위 출석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직무유기”** 라고 강조했다.

4. 제21대 국회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률 분석

(1)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률 총괄 : 89.54%

제21대 국회 1차년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률은 89.54%였다.

상임위원의 출석률이 가장 높은 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로 94.70%였으며, 가장 저조한 위원회는 원로위원회라고 불리는 외교통일위원회로 83.44%였다. 반쪽 회의가 많았던 법제사법위원회의 출석률도 84.30%로 저조하였다.

< 2021년도 1차년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률 현황 >

국회법(제37조)순				출석률저조 위원회순			
위원회	정원	회의수	평균출석률	위원회	정원	회의수	평균출석률
국회운영위원회	28	12	89.05%	외교통일위원회	21	23	83.44%
법제사법위원회	18	42	84.30%	법제사법위원회	18	42	84.30%
정무위원회	24	23	91.11%	기획재정위원회	26	23	86.79%
기획재정위원회	26	23	86.79%	국방위원회	17	21	87.11%
교육위원회	16	22	93.4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0	35	87.2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	27	91.6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6	35	88.93%
외교통일위원회	21	23	83.44%	국회운영위원회	28	12	89.05%
국방위원회	17	21	87.11%	환경노동위원회	16	38	90.13%
행정안전위원회	22	37	90.31%	여성가족위원회	17	16	90.2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6	35	88.93%	행정안전위원회	22	37	90.3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9	24	93.64%	정무위원회	24	23	91.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0	35	87.2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	27	91.67%
보건복지위원회	24	22	94.70%	국토교통위원회	30	31	92.67%

국회법(제37조)순				출석률저조 위원회순			
위원회	정원	회의수	평균출석률	위원회	정원	회의수	평균출석률
환경노동위원회	16	38	90.13%	교육위원회	16	22	93.47%
국토교통위원회	30	31	92.6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9	24	93.64%
여성가족위원회	17	16	90.28%	보건복지위원회	24	22	94.70%
계/평균	344	26.94	89.54%	계/평균	344	26.94	89.54%

(2) 상임위원회 출석률의 구간별 의원분포

제21대 국회 1차년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률을 보면, 100% 출석률을 보인 의원이 70명으로 전체 299명의 23.41%였다. 90%대는 121명으로 전체의 40.47%를 차지하였다.

70%미만 의원은 19명이었다. 10번 중 2번 이상 결석한 의원은 45명이나 되었다.

< 제21대 국회 1차년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률 분포 >

구분	의원수	비율
100% 출석	70	23.41%
90%이상~100%미만	121	40.47%
80%이상~90%미만	63	21.07%
70%이상~80%미만	26	8.70%
60%이상~70%미만	12	4.01%
50%이상~60%미만	5	1.67%
40%이상~50%미만	0	0.00%
40%미만	2	0.67%
계	299	100.00%

(3) 교섭단체별 상임위 출석률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높아(92.56%)

교섭단체별로 분석해 본 결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 전체회의 출석률이 92.56%로 국민의 힘(85.24%)나 비교섭(85.79%)보다 7%p정도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상임위원장의 단독 진행권 행사 등 회의진행의 영향도 국민의힘이나 비교섭 의원들의 불출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법사위(위원장 윤호중)의 회의록을 분석해 보면 42회 중 14회(33.33%)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으로 운영되었다.

< 제21대 국회 1차년도 교섭단체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률 >

구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	평균
평균출석률	92.56%	85.24%	85.79%	89.54%
의원수	174	102	23	299

(4) 당선 횟수별 재선의원 73명의

상임위 전체회의 평균 출석률이 92.38%로 가장 높아

당선 횟수별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률을 살펴본 바, 재선 의원의 상임위원회 출석률이 92.38%로 가장 높았다.

초선 의원의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률이 91.79%로 평균보다 2%p 높았다. 3선 의원은 84.87%였고, 19명의 4선 의원은 76.75%로 70%대에 머물렀다.

5선 이상 13명의 평균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률은 81.06%로 전체의원 평균 출석률보다 크게 저조하여 10번에 8번 간신히 출석하였다.

《제21대 국회 1차년도(21-1) 당선횟수별 전체회의 출석률 현황》

구분	초선	재선	3선	4선	5선이상	평균/계
평균출석률	91.79%	92.38%	84.87%	76.75%	81.06%	89.54%
의원수	152	73	42	19	13	299

(5) 지역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률 :

출석률 최저는 울산출신 국회의원(84.19%)

지역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률을 비교해 보면, 세종출신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률이 98.3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전라남도 97.55%였으며, 광주광역시 8명의 상임위 전체회의 평균 출석률도 95.63%로 높았다.

반면, 울산지역 6명의 의원의 상임위 출석률이 84.19%로 많이 저조하였고, 그 다음 경상남도(84.35%), 대구광역시(85.11%) 순으로 저조하였다.

《제21대 국회 1차년도 지역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률 순위》

출석률 높은 순			출석률 낮은 순		
광역시도	의원수	평균출석률	광역시도	의원수	평균출석률
세종특별자치시	2	98.39%	울산광역시	6	84.19%
전라남도	10	97.55%	경상남도	16	84.35%
광주광역시	8	95.63%	대구광역시	12	85.11%
전라북도	10	94.17%	부산광역시	18	85.30%
경기도	59	92.44%	강원도	8	85.82%
인천광역시	13	91.15%	충청남도	11	86.50%
비례대표	47	90.90%	경상북도	13	86.63%
충청북도	8	88.74%	대전광역시	6	87.20%
제주특별자치도	3	88.05%	서울특별시	49	87.96%
서울특별시	49	87.96%	제주특별자치도	3	88.05%
대전광역시	6	87.20%	충청북도	8	88.74%
경상북도	13	86.63%	비례대표	47	90.90%

출석률 높은 순			출석률 낮은 순		
광역시도	의원수	평균출석률	광역시도	의원수	평균출석률
충청남도	11	86.50%	인천광역시	13	91.15%
강원도	8	85.82%	경기도	59	92.44%
부산광역시	18	85.30%	전라북도	10	94.17%
대구광역시	12	85.11%	광주광역시	8	95.63%
경상남도	16	84.35%	전라남도	10	97.55%
울산광역시	6	84.19%	세종특별자치시	2	98.39%

5. 제21대 국회 1차년도 상임위 전체회의 현황

(1) 제21대 국회 1차년도 상임위원회의 전체회의 회의횟수 현황

국회법(제37조)순			회의차수가 적은 순		
상임위원회	위원장	회의수	상임위원회	위원장	회의수
국회운영위원회	김태년	12	국회운영위원회	김태년	12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42	여성가족위원회	정춘숙	16
정무위원회	윤관석	23	국방위원회	민홍철	21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23	교육위원회	유기홍	22
교육위원회	유기홍	22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22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원욱	27	정무위원회	윤관석	23
외교통일위원회	송영길	23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23
국방위원회	민홍철	21	외교통일위원회	송영길	23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3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2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35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원욱	2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24	국토교통위원회	진선미	3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학영	3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학영	35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35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38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37
국토교통위원회	진선미	31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38
여성가족위원회	정춘숙	16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42
계		431	계		431

(2) 제21대 국회 1차년도 회의시간(정회 등 시간 제외)

국회법(제37조)순			회의시간이 적은 순		
상임위원회	위원장	회의시간	상임위원회	위원장	회의시간
국회운영위원회	김태년	23:35:00	국회운영위원회	김태년	23:35:00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127:47:00	여성가족위원회	정춘숙	24:52:00
정무위원회	윤관석	52:32: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44:35:00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62:14:00	교육위원회	유기홍	49:15:00
교육위원회	유기홍	49:15:00	정무위원회	윤관석	52:32:00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원욱	67:58:00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53:15:00

국회법(제37조)순			회의시간이 적은 순		
상임위원회	위원장	회의시간	상임위원회	위원장	회의시간
외교통일위원회	송영길	53:41:00	외교통일위원회	송영길	53:41:00
국방위원회	민홍철	58:33:00	국방위원회	민홍철	58:33:00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76:16:00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62:14: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69:03:00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원욱	67:58: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44:35: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69:03: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학영	73:16: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학영	73:16:00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53:15:00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76:16:00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78:46:00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78:46:00
국토교통위원회	진선미	97:14:00	국토교통위원회	진선미	97:14:00
여성가족위원회	정춘숙	24:52:00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127:47:00
계		1012:52:00	계		1012:52:00

(3) 제21대 국회 1차년도 상임위원회 장내 소란

회의 중 교섭단체가 의견 충돌이나 끼워들기로 장내소란이 벌어진 회의를 살펴보면 총 19건이며 한 회의에서 여러 차례 장내 소란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제21대 국회 1차년도 상임위원회 장내소란 현황>

회기	차수	회의일	위원회	안건
380	2	2020.07.28.	기획재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홍익표 위원 외 1인 서면동의)
380	1	2020.07.28.	국토교통위원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380	1	2020.07.29.	국회운영위원회	개의
380	3	2020.08.03.	법제사법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81	1	2020.08.25.	법제사법위원회	2019회계연도 결산
381	1	2020.08.25.	국회운영위원회	2019회계연도 결산
382	3	2020.09.16.	국방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서욱) 인사청문회
382	4	2020.09.18.	국방위원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인사청문회
382	8	2020.12.07.	정무위원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김병욱 위원 서면동의)
382	14	2020.12.08.	법제사법위원회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
382	14	2020.12.08.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82	14	2020.12.08.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383	2	2020.12.23.	국토교통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383	3	2020.12.24.	국토교통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383	4	2020.12.28.	국토교통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계속)
383	5	2021.01.25.	법제사법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 (법무부장관 박범계)

회기	차수	회의일	위원회	안건
384	1	2021.02.05.	외교통일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 (외교부장관 정의용)
384	3	2021.02.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387	2	2021.05.1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4) 무더기 법안상정 처리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부처의 업무보고나 현안보고 그리고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등이었다. 그다음으로 예산심사였다. 상임위 전체회의에서의 법안심사는 무더기 법안 상정 처리 관행이 여전하였다.

한번에 100개 넘는 법안을 상정해 놓고, 발의의원의 제안설명이 있는 경우 그것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주로 서면으로 대체)와 찬반토론이 있는데, 보건복지위원회의 제382회(정기회) 제9차(2020년11월17일)에서는 법안을 포함하여 405개 안건이 처리되었는데, 398개 법안을 상정처리하면서, 1시간도 되지 않아 법안 1소위와 법안2소위에 넘기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제21대 국회 1차년도 상임위원회별 상정건수가 가장 많은 회의일 현황》

위원회	집회 차수 (일자)	상정처리된 안건수
국회운영위원회	제382회 제2차(2020년09월24일)	112
법제사법위원회	제385회 제1차(2021년03월16일)	167
정무위원회	제384회 제2차(2021년02월17일)	147
기획재정위원회	제382회 제7차(2020년11월06일)	347
교육위원회	제384회 제1차(2021년02월16일)	125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제384회 제1차(2021년02월01일)	99
외교통일위원회	제382회 제3차(2020년09월28일)	52
국방위원회	제382회 제9차(2020년11월09일)	76
행정안전위원회	제382회 제14차(2020년11월17일)	21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384회 제4차(2021년02월24일)	1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386회 제1차(2021년4월27일)	12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384회 제3차(2021년02월23일)	161
보건복지위원회	제382회(정기회) 제9차(2020년11월17일)	405(399개 법안)
환경노동위원회	제384회 제2차(2021년02월16일)	112
국토교통위원회	제382회(정기회) 제1차(2020년09월08일)	135
여성가족위원회	제382회(정기회) 제6차(2020년12월02일)	54

(5) 국감직전 및 도중 상임위 회의현황

2020년도 국정감사의 시작 전 또는 국정감사 도중에 위원회 회의를 연 경우는 모두 14개 상임위원회에서 40회였다.

외교통일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만 하지 않았다.

운영위원회는 11월 4일 국정감사 중 회의를 열어 국회예산정책처장(임익상) 임명동의와 국회입법조사처장(김만흠) 임명동의를 처리하였다.

환경노동위원회가 6차례로 가장 많이 회의를 하였고, 다음으로 보건복지위원회가 5차례 회의를 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대검찰청 국정감사시 자료제출 요구건으로 한 번 상임위 회의를 하였으며,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및 철회의 건으로 한번 회의를 하였다.

정무위원회는 2020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으로 1회 회의를 하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정감사 중 문화방송에 대한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았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연합뉴스에 대한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았다.

후쿠시마 원전수방류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0월 26일 종합감사 중 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23일 종합감사 중 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안전한 처리 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행정안전위원회는 10월 7일 국정감사 일정 변경을 위한 회의를 열었고, 10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노정희)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였다.

국토교통위원회는 10월 7일 국정감사 직전 당일 국정감사를 연기하는 국정감사 일정 변경안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 2020년도 국정감사 도중(직전 포함) 상임위 회의 개최 현황 >

위원회	횟수	위원회	횟수	위원회	횟수
국회운영위원회	1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4
법제사법위원회	1	국방위원회	2	보건복지위원회	5
정무위원회	1	행정안전위원회	4	환경노동위원회	6
기획재정위원회	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4	국토교통위원회	2
교육위원회	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	계	40

III. 제20대국회 3차년도(20-3), 국회의원의 법안투표(참여)성적 :
10점 만점에 8.11점

법률연맹, 국회(21-1) 본회의 전자표결(총822회)의 법안투표율 전수조사 발표

제21대 국회 1차년도 국회의원(전원)의 법안투표율 성적 B 학점(81.02%)

- ▣ 국회 법안투표율⁵⁾ 성실참여 의원(90%이상-128명), 낙제의원(60%미만-44명)
- ▣ 법안투표율 전국 1위(100%) --- 김민기 의원(민), 김영호 의원(민), 어기구 의원(민)
- ▣ 국민의힘 투표율은, 일방적(?)국회운영에 반발하여 법안투표에 보이콧한 탓도 크다

《국회 본회의는 통법부로 전략!! 법안별 찬성율 93.95%, 찬반토론 21개 법안도 부결은 없어》

국회의원이 법안표결에 불참하는 것은 “국익과 국민권익을 위한” 입법책임을 방기한 행태

- ▣ 제21대 국회(21-1) 의원의 본회의 출석률은 94.66%인데, 법안투표율은 81.02%로 저조하다.
- ▣ 다선의원 일수록 법안투표에 불성실/무책임 - 4선의원 - 19명 평균 법안투표율 69.70%
- ▣ 지역별 투표율 1위 의원 : 서울(김영호) 부산(이현승, 정동만) 대구(류성걸) 인천(윤관석)
《비례대표도 1위》 광주(조오섭) 대전(박영순) 울산(서범수) 세종(홍성국)
경기(김민기) 강원(허영) 전북(한병도) 전남(서동용, 서삼석)
충북(임호선) 충남(어기구) 경북(이만희) 경남(김정호)
제주(위성곤) 비례대표(김병주, 전용기) 각 의원
- ▣ 교섭단체 핵심당직자 법안투표율은 상대적으로 저조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42.82%)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62.17%)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24.82%)
- ▣ 교섭단체별 법안투표율 : 더불어민주당(87.86%), 국민의힘(72.50%), 비교섭(67.65%)

1. 총 882회 전자표결 투표 횟수 전수조사

입법/사법감시 법률전문 NGO/NPO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총재 김대인)는 제 21대 국회 1차년도(2020.5.30.~2021.5.29)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표결을 한 총 822 개 법률안(부결된 수정안 1개도 포함) 중 300명 국회의원⁶⁾의 의원별 법안투표율

5) 법안투표율 : 본회의에서 전자투표 표결 처리된 의안에 대해 국회의원이 표결을 한 건수의 비율
(국회의원 표결참여건수/ 의원별 참여해야할 본회의 표결처리건수×100)

국회법 제112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국회법 제111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① 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기명·무기명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②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국회법 제115조(회의록) ① 국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적는다.

14. 기명투표·전자투표·호명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을 국회 회의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제21대 1차년도 국회의원의 법안투표율은 81.02%이며, 쟁점법안에 대한 강행처리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표 관리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의 법안투표율은 87.86%로 높았다고 발표했다.

2. 제21대 국회 1차년도 국회의원의 법안투표율 분석

(1) 법안투표율 90%이상 의원은 128명이었고, 그 다음으로 80%대가 70명, 70%대가 37명이었다. 60%대는 21명이었고, 50%대 15명, 40%대 12명, 40% 미만 17명이었다.

《제21대국회 1차년도 국회의원의 법안투표율 분포 현황》

투표율	의원수	투표율	의원수
90%이상	128	50%이상~60%미만	15
80%이상~90%미만	70	40%이상~50%미만	12
70%이상~80%미만	37	40%미만	17
60%이상~70%미만	21	계	300

(2) 교섭단체 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높은 투표율로 87.86%였다. 이어서 국민의힘이 72.50%였고, 무소속과 비교섭단체는 67.65%로 가장 저조하였다.(당표시·통계는 2021. 5.29 현재 기준)

《제21대 국회 1차년도 교섭단체별 법안투표율 현황》

구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	평균
법안투표율	87.86%	72.50%	67.65%	81.02%
의원수	174	102	24	300

(3) 당선횟수별로 보면 5선 의원이 가장 저조하여 평균투표율이 68.63%에 불과했다. 초선의원 157명의 법안투표율은 86.8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재선의원은 79.81%로 재선의원부터는 평균(81.02%)을 밑돌았다.

(4) 코로나19방역지침에 따라 법안표결 본회의에 청가를 한 의원은 총 8명(김상희 국회부의장은 2번)이었는데, 법안표결은 국회의원만의 고유권한이며, 헌법(제40조,49조,53조)에 부여된 국회의원의 법안의결권 행사가 정부의 방역권고지침보다 우선한다고 보아 이를 포기한 의원들의 법안투표율은 조정하지 않았다.

(5) 제21대 국회 1차 년도에서도 3대 쟁점법안(남북관계법, 국정원법, 공수처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있었으나, 국회(의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

6) 분석대상 국회의원 300명(김진애 전의원의 법안투표율 31.74%(의무횟수 775회 중 246회 표결)은 제외함)

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필리버스터** (filibuster)의 성격은 발휘되지 못했고, 무제한 토론(3건법안, 국회 § 106의2)을 포함해서 전체 표결법안(822건) 중 21건만(2.56%) 표결시 찬반토론(국회 § 106조)을 하였고, 대부분 찬반토론도 없이 무더기로 법안을 처리하였다. 찬반토론으로 부결된 법안은 없었다. 법안에 대한 평균 찬성률은 기권이나 반대없이 100%찬성한 20개 법률안을 포함해 93.95%인 반면, 평균 반대율은 1.75%에 지나지 않았고, 법안기권율은 4.30%이었다.

3. 법안표결 불참은 무책임한 입법권 포기

이번 조사를 총괄한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총재 김대인)는 “국회의원이 법안 표결에 불참하는 것은 무책임한 입법권 포기행태일 뿐더러, 일시에 100여개씩 처리되는 내용도 모르는 법안의 졸속처리는 즉시 지양되어야할 적폐” 라고 강조했다.

4. 제21대 국회 교섭단체별 상위 10위 의원과 지역별 국회의원 법안투표율 1위 의원

(1)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안투표율 상위 10위

의원명	당선횟수	선거구		성별	법안투표율	법안표결참여횟수
김민기	3선	경기	용인시을	남	100.00%	822
김영호	재선	서울	서대문구을	남	100.00%	822
어기구	재선	충남	당진시	남	100.00%	822
박용진	재선	서울	강북구을	남	99.88%	821
서동용	초선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남	99.88%	821
서삼석	재선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남	99.88%	821
김철민	재선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남	99.76%	820
조오섭	초선	광주	북구갑	남	99.76%	820
이정문	초선	충남	천안시병	남	99.64%	819
임오경	초선	경기	광명시갑	여	99.64%	819
한병도	재선	전북	익산시을	남	99.64%	819

(2) 국민의힘 소속 법안투표율 상위 10위

의원명	당선횟수	선거구		성별	법안투표율	법안표결참여횟수
윤창현	초선	비례대표		남	95.99%	789
이현승	3선	부산	부산광역시진구을	남	95.86%	788

의원명	당선헬수	선거구		성별	법안투표율	법안표결참여횟수
정동만	초선	부산	기장군	남	95.86%	788
정찬민	초선	경기	용인시갑	남	95.74%	787
이만희	재선	경북	영천시청도군	남	95.62%	786
서범수	초선	울산	울주군	남	94.89%	780
김형동	초선	경북	안동시예천군	남	94.40%	776
임이자	재선	경북	상주시문경시	여	93.31%	767
류성걸	재선	대구	동구갑	남	92.82%	763
하영제	초선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남	92.82%	763

(3) 비교섭단체 법안투표율 상위의원

의원명	선수	선거구	정당	성별	법안투표율	법안표결참여횟수
장혜영	초선	비례대표	정의당	여	99.39%	817
강민정	초선	비례대표	열린민주당	여	98.54%	810
이은주	초선	비례대표	정의당	여	98.54%	810

(4) 지역별/선거구별 법안투표율 1위 의원 (공동 1위 표시)

지역	의원명	당선헬수	선거구		정당	성별	법안투표율	법안표결참여횟수
서울특별시	김영호	재선	서울	서대문구을	더불어민주당	남	100.00%	822
부산광역시	이현승	3선	부산	부산광역시진구을	국민의힘	남	95.86%	788
부산광역시	정동만	초선	부산	기장군	국민의힘	남	95.86%	788
대구광역시	류성걸	재선	대구	동구갑	국민의힘	남	92.82%	763
인천광역시	윤관석	3선	인천	남동구을	더불어민주당	남	99.51%	818
광주광역시	조오섭	초선	광주	북구갑	더불어민주당	남	99.76%	820
대전광역시	박영순	초선	대전	대덕구	더불어민주당	남	97.45%	801
울산광역시	서범수	초선	울산	울주군	국민의힘	남	94.89%	780
세종특별자치시	홍성국	초선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갑	더불어민주당	남	99.03%	814
경기도	김민기	3선	경기	용인시을	더불어민주당	남	100.00%	822
강원도	허영	초선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더불어민주당	남	94.89%	780
전라북도	한병도	재선	전북	익산시을	더불어민주당	남	99.64%	819
전라남도	서동용	초선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더불어민주당	남	99.88%	821
	서삼석	재선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더불어민주당	남	99.88%	821
충청북도	임호선	초선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더불어민주당	남	94.53%	777
충청남도	어기구	재선	충남	당진시	더불어민주당	남	100.00%	822
경상북도	이만희	재선	경북	영천시청도군	국민의힘	남	95.62%	786
경상남도	김정호	재선	경남	김해시을	더불어민주당	남	94.40%	776
제주특별자치도	위성곤	재선	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남	97.93%	805
비례대표	김병주	초선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남	99.51%	818
	전용기	초선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남	99.51%	818

5. 제21대 국회 1차년도 국회의원의 법안투표율 세부 분석

(1) 10건 중 4건도 투표하지 않은 의원이 17명

국회법 제112조 제1항 전자표결에 부쳐진 법률안에 대해 국회의원의 법안투표율을 분석해 본 결과, 10건 중 4건도 참여하지 않은 의원이 17명으로 조사되었다.

17명의 의원 중 국무위원 겸임 의원은 이인영 의원, 한정애 의원, 황희 의원이었고, 법안투표율이 저조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이 4명, 무소속 의원이 3명이었고, 국민의당 1명, 나머지 9명은 국민의 힘 소속의원이었다. 정정순 의원의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 수감된 경우였다.

《제21대 국회 1차년도 법안투표율 40%미만 의원 현황》

의원명	당선헌수	선거구		정당	법안투표율	투표횟수	의무투표횟수
이인영	4선	서울	구로구갑	더불어민주당	0.49%	4	822
박덕흠	3선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무소속	9.37%	77	822
송언석	재선	경북	김천시	무소속	15.09%	124	822
김태호	3선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국민의힘	15.33%	126	822
윤상현	4선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무소속	18.73%	154	822
윤영석	3선	경남	양산시갑	국민의힘	22.14%	182	822
주호영	5선	대구	수성구갑	국민의힘	24.82%	204	822
권은희	3선	비례대표		국민의당	26.16%	215	822
정정순	초선	충북	청주시상당구	더불어민주당	28.59%	235	822
하태경	3선	부산	해운대구광역시갑	국민의힘	32.12%	264	822
김석기	재선	경북	경주시	국민의힘	32.97%	271	822
김은혜	초선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국민의힘	35.28%	290	822
윤한홍	재선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국민의힘	37.10%	305	822
장제원	3선	부산	사상구	국민의힘	37.59%	309	822
김태흠	3선	충남	보령시서천군	국민의힘	38.08%	313	822
한정애	3선	서울	강서구병	더불어민주당	39.29%	323	822
황희	재선	서울	양천구갑	더불어민주당	39.66%	326	822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표결에 참여한 4개 법률안

의결일자	의안번호	의원명	표결내용
2020-12-14	210621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찬성
2020-12-13	2106221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찬성
2020-12-10	21062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찬성
2020-12-10	21062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수정안)	반대

**(2) 당선횟수별 법안투표율은 초선의원(86.87%)이 가장 높고,
당선횟수가 높을수록 낮아져**

초선 152명의 법안투표율 평균이 86.87%로 가장 높고, 재선의원(73명)의 투표율은 79.82%, 3선의원(42명)의 법안투표율은 71.21%이었다.

4선 의원(19명)의 법안투표율은 69.70%로 낮고, 5선이상 의원(14명)의 투표율은 68.63%였다. 지난 제20대국회와 같이 법안투표율은 당선횟수가 증가할수록 저조하였다.

《제21대 국회 1차년도 국회의원 법안투표율 당선횟수별 현황》

당선횟수	초선	재선	3선	4선	5선이상	평균
법안투표율	86.87%	79.81%	71.21%	69.70%	68.63%	81.02%
의원수	152	73	42	19	14	300

(3) 교섭단체별 법안투표율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평균이 87.86%로 가장 높아

더불어민주당의 법안투표율은 평균 87.86%로 전체 평균 81.02%보다 높았다. 제21대 국회 1차년도에서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법안처리를 많이 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법안투표율은 평균 72.50%로 많이 저조하여 법안표결 불참 등의 강수를 두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제21대 국회 1차년도 법안투표율 교섭단체별 현황》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	평균
법안투표율	87.86%	72.50%	67.65%	81.02%
의원수	174	102	24	300

(4) 지역별 국회의원의 법안투표율 :

최고 세종(98.36%) 하위 경남(63.25%)

선거구별 국회의원의 법안투표율을 분석해보면, 최고의 법안투표율은 세종자치도이며, 2위는 전라남도로 95.86%였다. 그 다음으로 3위는 광주광역시가 94.81%였다. 비례대표 출신 국회의원 47명의 법안투표율은 84.97%로 평균보다 2%p가량 높았다.

반대로 최악의 법안투표율은 경남지역으로 경남출신 국회의원의 법안투표율이 63.25%로 1차년도에서 제일 저조하였다. 그 뒤는 충북(67.81%), 대구(70.11%)의 순으로 낮았다.

《제21대 국회 1차년도 국회의원의 법안투표율 선거구별 현황》

지역별	법안투표율	의원수
세종특별자치시	98.36%	2
전라남도	95.86%	10
광주광역시	94.81%	8
전라북도	87.55%	10
경기도	86.32%	59
비례대표	84.97%	47
인천광역시	83.97%	13
서울특별시	81.24%	49
울산광역시	79.93%	6
제주특별자치도	78.26%	3
충청남도	77.14%	11
대전광역시	75.37%	7
강원도	74.86%	8
부산광역시	73.53%	18
경상북도	73.01%	13
대구광역시	70.11%	12
충청북도	67.81%	8
경상남도	63.25%	16
평균/계	81.02%	300

(5) 제21대 국회 1차년도 투표성향 분석 : 법안별 평균 찬성률 93.95%

법안 찬성건수 1위는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안 반대건수 1위는 김웅 의원(국민의힘)

표결 기권건수 1위는 정경희 의원(국민의힘)

822건의 법안표결 과정에서 법안별 평균찬성률은 93.95%, 평균 반대율은 1.75%, 평균 기권율은 4.30%였다. 표결참여 의원이 100% 찬성을 한 법안은 20개였고, 반대가 없는 법안은 341개, 반대의원이 1명이었던 법안은 127개였다.

표결과정에서 찬성표를 가장 많이 던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으로 819개 법안에 대해 찬성을 하였고, 한병도 의원과 윤관석 의원은 뒤를 이어서 817건에 대해 찬성을 하였다. 이들 의원이 반대한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주호영 의원 등 103인 발의)이었다. 이 수정안은 반대 187명으로 부결되었다.

표결과정에서 반대건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국민의힘 김웅 의원으로 131개 법안에 대해 반대하였고, 박대출 의원은 119개 법안, 한기호 의원은 117개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였다.

기권 건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으로 258개 법안에 대해서 기권을 하였으며,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238개의 법안에 기권을 하였다. 김웅 의원은 194개 법안에 대해 기권하였다.

(6) 법안표결시 찬반토론 법안 21개, 토론참여 의원은 51명

제21대 국회 1차년도에 본회의 의결시 찬반토론⁷⁾이 이루어진 법안은 모두 21개 법률안이었다.

21개 법률안 중 3개 법률안은 무제한 토론이었으며, 18개 법률안은 시간제한이 있는 찬반토론이었다.

무제한토론⁸⁾을 포함하여 토론을 한 의원은 모두 61명이었으며, 이중 3번 토론을 한 의원 3명, 2번 토론을 한 의원은 4명, 그리고 한번 토론을 한 의원은 44명으로 중복을 제외하면 51명이 토론을 하였다. 3개 법률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한 의원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 김태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2개 법률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한 의원은 김경협 의원, 박수영 의원, 이해식 의원, 최형두 의원이었다.

참고로 제20대 국회 1차년도 법안표결시 찬반토론이 이루어진 경우는 561건 중 한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21대 국회 1차년도 법안표결시 찬반토론현황》

법안처리일	개정법안명	토론의원(토론순)	당일 처리법안수	비고
2020-07-30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수진/송기현/강은미	2	
2020-08-0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김회재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박홍근/김진애/용혜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김경협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이해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허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희국/소병훈		
2020-09-07			1	토론없음

7) **국회법** 제106조(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려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와 그 소속 교섭단체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가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전문개정 2018. 4. 17.]

8)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안처리일	개정법안명	토론의원(토론순)	당일 처리법안수	비고
2020-09-24			71	토론없음
2020-11-19			80	토론없음
2020-12-01			51	토론없음
2020-12-02			97	토론없음
2020-12-09	상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제출)	조정훈	100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이은주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제출)	송석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배진교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제출)	강은미		
	사회적참사의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제출)	성일종/박주민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제출)	장혜영/이해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2020-12-10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이철규/김병기/조태용/홍익표/김웅/오기형/윤희숙/김경협/안병길/이용우/김태흠/김원이/박형수/김용민/윤두현	15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제출)	태영호/송영길/최형두/이재정/주호영		무제한토론
2021-1-8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안(대안)	권성동/강민정/김태흠/강은미/송석준/류호정	14	
2021-02-26	가덕도신공항건설을위한특별법안(대안)	곽상도/진성준/심상정/박수영	63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의원대표발의)	최형두/이병훈		
2021-03-24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김태흠/민형배	165	
2021-04-29			47	토론없음
2021-05-21			98	토론없음
계			821	

6. 제21대 국회 1차년도 법안처리 본회의 현황 :

본회의 48회 중 14회 본회의에서 821개 법안가결 처리

제21대 국회 본회의중 전자투표로 표결이 이루어진 법률안은 모두 822건이었는데, 법률안 처리는 총 48회 본회의 중 총 14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

본회의 수정안 부결을 제외하고는 법률안 원안 중에서는 한건도 부결된 법안이 없어 ‘본회의 상정이 곧 법안 통과’ 라는 국회가 통법부화하는 경향은 여전하였다.

《제21대 국회 1차년도 법률안 처리 본회의 현황》

횟수	집회	회의차수 (일자)	내용	개회시각	산회시각	출석	회의시간 (정회시간제외)	표결법안수	비고
1	제380회 (2020.07.06.~ 2020.08.04.)	제7차 (2020년 07월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등	14:00	15:02	295	1:02:00	2	토론
2		제8차 (2020년 08월04일)	인사청문회법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등	14:00	16:36	292	2:36:00	17	토론
3	제382회 (2020.09.01.~ 2020.12.09.) (정기회)	제2차 (2020년 09월07일)	국정교섭단체 연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10:00	11:16	288	1:16:00	1	
4		제9차 (2020년 09월24일)	1. 교정공제회법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14:00	16:54	293	2:54:00	71	
5		제12차 (2020년 11월19일)	2019회계연도결산 장기공공임대주택임대차의 질향상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등	14:01	16:34	292	2:33:00	80	
6		제13차 (2020년 12월01일)	철도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등	14:02	15:34	286	1:32:00	51	
7		제14차 (2020년 12월02일)	2021년도예산안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20:00	23:22	291	3:22:00	97	
8		제15차 (2020년 12월09일)	정보위원장(전해철) 사임의 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론	15:10	24:00:00	298	7:04:00	100	무제한 토론
9		제383회 (2020.12.10.~ 2021.01.08.)	제1차 (2020년 12월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정보원법전부개정법률안(대안)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제출) 위 2건 무제한 토론	14:11	118:06:00	298	88:08:00	16 (15)
10		제2차	국무위원(행정안전) 전해	10:03	18:22:00	290	5:47:00	14	

횟수	집회	회의차수 (일자)	내용	개회시각	산회시각	출석	회의시간 (정회시간제외)	표결법안수	비고
		(2021년 01월08일)	철.보건복지 권덕철. 여성 가족 정영애. 국토교통 변창흠)인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 의) 등 정보위원장보궐선거		0				
11	제384회 (2021.02.01.~ 2021.02.28.)	제7차 (2021년 02월26일)	국무위원(외교 정의용. 문화체육관광 황희)인사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 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 장 제출) 등	14:01	17:42	291	3:41:00	63	
12	제385회 (2021.03.02.~ 2021.03.31.)	제2차 (2021년 03월24일)	국회의원(김진애)사직의 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법제 사법위원장) 등	14:10	17:48	294	3:38:00	165	
13	제386회 (2021.04.01.~ 2021.04.30.)	제4차 (2021년 04월29일)	대법관(천대엽)임명동의 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대안) 등	20:31	22:25	275	1:54:00	47	
14	제387회 (2021.05.03.~ 2021.05.32.)	제1차 (2021년5 월21일)	5·18민주유공자예우및 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 개정법률안 등	10:00	12:47	276	2:47:00	98	
						계	128:14:00	822 (821)	

IV. 제21대 국회 1차년도(21-1), 통과된 의원법안의 발의 성적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 점수 : 20점 만점에 10.95점

통과된 공동발의 법안 점수 : 10점 만점에 09.82점

제21대 1차년도 대표발의(국§79③)법률안을 1건도 통과 못시킨 의원 - 박병석 의장 등 25명

의원법안 통과율은 17.59%인데, 정부법안 통과율은 48.51% <미국은 정부에 법률안 제안권이 없음>

- ▣ 법안 발의는 많이 해놓고도(의원당 31.79개), 통과는 못 시켜(평균 5.72개 통과)
- ▣ 통과된 1,716개 의원법안 중 1,313건은 위원회 안에 흡수되고 폐기되어, “입법책임은 실종”
- ▣ 1인당 공동발의 법안수 387.46개, 통과된 공동발의 법안 72.59개, “공동발의 남발” 이 문제

법률연맹 발표, 제21대 국회 1차년도에 통과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1,716건 전수조사

- ▣ 지역별 통과된 평균 대표발의 법안수 - 1위 전북의원(9.7개), 최하위 강원의원(3.0개)
- ▣ 당선횟수별 통과된 평균 대표발의 법안수 - 1위 재선의원(8.15개), 꼴찌 5선이상(2.29개)
- ▣ 지역별 통과율 1위 의원 : 서울(천준호) 부산(최인호) 대구(추경호) 인천(박찬대)
 《 비례대표 1위 》 광주(이형석) 대전(박범계) 울산(이채익) 세종(강준현)
 경기(임종성) 강원(유상범) 전북(안호영) 전남(서삼석)
 충북(박덕흠) 충남(김종민) 경북(임이자) 경남(조해진)
 제주(위성곤) / 비례대표(양이원영) 각 의원
- ▣ 교섭단체별 통과된 평균 대표발의 법안수 - 더불어민주당(6.87개) > 국민의힘(4.38개)
- ▣ 통과된 공동발의 법안이 지나치게 많아 - 100개 법안 이상 의원74명(200개 이상 3명이나)

1. 제21대 국회 1차년도 통과된 1716개 법안 조사

입법/사법감시 법률전문 NGO/NPO인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총재 김대인)는 제21대 국회1차년도에 통과된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 1,716개⁹⁾(처리된 1,872개 중 단순폐기 51개, 철회 105개 제외)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제21대국회 1차년도 법률안 현황	구분	광의의 의원발의법안 (9,882개)		정부 제출법안 (헌법§52)	법안총계 (대안제외)
		의원발의법안 (헌법§52, 국회법§79①)	위원회제안법안 (대안) (국회법 §51)		
	접수된 법률안	9,543 ¹⁰⁾	339(331)	336	10,218(9887)
	통과된 법률안	1,717	339(331)	163	2,219

9) 통과된 의원발의법안은 1717개 인데, 이중 의원직을 사퇴한 김진애 의원 발의 6개 법안 중 1개가 포함되어 이를 제외한 수치임

10) 제21대 국회 1차년도에 접수된 법안(9,543개)의 발의의원 총수는 125,929명으로 1차년도 의원 1인당 418.4개 법안(대표/공동)을 발의, 1개법안을 평균13.2명이 발의하였음. 발의자가 10명인 경우가 3,536개 법안, 11명부터 19개까지가 5,317개로, 20명 미만인 모두 8,853개로 전체 의원발의법안의 92.77%를 차지하였으며, 20명 이상은 670개로 7.23%였음.

용어 설명	법률안	법률을 제정·개정·폐지하기 위하여 발의 또는 제출되는 의안을 말한다. 헌법 제52조는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하여 정부에도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다. 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은 발의자를 포함하여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국579①). 대표발의 : 법안을 낼 때 찬성자가 아닌 발의자 중 대표로서 발의한 경우,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가 아닌 공동으로 발의한 경우 발의 : 의원이 의안을 낼 때(정부는 제출, 위원회는 제안이란 용어를 사용)
	통과 법안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으나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에 반영된 법률안 등 국회에서 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법률에 반영된 법률안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률안,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단순폐기 법률안, 법률안 발의 또는 제출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철회한 법률안은 포함되지 않음>
	통과율	국회나 정부가 발의(제출)한 법안 대비 통과된 법안의 비율

(1) 제21대 국회 1차년도(2020.5.30.~2021.5.29.) 현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은 9,882개(협회의 의원발의안 9,537개)였으나, 100%가결된 위원장안(339개)을 제외한 통과된 법률안은 1,716개였다.(국회의원의 평균 대표발의법안 통과율은 17.59%에 불과)

정부법안의 경우 전체 336개 법률안이 제출되어 이중 163개가 통과되어 통과율이 48.51%로 국회의원 평균 법안통과율보다 2.7배 이상 높게 나왔다.

(2) 대안반영 폐기된 법안까지 확인하였으나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이 1건도 없는 의원이 25명이었다. <국회(의원)의 4대 기능 /역할 중 최우선/최중요 책무가 “입법기능” 이다.>

1) 전체 통과된 법안(1,716개)의 76.51%의 법안(1,313개)이 각 상임위원장 대안(331개)에 반영되어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2) 교섭단체별 대표법안 통과건수를 보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의 통과된 대표발의건수가 가장 높아 6.87개였고, 그다음으로 국민의힘이 4.38개, 비교섭이 3.04개로 저조했다.

구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	평균
통과된 평균대표발의 법안수	6.87	4.38	3.04	5.72
소속 의원수	174	102	24	300

3) 당선횟수별로 살펴보면, 재선의원의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수가 8.15개로 가장 많고, 3선 의원은 6.81개, 초선의원은 4.86개였다.

4) 비례대표 의원의 통과된 평균 대표발의 법안수는 4.55개로, 오히려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수 5.94개 보다도 저조하였다.

(3) 1차년도 대표발의 법안수 대비 통과된 법안수를 분석한 통과율 분포를 보면 50% 이상은 5명에 불과하였고, 112명의 의원이 10%이상 20%미만대에 머물렀다.

대표발의법안 통과율	의원수	대표발의법안 통과율	의원수
50%이상	5	10%이상~20%미만	112
40%이상~50%미만	13	0%초과~10%미만	54
30%이상~40%미만	21	0%	25
20%이상~30%미만	70	계	300

(4) 공동발의의 경우 의원 1인당 평균 387.46개를 발의하여 **72.59개의 법률안**을 통과(처리)시켰다. <이중 가결(원안, 수정)된 법안의 공동발의 평균은 17.24개> 1차년도에 100개 이상 통과된 공동발의법안을 가진 의원은 무려 **74명**이나 되었으며, 200개가 넘는 의원도 3명이나 되었다. 반면에 1개도 없는 의원(**박병석 의장과 김의겸 의원**) 2명을 비롯하여 20개 법안 미만인 의원도 16명이나 되어 의원간 편차가 심했다.

(5) 21대 국회 사실상 첫날(2020. 6.1) 접수된 법안 55개 중 백혜련 의원 발의 2개만 수정가결되고, 17개는 대안반영 폐기되었으며, **36개 법안은 1년 넘도록 아직도 소관 상임위원회 계류** 중이다.

(6) 의원이 발의한 의원징계안은 12개인데, 1년 동안 단 한 건도 처리하지 않아 국회는 자율권 행사를 포기했다고 본다.

2. 법안의 생명은 적시성과 실효성

이번 조사를 총괄한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김대인 총재는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는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을 제정/개폐하려는 것으로, 국회의원의 중차대한 책무” 라며, “법안의 생명은 적시성과 실효성인데, 법안발의 시점도 사회현상이 일어난 후에 발의되어 적시성이 떨어지는데, 심사가 늦어져 처리되더라도 효과가 떨어지므로, 대표발의 의원은 “실적쌓기 법안발의가 아닌 민생에 직결된 법안의 신속한 입법노력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3. 제21대 1차년도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건수 상위의원과 통과율 상위의원

-- 교섭단체별 상위 10위 의원명단 발표 --

(1) 통과된 대표법안 발의건수 상위의원

제21대 국회 1차년도에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수 상위의원을 교섭단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더불어민주당 소속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수 상위 의원 10인

의원명	당선히수	선거구		성별	통과된 대표발의법안수
송옥주	재선	경기	화성시갑	여	29
서영교	3선	서울	중랑구갑	여	26

의원명	당선횟수	선거구		성별	통과된 대표발의법안수
임오경	초선	경기	광명시갑	여	24
이용우	초선	경기	고양시정	남	23
박재호	재선	부산	남구을	남	21
안호영	재선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남	19
정춘숙	재선	경기	용인시병	여	19
백혜련	재선	경기	수원시을	여	18
송갑석	재선	광주	서구갑	남	18
김정호	재선	경남	김해시을	남	17
박홍근	3선	서울	중랑구을	남	17

2) 국민의힘 소속 통과된 대표법안건수 상위 의원 10인

의원명	당선횟수	선거구		성별	통과된 대표발의법안수
임이자	재선	경북	상주시문경시	여	27
추경호	재선	대구	달성군	남	20
이종성	초선	비례	대표	남	18
이주환	초선	부산	연제구	남	17
강기운	재선	경남	창원시성산구	남	13
이명수	4선	충남	아산시갑	남	12
김도읍	3선	부산	북구강서구을	남	11
박대수	초선	비례	대표	남	11
윤재옥	3선	대구	달서구을	남	10
이종배	3선	충북	충주시	남	10

(2) 대표발의법안수 대비 통과된 법안수 비율(통과율) 상위의원

1)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의 대표법안 통과율 상위의원

의원명	당선횟수	선거구		성별	통과된 대표법안수	발의 대표법안수	대표법안통과율
천준호	초선	서울	강북구갑	남	9	12	75.00%
고용진	재선	서울	노원구갑	남	16	27	59.26%
안호영	재선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남	19	37	51.35%
최인호	재선	부산	사하구갑	남	13	28	46.43%
박범계	3선	대전	서구을	남	10	22	45.45%
박찬대	재선	인천	연수구갑	남	9	20	45.00%
김병기	재선	서울	동작구갑	남	4	9	44.44%
임종성	재선	경기	광주시을	남	13	30	43.33%
김성환	재선	서울	노원구병	남	3	7	42.86%
한정애	3선	서울	강서구병	여	15	36	41.67%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대표의 경우에 『제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등 57인)』 1건 대표 발의 1건 통과(수정가결)로 통과율 100% (발의건수가 적어 제외)

2) 국민의 힘 소속의원의 대표법안 통과율 상위의원

의원명	당선횟수	선거구		성별	통과된 대표법안수	발의 대표법안수	대표법안통과율
배현진	초선	서울	송파구을	여	6	12	50.00%
임이자	재선	경북	상주시문경시	여	27	59	45.76%
송석준	재선	경기	이천시	남	7	17	41.18%
이주환	초선	부산	연제구	남	17	45	37.78%
박대수	초선	비례	대표	남	11	33	33.33%
추경호	재선	대구	달성군	남	20	61	32.79%
김희국	재선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	남	8	26	30.77%
권영세	4선	서울	용산구	남	3	10	30.00%
이 용	초선	비례	대표	남	9	30	30.00%
조해진	3선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	남	3	11	27.27%

(3) 광역시도별/비례대표 법안통과율 상위의원

< 21대 국회 1차년도 광역시도별/비례대표 법안통과율 1위 의원 >

구분	의원명	당선횟수	선거구		정당	통과된 법안수	발의된 법안수	대표법안 통과율
서울	천준호	초선	서울	강북구갑	더불어민주당	9	12	75.00%
부산	최인호	재선	부산	사하구갑	더불어민주당	13	28	46.43%
대구	추경호	재선	대구	달성군	국민의힘	20	61	32.79%
인천	박찬대	재선	인천	연수구갑	더불어민주당	9	20	45.00%
광주	이형석	초선	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	9	34	26.47%
대전	박범계	3선	대전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10	22	45.45%
울산	이재익	3선	울산	남구갑	국민의힘	5	25	20.00%
세종	강준현	초선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을	더불어민주당	7	22	31.82%
경기	임종성	재선	경기	광주시을	더불어민주당	13	30	43.33%
강원	유상범	초선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국민의힘	2	8	25.00%
충북	박덕흠	3선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무소속	8	19	42.11%
충남	김종민	재선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더불어민주당	4	12	33.33%
전북	안호영	재선	전북	원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더불어민주당	19	37	51.35%
전남	서삼석	재선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더불어민주당	13	43	30.23%
경북	임이자	재선	경북	상주시문경시	국민의힘	27	59	45.76%
경남	조해진	3선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국민의힘	3	11	27.27%
제주	위성곤	재선	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5	33	15.15%
비례	양이원영	초선	비례		더불어민주당	6	15	40.00%

4. 제21대 국회 1차년도에서 통과(대안변영제기법안 포함)된 법률안 통계 분석

(1) 현역 의원의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수 분석

현역의원의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수의 평균은 5.72개였는데, 3개의 통과법안을

가진 의원이 3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개의 통과법안을 가진 의원이 36명으로 그 다음 많았고, 2개를 가진 의원은 35명이었다.

통과 대표법안이 가장 많은 의원은 29개를 가진 송옥주 의원이었고, 그 다음 입자 의원이 27개이었으며, 두 의원을 비롯해 20개 이상 통과대표법안을 가진 의원이 7명이었다.

(2) 통과된 법률안의 대표발의 건수 0개 의원 : 박병석 의장 등 25명

김웅, 박병석 의원은 대표발의 자체를 하지 않음

제21대 국회 제1차년도에 통과된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 1,716개를 분석 결과, 통과된 법안 중 대표발의 법률안이 0개인 국회의원은 모두 25명이며, 이중 김의겸 의원은 2021. 3. 25. 의원직 승계로 입성한 의원이었다.

초선의원이 1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선 의원이 4명, 3선 의원과 5선이상 의원이 각각 2명이었다.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 0 건 의원의 선수별 분석》

구분	초선	재선	3선	4선	5선이상	계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 0건의원수	17	0	2	4	2	25
전체 의원수	152	73	42	19	14	300
비율	11.18%	0.00%	4.76%	21.05%	14.29%	8.33%

《제21대 국회 1차년도 통과된 대표발의법안 0개 국회의원 현황(가나다순)》

의원명	당선횟수	선거구		정당	비고
권은희	3선	비례	대표	국민의당	
김 웅	초선	서울	송파구갑	국민의힘	
김태년	4선	경기	성남시수정구	더불어민주당	
김희곤	초선	부산	동래구	국민의힘	
류호정	초선	비례	대표	정의당	
박병석	6선	대전	서구갑	무소속	
박성준	초선	서울	중구성동구을	더불어민주당	
박 진	4선	서울	강남구을	국민의힘	
변재일	5선	충북	청주시청원구	더불어민주당	
신원식	초선	비례	대표	국민의힘	
양기대	초선	경기	광명시을	더불어민주당	
용혜인	초선	비례	대표	기본소득당	
유경준	초선	서울	강남구병	국민의힘	
윤호중	4선	경기	구리시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초선	비례	대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3선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더불어민주당	
정경희	초선	비례	대표	국민의힘	

의원명	당선횟수	선거구		정당	비고
정찬민	초선	경기	용인시갑	국민의힘	
조수진	초선	비례	대표	국민의힘	
조정훈	초선	비례	대표	시대전환	
조태용	초선	비례	대표	국민의힘	
최강욱	초선	비례	대표	열린민주당	
최형두	초선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국민의힘	
홍영표	4선	인천	부평구을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초선	비례	대표	열린민주당	2020.3.25.의원직승계

(3) 당선 횟수별 대표발의 법안 건수는

재선의원(8.15개)이 초선의원(4.86개)보다 많았다.

당선 횟수별 통과된 대표발의 건수를 분석해 본 결과, 제21대 현역 국회 의원 1인당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 수는 평균 5.72개이었다. 재선의원의 평균 대표발의 법안 수는 8.15개로 가장 많았고, 3선의원이 6.81개로 2위, 초선의원이 4.86개로 3위였으며, 4선의원은 3.42개, 5선의원 이상은 2.29개로 가장 저조하였다.

《제21대 국회의원 1차년도 당선횟수별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수 현황》

구분	초선	재선	3선	4선	5선이상	평균
통과법안수 (가결+대안반영폐기)	4.86	8.15	6.81	3.42	2.29	5.72

(4) 지역별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 수

— 전북지역 의원(9.7개) 1위, 강원지역의원(3개) 꼴찌

지역별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 건수를 분석해 본 결과, 전라북도 출신 국회의원의 평균 대표발의 법안 건수가 9.7개로 가장 많았으며, 광주출신 의원의 대표발의 건수는 8.63개로 그 다음이었다.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 출신 의원의 대표발의 건수가 8.5개였다.

반면,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3개로 가장 적었다.

서울출신 국회의원의 평균 대표발의 건수는 평균 5.76개로 5.72개보다 약간 많았다. 의원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는 6.22개로 지역평균 5.72개 보다 많았다.

《제21대국회 1차년도 지역별 본회의 통과된 대표발의법안건수 순위현황》

광역시도	통과된 평균 대표발의 법안수	광역시도(많은 순)	통과된 평균 대표발의 법안수
서울특별시	5.76	전라북도	9.7
부산광역시	6.28	광주광역시	8.63
대구광역시	4.92	세종특별자치시	8.5
인천광역시	4.77	전라남도	7.1

광역시도	통과된 평균 대표발의 법안수	광역시도(많은 순)	통과된 평균 대표발의 법안수
광주광역시	8.63	경상북도	6.46
대전광역시	5.71	부산광역시	6.28
울산광역시	3.83	경기도	6.22
세종특별자치시	8.50	서울특별시	5.76
경기도	6.22	대전광역시	5.71
강원도	3.00	충청북도	5.38
충청북도	5.38	충청남도	5.36
충청남도	5.36	경상남도	5.06
전라북도	9.70	대구광역시	4.92
전라남도	7.10	인천광역시	4.77
경상북도	6.46	울산광역시	3.83
경상남도	5.06	제주특별자치도	3.67
제주특별자치도	3.67	강원도	3

5. 제21대 국회 1차년도 국회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의 통과율 분석

(1) 제21대 국회 1차년도 의원발의 대표법안의 통과율 총괄

제21대 국회 1차년도 의원발의 대표법안 통과율을 살펴보면, 50% 이상 높은 통과율을 보인 의원은 5명으로, 초선 2명, 재선 2명, 5선 이상 1명이었다.

가장 많은 통과율 분포는 10%이상 20%미만으로 112명이 의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구간에 초선의원 57명이 분포되어 있다.

그다음으로 20%이상 30%미만이 70명으로 많았으며, 통과된 법안이 0건이라 통과율이 0%인 의원이 25명이었고, 이중 3명은 법안발의 자체가 없는 의원이었다.

《제21대 국회1차년도 국회의원의 대표법안 통과율 분포구간별 분석》

대표발의법안 통과율 분포	총계	초선	재선	3선	4선	5선 이상
50%이상	5	2	2	0	0	1
40%이상~50%미만	13	2	8	3	0	0
30%이상~40%미만	21	9	8	3	1	0
20%이상~30%미만	70	32	16	14	6	2
10%이상~20%미만	112	57	31	14	5	5
0%초과~10%미만	54	33	8	6	3	4
0%	25	17	0	2	4	2
계	300	152	73	42	19	14

(2) 교섭단체별 현역의원 대표발의법안의 통과율 분석

제21대 국회 1차년도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을 정당별로 분석해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통과율은

20.2%로 평균(17.59%)보다 월등이 높았다.

그 다음으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통과율은 14.56%이었고, 무소속 및 기타 정당 소속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통과율은 12.89%로 가장 저조하였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5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지만 1건도 통과되지 않았고,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14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지만 1건도 통과되지 못하였으며,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도 8건을 대표발의하였지만 1건도 통과되지 않았다.

《제21대 국회 1차년도 교섭단체별 대표발의법안의 통과율 분석》

구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무소속/기타	평균/계
대표발의법안 평균 통과율	20.02%	14.56%	12.89%	17.59%
의원수	174	102	24	300

(3) 당선횟수별 현역의원 대표발의법안의 통과율 분석

제21대 국회 1차년도 대표발의 법안의 통과율을 당선횟수별로 분석해 보면, 가장 높은 통과율을 보인 것은 재선 의원으로 22.34%였으며, 그다음 3선의원으로 19.20%로 재선과 3선의원의 대표법안 통과율이 높았다.

가장 저조한 것은 4선 의원(14.06%)이었으며, 초선의원은 15.32%로 평균을 밑돌았다.

《제21대 국회 1차년도 당선횟수별 대표발의법안의 통과율 분석》

구분	초선	재선	3선	4선	5선이상	평균
대표발의법안 평균 통과율	15.32%	22.34%	19.20%	14.06%	17.47%	17.59%
의원수	152	73	42	19	14	300

대표발의법안 통과율 분포	총계	초선	재선	3선	4선	5선 이상
50%이상	5	2	2	0	0	1
40%이상~50%미만	13	2	8	3	0	0
30%이상~40%미만	21	9	8	3	1	0
20%이상~30%미만	70	32	16	14	6	2
10%이상~20%미만	112	57	31	14	5	5
0%초과~10%미만	54	33	8	6	3	4
0%	25	17	0	2	4	2
계	300	152	73	42	19	14

(4) 지역별 현역의원 대표발의법안의 통과율 분석

제21대 국회 1차년도 지역구별 대표발의법안 통과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특

별자치시로 2명 의원의 통과율이 27.54%였다. 평균 통과율인 17.59%보다 10%p 가량 높았다.

가장 낮은 시도는 제주특별자치도로 3명 의원의 통과율이 10.58%에 불과했다. 의원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49명의 의원의 대표발의법안 통과율이 16.55%였다.

《제21대 국회 1차년도 광역시도별 대표발의법안 통과율 순위》

순위	광역시도	평균 대표발의법안 통과율	의원수
1	세종특별자치시	27.54%	2
2	전라북도	26.69%	10
3	서울특별시	22.10%	49
4	인천광역시	20.97%	13
5	전라남도	19.68%	10
6	대전광역시	19.55%	7
7	부산광역시	19.32%	18
8	충청북도	17.76%	8
9	광주광역시	17.54%	8
10	경상북도	16.81%	13
11	충청남도	16.57%	11
12	경기도	16.55%	59
13	경상남도	15.15%	16
14	대구광역시	13.83%	12
15	강원도	13.82%	8
16	울산광역시	12.85%	6
17	제주특별자치도	10.58%	3

6. 제21대 1차년도 통과된 공동발의 법안수 상위의원

-- 교섭단체별 상위 10위 의원명단 발표 --

(1)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의원명	당선횟수	선거구		정당	성별	통과된 공동발의 법안수
오영환	초선	경기	의정부시갑	더불어민주당	남	226
이용빈	초선	광주	광산구갑	더불어민주당	남	221
김승원	초선	경기	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	남	187
김경만	초선	비례		더불어민주당	남	184
신정훈	재선	전남	나주시화순군	더불어민주당	남	183
박성준	초선	서울	종구성동구을	더불어민주당	남	183
이수진(비)	초선	비례		더불어민주당	여	181
허영	초선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더불어민주당	남	178
황운하	초선	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남	176
홍성국	초선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갑	더불어민주당	남	175

(2) 국민의힘 소속 의원

의원명	당선했수	선거구		정당	성별	통과된 공동발의 법안수
추경호	재선	대구	달성군	국민의힘	남	141
권명호	초선	울산	동구	국민의힘	남	121
김용관	초선	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남	113
김병욱	초선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국민의힘	남	110
김성원	재선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국민의힘	남	108
김정재	재선	경북	포항시북구	국민의힘	여	107
임이자	재선	경북	상주시문경시	국민의힘	여	98
김예지	초선	비례	대표	국민의힘	여	98
김석기	재선	경북	경주시	국민의힘	남	97
구자근	초선	경북	구미시갑	국민의힘	남	94

(3) 지역별 통과된 공동발의법안수 1위 의원

지역	의원명	당선했수	선거구		정당	성별	통과된 공동발의법안수
서울	박성준	초선	서울	중구성동구을	더불어민주당	남	183
부산	박재호	재선	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	남	96
인천	이성만	초선	인천	부평구갑	더불어민주당	남	143
대구	추경호	재선	대구	달성군	국민의힘	남	141
광주	이용빈	초선	광주	광산구갑	더불어민주당	남	221
대전	황운하	초선	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남	176
울산	권명호	초선	울산	동구	국민의힘	남	121
세종	홍성국	초선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갑	더불어민주당	남	175
경기	오영환	초선	경기	의정부시갑	더불어민주당	남	226
강원	허영	초선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더불어민주당	남	178
전북	한병도	재선	전북	익산시을	더불어민주당	남	131
전남	신정훈	재선	전남	나주시화순군	더불어민주당	남	183
충북	임호선	초선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더불어민주당	남	141
충남	문진석	초선	충남	천안시갑	더불어민주당	남	124
경북	김병욱	초선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국민의힘	남	110
경남	김정호	재선	경남	김해시을	더불어민주당	남	147
제주	송재호	초선	제주	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	남	80

7. 제21대 국회 1차년도 통과된 공동발의법안 주요통계

(1) 통과된 법안의 공동발의수 : 더불어민주당(87.77개) > 국민의힘(52.56개)

교섭단체별 통과된 법안의 공동발의건수를 비교해 본 결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공동발의법안수가 87.77개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국민의힘 52.56개, 비교섭 47.63개 순이었다.

통과된 대표법안 발의건수에 이어 공동발의법안수도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주가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법안심사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고, 전 상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21대 국회 1차년도 교섭단체별 통과된 법안의 평균 공동발의 건수〉

구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무소속/기타	평균/계
통과된 평균 공동발의법안수	87.77	52.56	47.63	72.59

대안반영 폐기된 법안수를 살펴보면, 전체 의원당 평균은 59.72건이며,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이 발의하여 대안반영폐기된 평균 법안수는 68.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민의힘 소속의원이 발의하여 대안반영 폐기된 법안이 48.71개, 비교섭 42.83개였다.

〈제21대 국회 1차년도 교섭단체별 평균 대안반영 폐기법안건수 현황〉

구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무소속/기타	계
대안반영폐기된 평균 법안수	68.51	48.71	42.83	59.72

(2) 지역별 통과된 법안의 공동발의건 수— 세종(126.50개) 1위

지역별 통과된 공동법안건수를 분석해 본 결과, 1위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126.50개 였고, 2위는 광주지역으로 117개, 3위는 전라남도지역으로 97.90개였다.

저조한 지역은 부산광역시로 부산지역 국회의원의 통과된 법안의 평균 공동발의수는 47.50개였다. 그다음으로 저조한 지역은 경상남도로 경남지역 출신의원의 평균은 49개였다. 서울출신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67.96개로 공동발의 건수는 평균 72.59개에 미치지 못하였다.

〈제21대 국회 1차년도 지역별 통과된 공동발의법안수 현황〉

광역시도	통과된 평균 공동발의수	광역시도(많은 순)	통과된 평균 공동발의수
서울특별시	67.96	세종특별자치시	126.50
부산광역시	47.50	광주광역시	117.00
대구광역시	60.25	전라남도	97.90
인천광역시	82.08	전라북도	91.20
광주광역시	117.00	인천광역시	82.08
대전광역시	79.57	경기도	80.75
울산광역시	65.17	대전광역시	79.57
세종특별자치시	126.50	경상북도	78.77
경기도	80.75	충청북도	73.63

광역시도	통과된 평균 공동발의수	광역시도(많은 순)	통과된 평균 공동발의수
강원도	59.88	충청남도	70.27
충청북도	73.63	서울특별시	67.96
충청남도	70.27	울산광역시	65.17
전라북도	91.20	제주특별자치도	61.67
전라남도	97.90	대구광역시	60.25
경상북도	78.77	강원도	59.88
경상남도	49.00	경상남도	49.00
제주특별자치도	61.67	부산광역시	47.50

(3) 통과된 법안의 공동발의건수는 여전히 높아 100개 이상 74명

1인당 평균 72.59개

제21대 국회 1차년도 통과된 법안의 공동발의 건수를 분석해 보면, 100개 이상 공동발의한 의원은 **74명**이나 되었으며, 통과된 법안의 공동발의건수가 평균 **72.59** 개나 되었다.

통과된 법안의 공동발의건수가 20개 미만인 의원은 초선의원이 5명, 재선의원이 2명, 3선의원이 3명, 4선 의원이 5명, 5선이상인 1명으로 모두 **16명**이었다.

《제21대 국회 1차년도 당선횟수별 통과된 법안의 공동발의건수 현황》

통과된 공동발의 법안수	초선	재선	3선	4선	5선이상	의원수
20개 미만	5	2	3	5	1	16
20~29	17	9	8	1	4	39
30~39	14	6	5	2	2	29
40~49	15	5	2	2	1	25
50~59	11	5	3	4	2	25
60~69	9	9	8	3	1	30
70~79	13	5	1	0	1	20
80~89	10	6	4	1	0	21
90~99	13	6	0	1	1	21
100개 이상	45	20	8	0	1	74
계	152	73	42	19	14	300
평균	79.80	76.19	61.19	44.32	48.00	72.59

(4) 통과된 대표법률안은 0개인데, 통과된 법안의 공동발의수는 많은 의원

제21대 국회 1년동안 통과된 대표발의법안이 0개인 국회의원 25명중에 통과된 공동발의수는 많은 의원이 다수 존재하였다.

대표적으로 **박성준** 의원은 통과된 대표발의건수는 0개인데, 공동발의건수는 **183** 개나 되었다. 50개 이상인 의원은 **6명**이었다.

《통과된 대표발의건수 0건 의원 중 공동발의건수가 많은 의원》

의원명	당선했수	선거구		정당	성별	통과된 대표발의법안수	통과된 공동발의법안수
박성준	초선	서울	중구성동구을	더불어민주당	남	0	183
이동주	초선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남	0	76
양기대	초선	경기	광명시을	더불어민주당	남	0	74
조수진	초선	비례대표		국민의힘	여	0	72
최형두	초선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국민의힘	남	0	66
유경준	초선	서울	강남구병	국민의힘	남	0	52

(5) 통과된 공동발의 법안수 20개 미만의원 (16명)

의원명	당선했수	선거구		정당	성별	공동발의법안 통과건수		
						가결	대안반영	합계
박병석	6선	대전	서구갑	무소속	남	0	0	0
김의겸	초선	비례	비례대표	열린민주당	남	0	0	0
김태년	4선	경기	성남시수정구	더불어민주당	남	2	1	3
유기홍	3선	서울	관악구갑	더불어민주당	남	2	7	9
이상호	4선	서울	서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	남	4	6	10
박형수	초선	경북	영주시영양군봉곡읍을진군	국민의힘	남	2	9	11
박진	4선	서울	강남구을	국민의힘	남	1	11	12
최연숙	초선	비례	대표	국민의당	여	5	7	12
김영진	재선	경기	수원시병	더불어민주당	남	3	10	13
조해진	3선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국민의힘	남	2	11	13
하태경	3선	부산	해운대구갑	국민의힘	남	1	12	13
윤호중	4선	경기	구리시	더불어민주당	남	4	10	14
조정훈	초선	비례	대표	시대전환	남	2	12	14
김한정	재선	경기	남양주시을	더불어민주당	남	10	6	16
윤상현	4선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무소속	남	2	15	17
박수영	초선	부산	남구갑	국민의힘	남	2	16	18

※ 김의겸 의원은 2021. 3. 25. 의원직 승계하였으며, 공동발의 법안수는 2021. 4.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의원등10인)」 등 25개였음.

8. 제21대 국회 의원발의 법률안 처리개황

(1) 전체 9,543개 의원발의 법안 중 1,717개만 통과(대안반영포함)

제21대 국회 1차년도(2020.5.30.~2021.5.29.)에 국회의원들이 9,543개 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이 중 통과된 법률안은 겨우 발의된 법안의 18%에 불과한 1,717개였으며, 미처리되어 적체된 법률안이 7,670개로 80.4%나 되었다. 폐기, 철회로 법률이 되지 못한 경우는 156건으로 전체의 1.57%였다. 원안가결 내지 수정가결된 법

안은 접수된 법안 9,543개 중 4.23%에 불과한 403개였다.

《제21대 국회 1차년도 국회의원 발의법안 접수/처리법안 현황》 기간 : 2020.5.30.~2021.5.29.

접수	처리								미처리 (계류)
	처리계	통과계	원안가결	수정안 가결	대안반영	부 결	폐 기	철 회	
9,543	1873	1717	126	277	1314	0	51	105	7,670

《제21대 국회 1차년도 국회 법안 접수/처리법안 상세 현황》

구분	접수	처리	처리내용									미처리 (계류)
			계	법률반영				계	법률미반영			
				가결		대안 반영	수정안 반영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의원	9,543	1,874	1,717	126	277	1,314		157				
위원장	339	339	339	339								
정부	336	163	163	33	46	84						173
총계	10,218	2,376	2,219	498	323	1,398		157		51	106	7,842

1) 법률반영 :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으나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에 반영된 법률안 등 국회에서 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법률에 반영된 법률안
 2) 가결 :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
 3) 원안가결 : 위원회에서 수정되지 않은 법률안, 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률안 등 원안이 본회의에서도 수정 없이 가결된 경우
 4) 수정가결 : 본회의에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된 경우,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또는 제안한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수정된 경우 등 당초 원안이 수정되어 가결된 경우
 5) 대안반영 :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결과 그 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대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률안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가결 법률안과 차이가 없음
 6) 수정안반영 :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이 본회의 자동부의되어 처리되는 경우, 수정안에 그 법률안의 내용이 일부 또는 전부 반영되어 폐기하기로 한 법률안
 7) 법률미반영 :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률안,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률안(대안반영 제외), 발의 후 철회된 법률안 등 최종적으로 법률에 반영되지 못한 법률안
 8) 부결 :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률안
 9) 폐기 :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 보고 후 7일(휴회·폐회 기간 제외) 이내에 본회의 부의요구가 없어 폐기되는 법률안, 임기만으로 폐기된 법률안
 10) 철 회 : 법률안 발의 또는 제출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철회한 법률안
 11) 기타 : 위원회 심사결과 대안반영을 이유로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은 법률안 중 대안이 부결된 경우 또는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따라 법률에 반영되지 못한 법률안 등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

(2) 제21대국회 첫날(2020.6.1.)제출된 55개 법률안 중

2개 법률안만 수정가결

제21대 국회의 사실상 첫날(2020. 6. 1.) 발의된 법률안은 20대 국회보다 많은 55개 법률안이었으며, 이중 1차년도에 가결된 법률안 2개였으며, 위원장안에 포함 되어 대안반영폐기된 안은 17개였다.

아직 계류되어 있는 법안은 36개가 되었다. 통과율은 34.54%로 평균(17.59%)보

다 높지만 첫날 상징적으로 제출한 법안도 적체되어 그대로 임기말 폐기될 우려가 있다. 참고로 지난 제20대 국회 첫날(2016. 5. 30.) 앞 다투어서 발의하여 첫날 51개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임기말까지 계류되어 있다가 폐기된 법안이 30개나 되었다.

《21대 국회 첫날 발의된 법안중 가결된 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2100015	인사청문회법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등13인)	2020-06-01	2020-08-04	수정가결
2100014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등13인)	2020-06-01	2020-08-04	수정가결

(3) 대안반영 폐기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 : 입법 책임소재가 불명확

- 의원발의 법안 1,313개와 정부안 84개가 대안반영폐기되고 합쳐져 상임위원장 대안 331개로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여 법률안 내용 그대로 가결시키는 원안가결과 그 내용을 조금 수정하여 가결하는 수정가결 대신 여러 개의 법률안을 종합하고 조정하여 한 개 법률안으로 만들어 위원장 대안 형식으로 본회의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제21대 국회 첫해 가결된 위원장안은 339개였고, 모두 원안가결되었다. 순수 위원회안은 8개였고, 다른 법안을 혼합해서 만든 위원장 대안이 331개 였다.

위원장 대안을 만들 때, 폐기되는 법안수를 살펴본 바, 10건 이상이 폐기된 법률안은 총 19개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0.12.2.의결)」의 경우 무려 65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만들었다. 이처럼 조세관련 법안의 대안폐기가 특히 많았다.

〈제21대 국회 1차년도 상임위 대안 중 10건 이상의 대안반영폐기법안이 있는 경우〉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대안반영 폐기법안수
2109075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2021-03-24	2021-03-24	원안가결	10
2109055	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2021-03-24	2021-03-24	원안가결	14
2109054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2021-03-24	2021-03-24	원안가결	10
2108993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2021-03-22	2021-03-24	원안가결	12
210833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1-02-25	2021-02-26	원안가결	10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대안반영 폐기법안수
210630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전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2020-12-09	2020-12-09	원안가결	15
2106289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0-12-09	2020-12-09	원안가결	44
2106287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0-12-09	2020-12-09	원안가결	22
2106267	경찰공무원법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0-12-08	2020-12-09	원안가결	10
2106263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0-12-08	2020-12-09	원안가결	11
2106258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0-12-08	2020-12-09	원안가결	31
2106255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0-12-08	2020-12-09	원안가결	14
2106080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0-12-02	2020-12-02	원안가결	18
2106076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0-12-02	2020-12-02	원안가결	11
2106070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0-12-02	2020-12-02	원안가결	19
2105953	부가가치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2020-12-01	2020-12-02	원안가결	22
2105949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2020-12-01	2020-12-02	원안가결	65
2105502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0-11-18	2020-11-19	원안가결	10
2102651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0-08-03	2020-08-04	원안가결	12

VI. 제21대 국회 1차년도(21-1) 기타 주요 의정활동 실적

1. 제21대 국회 1차년도 국정감사 : 국정감사 종합성적은 D 학점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자료를 토대로 해

국정감사 현장출석 3점, 국리민복상 수상의원 및 준 우수위원 평가

2020년도 국감-사실상 야당도, 애국심도 없고, 법치는 실종
국감의 주역일 “국민의 힘” - 리더 없이 지리멸렬!
여당도 국익을 위해 국정을 제대로 감사하여야 함에도, 부정비리 감싸기에 급급

- (1) **코로나 사태에, “독감백신” 으로 사망했다-아니다 논란,**
- (2) **라임, 옵티머스 등 권력형 금융비리** (3) **4·15 총선, 부정선거 공방**
- (4) **탈원전-태양광사업 문제점** (5) **윤석열 검찰총장 - 추미애 법무 검찰개혁논란**

-- 국회(21-1) 국정감사 종합성적은 D학점 --

- ▣ 국정감사(21-1) 피감기관은 지난해 보다 감소(788개⇒705개), **감사일수도 대폭 축소(159일⇒137일)**
- ▣ 지난해 기승전 ‘조국(曹國)국감’ 인 반면, 올해 국정감사는 추미애(법무) 국감
- ▣ **전문성, 투쟁력 없고, 핵심증인과 자료 원천 차단된 형식적인 국감에, 기업인 민간인 호출 벌세우기 국감은 여전**
- ▣ **민생·정책은 뒷전이고, 증인체택, 정쟁으로 파행 - 질의에 대해 피감기관장<추 법무>은 “소설 쓴다” 고 조롱조 반발**
- ▣ 지난해 조국 가족 펀드, 올해 투자사기 **옵티머스, 라임 정관계 로비 등 권력형 금융비리 의혹 제기**
- ▣ **낙하산, 공직비리, 성범죄 등을 보고도 눈감고 감싸는 여당, 부정부패를 바로잡지 못하는 무능한 야당 / 국정감사현장만 모면하면 된다는 피감기관 / 이를 보고 있는 국민은 허탈·참담**
- ▣ **코로나19 이유로, 21년 만에 NGO감시단도 없는 텅빈 국감장, 타의원 질의에 끼어들기와 막말 등 구태 여전**
- ▣ 비행기 타는 시간이 **감사시간보다 많았던 예산낭비·밀실 재외공관 감사는 코로나로 ‘화상국감’**으로 전화위복됨
- ▣ 국회 스스로 만든 법을 자기들이 **안지키는 ‘국감기간’** 21대 국회도 여전 / 국감법에 30일을 할 수 있는 국정감사를 20일로 줄여서 하는 것도 모자라, **감사준비한다고 휴일(주로 수요일), 공휴일 겹쳐 평균10일도 국감 안해.**

21대 첫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 선정

- 1) **[국감성적]** 지난 제15대 국회 말부터 22년 동안 전국의 국감현장을 밀착 모니터링

해은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공동단장 김대인 법률연맹 총재 외 22인)은 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문재인 정부의 4차년도 국정감사, 1988년 부활한지 33년째 국정감사인 올해 **국정감사**를 정량 및 정성평가에서 10월 19일 중간평가에서 밝힌 그대로 **국민의 기대 수준에 크게 못 미친 D학점 국정감사**였다고 평가합니다.

지난 제20대 국회 첫째 국정감사는 집권여당의 보이콧으로 ‘F’ 학점을 받았고, 지난해 국감은 ‘기승전 조국’ 국감으로 ‘D’ 학점이었는데, 이번 코로나(COVID-19) 국정감사는 지난해보다 파행 정도는 감소하였지만, 파행하지 않은 원인이 야당의 전투력 상실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개선되었다고 보기에 애매하다는 평가입니다. **과반이 넘는 초선의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국정감사 준비부족, 피감기관 업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큰 줄기에 대한 질의보다 결가지에 대한 질의가 많아, 감사다운 국정감사가 아닌 피감기관의 업무보고와 국정파악 정도의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평가입니다.

중간평가 이후 과방위의 종합감사에서는 위원장과 간사의 말다툼으로 인해 파행이 되었고, 국감 마지막날 국회운영위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에서는 피감기관 증인의 ‘살인자’ 발언과 여야간의 끼워들기 막말로 정쟁국감을 하여 더 나아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라이미·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여야 공방으로 시작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총들**로 끝나면서, 정부 심판론을 앞세웠던 국민의힘은 날카롭지 못한 공세로 일관했고, **주요 상임위에서 요청한 증인 채택은 여당의 원천봉쇄에 대거 무산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방어에만 치중하였다는 평가입니다.

2) **[의원평가]** 제21대 국회의 국정감사에 대해 부실국감이라는 불신이 컸고, 이번 국감이 ‘D’ 학점 국감이었지만, 정책국감을 전개했다고 평가된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 수상의원 수는 포지티브 운동을 하는 본 모니터단의 성격과 노선에 비추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5선의 변재일 의원과 김기현, 김영주, 안규백, 이명수 의원 등 여야 4선 중진위원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별 정원의 25%를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가) 기본적으로 **평균질의횟수와 질의응답시간(본질의+보충질의+추가질의 합산횟수 평균), 질의내용전체를 종합 수집**하였습니다. 내용면에서는 자금집행관련 문제점 지적, 부정비리 지적, 정책관련 문제점 지적, 전년도 국정감사 시정조치내역 점검여부를 6단계(아주잘함 5점, 잘함 4점, 보통 3점, 못함 2점, 아주못함 1점, 해당사항 없음 0점)로 나누어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평균질의 횟수 이상 질의, 대안 또는 법과 제도 개선방안 제시 등은 가점**하고, **중복질의(발견 없이 같은 내용**

을 중복 질의한 경우) 질의 매너(막말, 소리 지르기, 질의시간 안지키기, 상대방 의원 비난) 감사매너(끼워들기, 잡담, 판짓) 국정감사 방해(파행유발, 의사진행발언을 통한 국감방해) 등은 감절하였고, 추천 및 지적의 경우에는 ①적시성 ②충실성 ③논리성 ④정확성 ⑤공정성의 기준에 따랐습니다.

나) 국정감사 우수위원의 경우 국정감사모니터위원들의 평가와 전문가들의 평가를 종합하여 잘한 의원들을 1차 선발(50%)한 후 선발된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여러 차례 교차하여 평가하였고(예: 한 상임위원회에서 A, B, C, D의원들이 추천된 경우 AB, AC, AD, BC, BD, CD의 질의를 비교하여 평가함), 의원실에서 제출한 자료는 분량과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국감불참 2일 이상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국감우수의원(국리민복상)은 각 상임위별 상위 25%내에서 선정하였습니다. 결인 상임위의 경우에는 본상임위원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의원 중에서 선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국리민복상 평가 참조>

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당 의원들은 국정의 큰 흐름을 관통하는 국감을 하지 못한 채, 결가지 국정감사에 치중하는 면이 많아 실망스러웠습니다.

라) 이번 평가에서 모범의원으로, 여성 최초의 국회부의장으로 여성과학인력에 대한 정책조명을 한 김상희 국회부의장(과방위), 조세 및 재정 분야에서 소비자중심의 정책제안에 탁월했던 정성호 기재위 위원(예결특위 위원장), 다선 중진의원이면서도 초선처럼 열띤 정책 국정감사를 전개한 정진석 의원(외교통일위)을 선정하였습니다.

마) 이번 우수 상임위원장 평가에서는 위원장의 리더십과 역량을 비중있게 평가하였고, 여야정쟁 속에서도 편파시비 없이, 파행성 정회 없이 감사를 한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3선의 윤관석 정무위원장(민)과 유기홍 교육위원장(민),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민)을 선정하였습니다.

3) **[국감행태]** ①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그동안 정착되었던 ‘일문일답’ 이 많이 사라지고, 자기 의견을 길게 발표하는 정견발표형 국감으로 퇴보하였으며, 짧은 질의시간에 동영상(뉴스 등)을 보고 질의를 하는 영상시청형 국감이 두드러졌습니다. ② 코로나 위기라면서도 705개에 달하는 피감기관을 과다하게 선정했으며, ③ 국감조법으로 정해져 있는 ‘30일 국감’ 을 하지 않고 20일 국감을 고수한 채, 감사일정은 158일에서 137일로 대폭 축소(위원회별 평균 10일)하였습니다. ④ 국감기간 아닌 때에 할 수 있는 현장시찰과 민간인 증인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여전하고, ⑤ 태부족한 감사시간에 증인채택논란과 여야간의 끼어들기 막말 등 불필요한 정쟁을 반복하였습니다.

<국회가 국감이 부활한 지 33년간 증인에 대한 성과분석이나 연구를 하지 않아, 적절한 피감기관

선정, 일반인 증인과 기관증인과의 중요성 정도를 알 수 없음»

- 4) **[국감개선]** 국회의원(감사위원)이 수년간 지적해도 피감기관은 시정이나 개선하지 않고 피감기관장은 그저 “예, 알겠습니다” 라는 형식적 면피성 답변이 많았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시정조치와 관련하여 감사위원이 1년이 지나서야 감사장에서 되물어 **시정조치 여부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 맹탕 국감이 재현되었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질의한 의원의 실명을 명시하여 지적한 사안에 대한 시정조치 여부를 국감이후에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질의실명제 실시) 또한 **현장시찰과 일반증인은 국감조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30일 중 10일간 정기국회 전 실시하도록 개선하여야** 합니다.
- 5) **[국감당부]** 김대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공동단장은 “**권력은 집중(분권-Balance)되거나 통제(감사-Check)가 없으면 반드시 부패한다.(Lord Acton)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모든 국가기관을 감사하는 국정감사의 의미는 막중하다.** 그러므로 **여당이라 해도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권력(정부)을 제대로 감사해야(헌법 제46조②, 국회법 제114의2)하고, 야당은 여당보다 더 엄중한 책임감과 전문성으로 무장해 사전준비와 철저한 현장점검을 거쳐 충실국감을 해야 할 것임에도, 이번 국감은 끝까지 여당은 감싸기, 야당은 준비부족이 많이 드러나는 부실국감이었다.**” 고 강조했다.

2020년도 국정감사(21-1) 국리민복상 수상의원 명단

(한국대학생<법정치>봉사단과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22년 전통의--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 국정감사 국리민복상(모범의원상) (국회직, 가나다 순)

김상희 국회부의장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4선)
정진석 의원 (외교통일위, 국민의힘, 5선)	

■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위원장상) (국회법 37조 위원회 순)

윤관석 국회정무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교육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 (국회법 37조 위원회 순)

위원회	선정수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의원 《존칭 생략, 가나순》 정당표시 : 더불어민주당(민), 국민의힘(힘), 시대전환(시)
국회운영	4	김성원(힘) 김정재(힘) 윤건영(민) 이용빈(민)
법제사법	4	김도읍(힘) 박범계(민) 전주혜(힘) 최기상(민)
정무	6	강민국(힘) 박용진(민) 성일종(힘) 유동수(민) 이용우(민) 이영(힘)
기획재정	6	고용진(민) 류성걸(힘) 박홍근(민) 유경준(힘) 이광재(민) 추경호(힘)
교육	4	곽상도(힘) 박찬대(민) 정경희(힘) 정찬민(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5	박대출(힘) 변재일(민) 조명희(힘) 한준호(민) 황보승희(힘)
외교통일	5	김기현(힘) 김영주(민) 이재정(민) 조태웅(힘) 태영호(힘)
국방	4	김병주(민) 신원식(힘) 안규백(민) 한기호(힘)
행정안전	6	김영배(민) 박완수(힘) 박완주(민) 서범수(힘) 이명수(힘) 이해식(민)
문화체육관광	4	김승수(힘) 김승원(민) 김예지(힘) 전용기(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5	위성곤(민) 이원택(민) 이만희(힘) 정운천(힘) 정점식(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7	김경만(민) 신영대(민) 이장섭(민) 이철규(힘) 조정훈(시) 최승재(힘) 한무경(힘)
보건복지	6	강기운(힘) 권철승(민) 신현영(민) 이종성(힘) 전봉민(힘) 최혜영(민)
환경노동	4	김웅(힘) 윤준병(민) 임이자(힘) 장철민(민)
국토교통	8	김은혜(힘) 김희재(민) 송석준(힘) 송언석(힘) 조응천(민) 조오섭(민) 천준호(민) 하영제(힘)
여성가족	3	김미애(힘) 양금희(힘) 임오경(민)
비고	81	1. 선정비율 : 상임위원회별 25% 범위 내에서 선정 2. 전체 344명(운영 28/ 여가 17) 중 81명으로 전체 23.55% 3. 겸임상임위는 본상임위에서도 우수하였으므로, 상장에 두 개 상임위가 표시됨 4. 상임위원회는 국정감사 당시의 상임위원회임

① 교섭단체별

구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
선정의원(명)	42	44	1
전체의원(명)	173	103	22
선정비율(%)	24.3	42.7%	4.5%
겸임상임위포함(명)	199	119	25
선정비율(%)	21.1%	37.0%	4.0%

* 국회의장 제외. 더불어민주당(174인)의 경우에는 국무위원 1명을 제외한 수치임 <운영, 여성가족위원회 포함 의원수>

② 당선횟수별

구분	초선	재선	3선	4선	5선이상
선정의원(명)	46	23	10	6	2
전체의원(명)	151	74	42	19	13
선정비율(%)	30.46%	31.08%	23.81%	31.58%	15.38%

* 박병석 국회의장(6선) 불포함

③ 여성의원

구분	여성의원(명)	우수의원(명)	선정비율(%)
의원수(명)	57	19	33.3%

* 감사위원 299명 중 여성감사위원의 비율은 19.03%임

④ 지역구 / 비례대표

구분	비례대표	지역구
선정의원(명)	17	70
전체의원(명)	47	252
선정비율(%)	36.2%	27.8%

※ 지역구 의원 253명 중 국회의장님 제외

⑤ 지역구 의원의 선거구별

광역시도	전체의원	선정의원	비율(%)	광역시도	전체의원	선정의원	비율(%)
서울특별시	49	15	30.61%	강원도	8	3	37.50%
부산광역시	18	4	22.22%	충청북도	8	2	25.00%
대구광역시	12	5	41.67%	충청남도	11	4	36.36%
인천광역시	13	3	23.08%	전라북도	10	3	30.00%
광주광역시	8	2	25.00%	전라남도	10	1	10.00%
대전광역시	6	2	33.33%	경상북도	13	4	30.77%
울산광역시	6	2	33.33%	경상남도	16	6	37.50%
세종시	2	0	0.00%	제주도	3	1	33.33%
경기도	59	13	22.03%	계	252	70	27.8%

※ 국회의장은 국감위원이 아니므로 대전은 7명 중 국회의장 지역구인 대전시 서구갑 1명 제외

2020년도 국정감사모니터링 평가기준 및 방법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면 온라인모니터링으로 변경하였고, 다음과 같은 평가기준을 확정함.

1. 기본 자료 조사

- 국정감사에 참가하는 모든 국회의원(감사위원)들의 각 상임위원회 피감기관별 질의내용 중 다음의 사항을 전수 조사함.

- (1) 피감기관별 질의횟수(주질의, 보충, 추가질의 합산횟수)
- (2) 피감기관별 질의시간 합산
- (3) 피감기관별 질의내용 정리

*의사진행, 자료제출발언은 포함하지 않음.

2. 질의내용 조사 및 평가

(1) 질의내용 분류 및 평가

- 질의내용 중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아주잘함 5점, 잘함 4점, 보통 3점, 못함 2점, 아주못함 1점, 해당사항 없음 0점'으로 평가함.

- ① 부정비리지적(피감기관이나 그 직원이 잘못된 사항 지적)
- ② 대안, 법제도 개선(피감기관의 법제도, 정책미흡 개선방안 제시)
- ③ 자금집행(재정)문제점(피감기관이나 그 구성원이 예산을 잘못사용한 사례 지적)
- ④ 시정조치점검(과거국감 지적에대해 시정이 되었는지 점검)
- ⑤ 정책관련 잘못 지적(피감기관의 정책 문제점조명, 사례제시)

(2) 중복질의유무(다른 의원의 질의에 발전 없이 같은 내용을 중복질의)

(3) 감점요인 평가

- 질의 중 다음과 같은 언행이 있는 경우 확인하여 감점함.

- ① 질의매너(막말, 소리 지르기, 시간 안 지키기, 상대의원 비난)
- ② 감사매너(끼워들기, 잡담, 딴짓)

③국감방해 원인제공(파행유발, 의사진행 국감방해)

3. 국정감사모니터 위원 평가 및 우수(못함)의원 추천 기준

- 국정감사 내용 평가의 경우, 아래 다섯 가지 준거(원칙)에 의해 5 단위 (아주 잘함, 잘함, 평범, 못함, 아주 못함) 척도로 평가하여 우수의원과 못함 의원을 추천함.
- ①적시성: 감사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기(적시)에 이루어 졌는가?
- ②충실성: 감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해 효과를 낼 수 있는가?
- ③논리성: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운가?
- ④정확성: 수집된 증거에 기초하여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인가?
- ⑤공정성: 문제점을 과장하거나 편향된 시각이 없이 공정한가?"

4. 종합평가

(1) 교차평가

국정감사모니터위원들의 평가와 전문가들의 평가를 종합하여 잘한 의원들을 1차 선발 (50%)한 후 선발된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여러 차례 교차하여 평가함.

예) 한 상임위원회에서 A, B, C, D의원들이 추천된 경우 AB, AC, AD, BC, BD, CD의 질의를 비교하여 평가함.

(2)의원실에서 제출한 자료의 평가

의원실에서 제출한 자료는 분량과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평가에 반영함. 잘한 의원이 많거나, 평가가 비슷한 경우 제출한 자료가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함.

5. 결과 발표 및 국정감사 평가

전체 국정감사평가대상 국회의원 중 위원회별로 25%를 우수의원으로 평가하여 국민민복상 수상자로 선정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2020년도 총괄평가¹¹⁾

가.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성적은 D학점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성적을 지난해와 같이 ‘D’ 학점으로 평가한다.

(1)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국정감사의 권능으로 인해 주권자인 국민들은 대표자들인 국회의원을 통해 우리 정부가 얼마나 건전하게 운영되는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주적 기본적 질서를 지키고, 영토를 보위하며 국민민생을 위해 노력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 4년을 총 점검하는 중요한 국정감사이고,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라는 비중이 크에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ABC국감으로 진행되었다.

① A - 초보자가 전문가를 감사하는 아마추어 국감

11)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2020. 12. 발표한 2020년도 국정감사 총괄평가 내용을 그대로 전재(轉載)함.

먼저, 4·15 총선의 새바람 열풍으로 제20대 국회보다 초선의원이 많아 151명에 달하고 있으며, 선거임박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위성정당이 생기는 바람에 총선에서 전문성보다는 대중 인지도와 감성을 중시해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 보충이 힘들었던 측면이 있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초선의원들을 위한 집합 워크숍 등도 개최하지 못하였고, 유례없는 비상시국에서 개최된 위기국감이었음에도, 위원들의 준비부족(?)으로 대정부견제를 하는 데에 아마추어가 전문가를 감사하는 것과 같은 양상이 되었다.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의원 질의의 특징»

■ 국정탐색형 국감

피감기관의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여 못하여 국정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탐색하는 듯이 피감기관에 대해 질의를 하다가 피감기관이 반대하거나 부인을 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라고 하며 질의를 맺음.

* 감사위원 질의예 : "종합적으로 파악해 주셔서 저희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의원실에 제출해 주세요"

* 피감기관 답변예 : "지금 답변은 하나하나 드리지 않고 저희가 정리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먼저 보시고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실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정견발표형 국감

감사위원이 뭔가 제도나 정책에 대한 의견말씀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피감기관이 검토해서 보고해 달라고 하는 방식으로 일문일답이 원칙인 국정감사의 취지가 무색해진 감사였음.

* 감사위원 질의 :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저희에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OO지원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게 사업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토론이다 보니까 장관님께 중간중간 질문을 드리기보다는 쪽 제 설명과 지적을 들어보시고 끝낼 무렵에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 피감기관 답변예 : 예 동의합니다.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금 다릅니다.

■ 영상시청형 국감

국정감사질의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2분정도 영상을 보고 관련 질의를 하는 국정감사 형태

* 감사장에서 주로 들리는 내용 : "영상 하나 봐 주세요" "영상 틀어 주세요" "뉴스 보도영상입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는데" "영상 하나 보시죠." "영상 보셨어요" "소감이 어때요" "왜냐하면 이 동영상은 한번 보시죠." "영상 한번 보시고. 지난해 2월에 주민 제보로 방송된 내용이거든요." "동영상 한번 봐주세요"

② B - 집권여당의 정책국감을 표방한 방탄국감

174석의 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여당이 국정감사를 정부견제 보다는 주요 정책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정부에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는 것은 국감계획 단계부터 자르고, 주요 증인 채택을 거부(?)한 것도 국민을 피로케 하는 '맹탕' 국감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국정감사의 사회권을 행사하고 있는 위원장이 모두 여당인 관계로 국정감사 진행에 있어 정부견제라는 야성을 찾기 어렵고, 적당히 균형을 맞추어서 넘어

가려고 하였다. 10월 23일에는 ‘1분 추가 질의’ 문제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고성·막말·파행의 추한 모습을 보였다.

«국감시작시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각오»

-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 “이번 국감은 국난극복, 민생, 미래전환, 평화를 4대 중점으로 정했다”며 “21대 국회의 첫 국감이 허위와 폭로로 얼룩진 막장, 정쟁 국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야당의 정쟁과 꼼수에는 원칙과 상식으로 대응하고 허위사실이나 가짜뉴스에는 팩트 체크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께 위로와 희망을 드리는, 일하는 국회의 진일보한 국감이 되도록 솔선수범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날 국감 사전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 20일은 야당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의원들을 향해 “국정 난맥상과 정권의 실정을 국민에게 적나라하게 알려 달라”고 주문했다. (출처 : 세계일보, 2020. 10. 6. A4면)

③ C - 1급 전염병인 국정감사 사상 초유의 코로나 위기 국감

코로나19 여파로 국감 회의장에는 2인 1개로 사용하던 마이크가 1인 1개로 배치됐으며 좌석마다 비말 투명 칸막이가 설치됐고, 집합 인원 50명 제한 권고에 따라 국감장 참석 인원을 줄이고 비대면 영상 국감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내려진 가운데, 마스크 착용, 칸막이 설치로 국정감사의 팀워크를 기대하기 어렵고, ‘홀어져야 한다’는 코로나19의 행동지침처럼 의원간 합동으로 집중적인 송곳질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10월 2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10분간 정회가 오후 8시 넘어서야 속개되었는데, 첫 보충질의를 한 윤재갑 의원이 확진자 접촉 인사가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다며 ‘모두 축하드립니다’라고 하기도 했다.
- 10월 26일 문화체육관광위 종합감사에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심덕섭 위원장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라 불출석했다.
- 10월 29일 국회운영위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는 외국 출장후 자가격리 중이라 청와대 기관증인들이 대거 불출석해 연기되기도 하였다.
- 11월 4일 국회운영위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에서는 김현중 안보실 2차장이 확진자가 나온 이건희 회장 빈소에 다녀온 것이 확인되어 국정감사에 참석했다가 도중에 자가격리되었다.

(2) 국감실망 ① 국감직전 북한군이 서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을 총격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고, 합동참모본부가 북한군이 사체를 소각하였다는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보도를 통해 접하여 충격을 받았는데, 국정감사 중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지지부진하여 실망했다.

② 법 집행을 총괄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부터 불거져 나왔

던 아들 군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렸는데, 검찰의 조사발표에 추미애 장관이 그동안 대정부질문 등에서 거짓말을 한 의혹이 있다는 야당의 지적으로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건 관련 증인을 신청하였으나, 여당이 반대하였고, 이 문제로 국정감사장마다 증인채택 논란과 여야 간의 감정대립으로 파행을 빚는 등 아쉬움을 자아냈다.

③ 지난해에는 조국 수호 쪽에서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규탄하면서 검찰 개혁을 부르짖는 초대형 장외집회(서초동집회)가 열렸고, 조국 파면 쪽에선 현 정부의 독선적 정국운영과 실정을 규탄하는 초대형 장외집회(광화문집회)를 개최여, 이러한 정반대내용의 집회는 조국 전 장관의 사퇴이후에도 계속된 바 있었다. 올해에는 10월 3일 개천절 경찰의 광화문 원천봉쇄(소위 ‘재인산성’ 쌓기)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크게 갈라진 모습을 보였다.

(3) 국감성과 ① 이번 국정감사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국감장에서 쟁점화되었다. 라임과 옵티머스 두 펀드의 피해금액은 2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투자자들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일인데, 이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해외 도피까지 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다. 혹시라도 이들의 범행을 도운 뒷배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모조리 찾아내 단죄해야 한다.

참고(정국 뇌관 '라임·옵티머스'②] 예견된 사고...서로 닮은 두 펀드, 데일리안, 2020. 10.15)	
<p>'라임 사태'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가 부실 운용되다가 지난해 10월 환매중단이 되면서 1조 원 이상의 피해가 난 사건이다. 청와대 및 집권여당 관계자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p> <p>사태의 중심 인물인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검거되는 과정에서 현금 55억 원이 발견돼 압수됐다. 이들은 55억 원을 5만 원권 지폐로 해외여행용 대형 캐리어 세 개에 나눠 담아 보관했다.</p> <p>«의혹/쟁점»</p> <p>'라임사태' 조단위 피해에 靑·與 관계자 연루 현금 55억원 캐리어로 옮기다 허리 다칠 정도 靑전 행정관과 민주당 이상호 위원장 구속돼 강기정·기동민·김영춘 등은 의혹 전면적 부인</p>	<p>'옵티머스 사태'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해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겠다는 1조2000억 원대의 시중자금을 끌어 모은 뒤, 부실운용을 하다가 올해 6월 환매중단된 사태다. 라임 사태에 뒤이은 사모펀드 사기 사건이라 할 수 있다.</p> <p>김재현 대표는 펀드를 부실 운용하는 한편 자신의 증권 계좌를 통해 수백억 원을 횡령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 돈이 정·관계에 로비 자금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라임 사태'와 빼다박은 양상이다.</p> <p>«의혹/쟁점»</p> <p>'옵티머스 사태'도 정계 '로비 자금' 조성 의혹 자산운용사 대표, 수백억 원 횡령 정황 포착돼 이낙연, 복합기 대여사용료 대납 의혹에 직면 이재명, 자문단 고문과 회동 사실 '메모' 거명</p>

② 4·15 총선 관련 선거관리 부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고, 유튜브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크게 회자되고 장외집회까지 열리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실

체적 진실을 밝혀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쉽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선수들인 국회의원들은 선거법을 위반해 무려 27명이 10월 15일 시효만료일까지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데, 감독·심판격인 중앙선관위는 밝혀진 업무부실과 해태에도 불과하고 아무런 책임이 없는 듯이 답변하는 것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다.

특히 우리나라 개표기를 사용한 키르기스스탄 총선 부정으로 인해 대통령이 사임하는 등 주변국에서도 파장이 커지고 있는바,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선거 부정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 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선거과정을 하나씩 정밀점검해서 부실을 살피고, 내년 보궐선거 등에서는 개선된 선거룰과 방식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행정안전위원회의 10월 12일 오후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의 질의에 중앙선관위 김세환 사무총장은 중국 국적의 개표사무원을 위촉하였고, 간식박스를 투표용지 보관함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 듯이 “적절하지는 않았지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규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하는가 하면, 국민의 힘 최춘식 의원의 질의로 “CCTV가 없는 사무국장실에 관외 사전투표함 보관” 경찰호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사실로 밝혀짐.

«속기록»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간사 질의 : 한 번 확인만 해봤으면 좋겠다. **주로 주장하는 것이,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했다는 말이 됩니까?**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답변 : **그거는 서울시내 구위원회 한 군데에서 개표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어느 단체가 있었습니다. 단체분들을 여러, 대여섯 명을 모셨는데 그 분 중의 한 분이 국적이 중국으로 되어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질의 : **이것 때문에 부정선거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개표소에서 투표지를 뺏상자에 보관했다는 것은 됩니까?**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답변 : **그거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그 사전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비례용지가 길다보니까 해당구위원회에서 투표용지보관상자 수요를 잘못 예측해서 넣다보니까 부족하다보니까 간식 먹었던 상자를 가지고 활용한 것인데요, 그건 뭐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법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법규위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뭐 적절하지는 않았습니디.**

○ 최춘식 의원 질의 : **지금 관외사전투표의 보관장소가 저희들이 집계를 낸 바에 의하면 사무국장이나 과장사무실에 보관한 곳이 한 250군데 되고, 그 다음에 회의실이 2곳, 조사실이 1곳, 문서고가 2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원칙을 세울 수 없습니까?**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답변 : **각 청사마다, 구시군 청사마다 제각각이어서 그게 여러 점이 있는데요,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접수되면 투입할 때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추천위원 참관 하에 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보통이 대다수가 사무국장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춘식 의원 질의 : **사무국장실에 하다 보니까, 여기에 CCTV설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답변 : **예.**

최춘식 의원 질의 : **우편물에 대한 문제점이, 우편투표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 경찰관이 호송을 하는 게 원칙이죠?**

최춘식 의원 질의 : **호송요청을 했던 실적을 보면 12.5%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호송이 이루어진 비율은 9.8%밖에 안됩니다.**

③ 이번 여름 태풍피해와 관련해 그 피해의 원인 중 하나로 알려진 태양광사업 등에 대해 제대로 감사하여 태양광사업 관련 부정이나 비리가 있다면 반드시 찾

아서 발본색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제기된 농지 잠식 및 국민연금을 위협하는 태양광 사업 열풍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재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 10월 7일 행정안전위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한정애 의원은 태풍피해와 관련해서 야당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지금 태양광 시설에 문제는 분명히 있다. 다만 언제 설치됐는지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밝히는 게 맞다"고 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시설 허가가 나왔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전력공사에서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징계받은 직원은 총 9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9월 28일 한국전력공사가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태양광 사업 관련 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91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단 2명이었던 징계 직원은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태양광 사업을 시작한 지난 2017년부터 2020년1월까지 총 91명이 징계를 받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금품 및 향응수수 해임자 퇴직금 정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26명이 해임됐으며 이들에게 모두 35억원의 퇴직금이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강릉)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3년간 여의도 면적 27배에 달하는 태양광이 설치됐다"며 "농지를 잠식하면서 태양광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농촌 태양광 사업은 농촌(일반) 태양광과 영농형 태양광으로 구분된다. 농촌 태양광은 농지 자체를 태양광 발전시설로 바꾸는 것이며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구조물을 세워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시설이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코퍼레이션 파트터쉽 펀드(코파펀드) 투자현황'에 따르면, 매물비용을 포함해 254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미국 태양광사업에 2,367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은 한국전력과 2013년에 각각 4,000억원씩 총 8,000억원을 출자해 해외발전소 및 연료 사업에 투자할 코파펀드를 조성했고, 국민연금은 현재까지 이 펀드에 2,367억을 투자하고 있다.

④ 10월 20일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무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뿐만 아니라,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회운영위원회에서까지 월성 1호기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정부와 감사원의 입장을 조명할 수 있었고, 그 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진 바, 이러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원전사업 등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5번에 걸친 부동산 정책을 내었지만, 감정원의 아파트 가격동향 기준으로 보더라도 서울·수도권이 올랐다는 사실과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의 양등으로 전세난민 등 피해가 극대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뿐만 아니라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대부분 상임위원회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가격, 조세문제, 투기문제, 교육환경, 전세보증금, 집합관리의 허점 등 다양한 질의와 질타가 이어졌다.

⑥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즉 K- 방역의 허점이 없는지를 조명하였고, 독감백신의 안전성 문제, 권력형 성범죄 및 성폭력 근절 대책, 미세플라스틱 문제,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비축제도의 개선 등 미흡하지만 국민의 먹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분야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⑦ 올해초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활동에 대한 왜곡을 넘어 죽이기 방송을 한 KBS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KBS 수신료 인상문제와 분리징수에 대해 찬반입장을 조명할 수 있었고, 허위보도로 KBS에 피해를 입힌 직원을 위해 KBS 예산 5천만원으로 특정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선임하여 지원한 문제, 적자운영을 하면서 연봉 1억원 넘는 직원이 전체의 48%에 이르는 문제, 통제 없는 조사연구수당 등 수당문제, 3개 복수 노동조합 간의 갈등문제, KBS 인사의 특정 노조 편향성 문제, 북한 방송에 대한 연간 4천만원 저작권료 지원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종합감사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55호 휴게실을 KBS 대기실로 사용하고 있다며 황제국감이란 항의를 받기도 하였다.

(4) 형식적 특징 이번 국정감사는 ① 한글날 등 법정공휴일, 준비휴일을 제외한 10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전체 705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수박 겉핥기식 국정감사를 할 수밖에 없고, ② 예전보다 밤 11시가 넘는 심야 국감은 줄어들고 있어 국정감사에 대한 열의가 없어 보였으며, ③ 더욱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되는 국정감사에서 여야 감사위원간의 감정대립, 감사위원간의 끼워들기와 막말은 국정감사의 본질을 훼손하였다.

④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문제도 심각한 현상 중의 하나인데, 이번 국정감사에선 엉뚱하게 의원들끼리 자료제출관련 논란이 벌어져 소중한 국정감사 시간을 허비하였다.

[의원끼리 고성인 오간 사례]

- 10월 8일 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위원장이 참고인으로 나와 진술을 하였는데,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송옥주 위원장이 간략하게 하시라고 말하고, 임종성 의원과 윤준병 의원 안호영 간사, 임이자 간사간에 무질서한 발언이 이어져서 장내가 소란하기도 하였다.
- 10월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강섭 법제처장의 부동산 자산 의혹 관련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는데,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 송기

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갑을논박하였다. 송기헌 의원은 "그동안 자료 제출 의견은 자유롭게 이뤄졌으나 감사와 관련 없는 내용은 감사 사안이 아니다"라며 "법에 되어 있는 대로 해야 한다는 김진애 의원의 지적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 여야의 싸움에 더하여 피감기관도 예년과 달리 팔장을 끼고 답변을 하다가 지적을 당하기도 하였고, 피감기관장의 답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입장차가 있어 의원들끼리 논란이 벌어져서 고성도 오가기도 하였다.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13일 국회 교육위에서 열린 교육부 소관 기관 국정감사에서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상대로 성희롱 피해자가 오히려 피해를 보는 등의 문제를 제기했는데,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반박하는 답변을 하자,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답변태도를 문제삼았으나, 조경태 의원(국민의힘)은 "피감기관을 압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충돌하기도 하였다.
- 10월 23일 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는 심야의 파행 외에도 구글의 인앱결제 30% 강제와 관련하여 여야당의 간사가 그간의 진행 과정을 설명하면서 여야당의 입장차가 있어서 소란스러워졌다.
- 10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월성1호기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회의록 제출 문제로 여야간에 기나긴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졌다.
- 11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정재 의원이 박원순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질의를 하자, 여당의 문정복 의원이 나서서 질의 중단을 요구하자 여야의원간, 위원장간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졌다.
- 11월 4일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에서는 김정재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의 민주당 공천과 관련해서 질의하자. 문정복 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질문 같은 질문을 하라"며 반발했고, 고성도 오갔다.

⑤ 외교통일위의 민주평통 국정감사에서는 어처구니없게 집권여당 여성중진의원에게 피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불법음란물 리스트’가 나와 공직기강해이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

■ 국감 자료제출관련 문제가 된 곳

-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양형위원회 등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이 국감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대법원에 대해 "피감기관이 입법 기관을 우습게 안다"고 성토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등 국감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체부에서 국감 이틀 전 USB(이동식 저장 장치)를 저희 방 입구 책상에 던져주고 갔다"며 "유감이고 실망스럽다"고 지적하였다.
-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의 산업통상부 종합 감사에선 이철규 간사는"오전에 감사원에 제출한 문서와 그다음 청와대와 주고받은 문서 또 컴퓨터에서 삭제된 파일 444개에 대해서 목록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제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런 양해도 없습니다. 이러니까 자꾸만 의혹을 받는 겁니다. 결국 자료가 없으니까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 위원에게 정부가 자료를 통제해 버리면 무엇을 근거로 합리적인 감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자료제출을 촉구했다.

나. 국정감사 질의 횟수 및 질의응답 시간

(**‘국민의힘’ 이 ‘더불어민주당’ 보다 국회의원당 평균 4회, 25분 정도 많아
질의총량은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이 450시간으로 국민의힘 311시간보다 많아**)

(1) 총괄 : 질의횟수 평균 24.3회, 질의응답 2시간 45분 41초

개별 국회의원의 질의응답시간을 분석하기 위해 국정감사 진행도중 국회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및 자료요구 발언, 그리고 피감기관의 업무보고를 제외한 감사위원이 실제 국정감사를 한 질의응답(증인신문시간 포함)시간을 조사해본 결과,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한 감사위원당 평균 질의횟수는 24.3회였으며, 질의응답시간은 약 2시간 45분 41초로 잠정 조사되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청가 및 결석으로 한 번도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상현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덕흠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을 제외한 수치이다.

(2) 질의횟수 최고는 환경노동위원회, 저조한 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의 질의횟수가 가장 많은 위원회는 환경노동위원회로 한 감사위원회당 평균 32.2회 질의하였고, 1인당 평균 질의응답시간은 3시간 59분 5초였다.

국정감사 일정이 적었던 보건복지위원회는 1인당 평균 질의횟수가 18.7회였고, 질의응답시간 평균은 2시간 12분 5초였다.

운영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원회 중 유일하게 환경노동위원회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질의횟수 및 질의응답시간이 국민의힘 의원보다 많았다.

(3) 질의횟수 시간 격차 가장 큰 위원회 :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소속의원의 질의횟수 및 질의응답시간에 가장 많은 격차가 있었던 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9회 질의를 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은 35.6회 질의를 하였다.

(4) 질의시간 총량 :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더불어민주당이 우세

숫적으로 우세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응답시간 총량은 14개 상임위원회에서만 살펴 보더라도 대략 449시간 55분으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응답시간 311시간 21분 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민주당 소속 위원장들도 때때로 질의를 한 경우도 있었으므로 질의응답시간 총량은 더 커졌다.

(5) 국회운영, 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를 살펴 보면, 전체 의원의 질의횟수는 평균 4.3회였고, 질의응답시간은 26분 11초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횟수는 3.93회 였고, 질의응답시간은 23분 54초인 반면,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횟수는 4.6회였고, 질의응답시간은 28분 21초였다. 여성가족위원회는 1일 위원당 평균질의횟수는 3.1회, 평균 질의응답시간은 19분 26초였다.

《2020년도 감사위원의 질의횟수 및 질의응답시간 현황》

위원회	전체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의원		
	위원수	질의횟수평균	질의시간평균	위원수	질의횟수평균	질의시간평균	위원수	질의횟수평균	질의시간평균
법제사법	17(18)	24.4	2:59:22	10(11)	22.9	2:50:02	6	26.2	3:12:42
정무	23(24)	27.57	3:04:17	13(14)	25.54	2:51:59	8	29.63	3:16:12
기획재정	25(26)	21.8	2:36:46	14(15)	20.9	2:29:15	9	22.8	2:48:50
교육	15(16)	27.1	2:56:50	8(9)	27.0	2:52:09	6	27.3	3:02:1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19(20)	29.2	2:50:54	11(12)	24.9	2:26:36	7	35.6	3:25:37
외교통일	20(21)	21.3	2:30:35	10(11)	18.8	2:14:07	7	25.9	3:01:49
국방	16(17)	21.9	2:40:56	9(10)	19.8	2:23:26	6	26.8	3:19:16
행정안전	21(22)	26.0	2:39:15	12(13)	24.5	2:30:51	8	27.4	2:48:38
문화체육	14(16)	23.9	2:40:29	7(8)	22.1	2:30:29	6	28.2	3:03:0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18(19)	26.7	3:07:09	10(11)	23.0	2:41:16	8	31.4	3:39:3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28(30)	19.3	2:20:04	16(18)	18.1	2:11:45	10	21.1	2:31:33
보건복지	23(24)	18.7	2:12:05	14(15)	18.2	2:09:24	7	19.9	2:20:55
환경노동	14(16)	32.2	3:59:05	8(9)	32.9	4:07:13	5	30.4	3:35:14
국토교통	29(30)	20.0	2:01:54	17(18)	18.5	1:53:33	10	22.1	2:13:41
계	282 (299)	24.3	2:45:41	159 (174)	22.7	2:35:09	103	26.7	3:01:22
주의	1. 전체의원과 민주당의 숫자는 위원장과 전일정 국감불참의원수를 뺀 위원수로 이번 통계를 한 의원이며, 위원수의 ()안은 정원임. 2. 법사위는 10월 23일 오후 군사법원 국정감사를 제외한 수치임.								

다. 눈에 띈 국정감사 쟁점과 상임위 국감 약평 《상임위 무순》

지난해 국감에서는 조국 법무부장관 의혹과 관련된 질의가 교육위, 법사위, 과학위, 기재위, 정무위 등에서 크게 다뤄졌다. 올해에는 여러 위원회에서 국감 끝날까지 라임·옵티머스사태가 크게 이슈화되었다. 직접 관련은 없었지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투자와 관련한 안전성을 조명받기도 하였다.

《라임 및 옵티머스사태가 등장한 국정감사장 일부》

위원회	대상기관	질의 내용
법 제 사 법	12일 법무부	옵티머스 의혹에 대해 특검을 해야 한다.
정 무	12일 금융감독위	옵티머스와 라임 특혜 의혹
	13일 금융감독원	은행권 등 압력행사 여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12일 한국농어촌공사	공사가 옵티머스자산운용관련 펀드에 사내근로복지기금 30억원을 투자해 손실점검
행 정 안 전	12일 중앙선관위	옵티머스의 선거후보자에 대한 편의제공 의혹과 선거법위반 수사 여부
과 학 기 술 방 송 통 신	15일 한국방송공사	2017년 옵티머스 펀드에 670억원의 기금을 투자해 몰매를 맞고 있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전임 원장과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을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
법 제 사 법	15일 감사원	라임, 옵티머스 관련 금융기관 감독 부실 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15일 한전 등	남동발전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16일 농협중앙회	옵티머스 펀드 전체 피해액(5151억원)의 84%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의 절차상 하자과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
법 제 사 법	19일 서울고검 등	라임, 옵티머스 수사상황 등
법 제 사 법	22일 대검찰청	검찰총장의 라임 수사 방해여부
기 획 재 정	23일 기획재정부 종합감사	라임, 옵티머스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여러개 기관에서 투자한 사실 점검
외 교 통 일	26일 외교부 등 종합감사	라임, 옵티머스 사건 관련 교민 피해 구제 대책
법 제 사 법 위	26일 법무부등 종합감사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와 관련돼서 결국 라임 사건, 옵티머스 사건의 실질적인 수사 또 로비 의혹 라임 사건 관련된 강기정 전 수석 관련, 검사장 출신의 수임의혹 등 라임·옵티머스 국감 방불
국 회 운 영	30일 국회사무처	국회사무총장의 라임, 옵티머스 연루 의혹
	11.4. 대통령비서실 등	라임 옵티머스 피해자 구제 및 보호 대책, 청와대 인사 연루 의혹

(1)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이번 국정감사 전체를 국회에서 진행하는 초유의 모습을 보여 주어 호평을 받았으나, ‘추미애’ ‘윤석열’ 국감이라고 할 정도로 첫날부터 추미애 법무부장관 관련 증인 신청논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간의 갈등’ 이 벌어졌고, 결국 법무부 국정감사는 일부 파행되기도 하였다. 국감장마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헌법재판소 개혁, 감사원 개혁 등 개혁의 목소리는 나왔지만 개혁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지 알기 어려웠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이어 10월 22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심야까지 이어진 발언(법무부장관의 부하 아니다 등), 월성1호기 감사 결과가 이슈화되었다. ‘라임사태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육중 입장문’을 계기로 관련 의혹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산됐고 이슈마다 여야간 대립을 보였다. 10월 19일 검사장 출신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여권 관계자와 같은 이름이 적힌 옵티머스 투자자 명단을 국정감사에서 공개해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등 21인 10월 21일 국회의원 유상범 정계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음>

(2)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는 서해상 우리 공무원 피살사건 증인문제로 국감 계획서 채택부터 파행을 빚었으나, 국정감사는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국방위원회가 결의문채택 등 감사직전 벌어진 서해상 공무원 총격 피살과 관련하여 강한 분노감을 표출했었으나, 정작 국정감사장에서는 정보유출 문제, 월북여부 등이 더 많이 다루어졌고, 이 사건에 대한 지칭도 여야 간의 온도차가 있었다.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는 BTS 병역관련 화제가 집중되기도 하였으며,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는 남영신 총장이 ‘5·18 사과’를 하여 주목받기도 하였다.

다만, 국정감사 기간 중 일정을 할애해 헬리콥터와 고속합정을 타고 최전방 현장점검을 하는 것은 여전하였다.

《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북한의 총격 등 무력도발행위’ 에 대한 표현 》

(9.24. 국방위 전체회의 규탄결의안 제목)

성명	직책	최초언급시	언급시 사건 표현 등
서 욱	국방부장관	인사말	최근 발생한 서해상 우리 국민 사망사건
한연수	국방부기획조정실장	업무보고	서해상의 우리 국민 사망사건
이채익	위원(국민의힘)	의사진행발언	공무원 피살 사건
김병기	위원님	주질의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
김병주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주질의	이번에 일어나서는 안 될 또 너무나 불행한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
강대식	의원(국민의 힘)	주질의	피격된 A씨
김진표	위원(더불어민주당)	주질의	관련 질의 안함
신원식	위원(국민의 힘)	주질의	우리 국민 피살 사건
박성준	위원(더불어민주당)	주질의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
윤주경	위원(국민의 힘)	주질의	이번에 해수부 공무원을 피격한 이것
설 훈	위원(더불어민주당)	주질의	언급 없음
하태경	위원(국민의 힘)	주질의	신원식 위원 질의하신 거
홍영표	위원(더불어민주당)	주질의	이번에 어업지도원 실종 사건 그리고 비극적인 그런 사망 사건
황 희	위원님(더불어민주당)	주질의	질의는 했지만 명시적으로 표현안함
김민기	위원(더불어민주당)	주질의	서해 우리 국민 피격사건
홍준표	위원(무소속)	주질의	우리 공무원이 이렇게 피격당하고 소각당하는 사태 (두번째는 피격 소각 사건)
한기호	위원(국민의 힘)	주질의	이번 만행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감사종료시 요약정리	공무원 피격사건

※ 통계자료 출처 : 2020. 10. 7. 수.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국회방송 생중계)

(3)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송영길**)는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발언과 강경화 외무부장관 남편의 해외여행, 북한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대사 입국 사실 공개 논란, 서해상 우리 국민 피격사건시 외무부 장관 NSC회의 패싱사건 등이 집중 조명되었다.

1995년 재외 공관 국정감사 이후 첫 국내에서 외교공관에 대한 화상 국정감사를 전개하였다. 실시간으로 화상국감의 내용이 전해져 재외공관 국정감사의 내용이 업무보고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10월 14일 재외공관 국정감사에서 재외공관이 라임 사기펀드 주요 피의자가 적색 수배자가 되어 있음에도 검거하지 못하고 방치하였다는 질타가 실시간으로 전해지기도 하였다.

북한군에 의한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살인사건과 한미동맹, 대중·대일관계 등 동북아시아 평화정착을 위한 대내외적 안보지형변화와 역학관계에 대한 논의가 점검되어 정책감사를 하였다. 여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와 대책을, 야당은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해 문제제기와 대책을 주문하였다.

다만, 감사도중 현장 시찰을 하였고, 현장시찰도 여야간의 입장차이로 인해 여당은 당초계획이었던 DMZ 방문을 하였고, 야당의원들은 인천시에 위치한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피살공무원 수색 현장을 둘러보았다.

(4)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코로나19 추경의 실효성, 소득주도성장, 정부의 재정준칙 발표 등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찬반입장이 쟁점이었다. 10월 5일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고, 기획재정부 2일차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주식보유액 3억원 이상을 대주주로 간주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일제히 비판하기도 했다. 5년간 160조원이 투자되는 뉴딜정책의 적정성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법인세 논쟁, 세금 탈루, 짝퐁 유입문제, 통계문제 등 지난해 있었던 질의들은 반복되었다.

(5) 정무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사모펀드와 관련한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여권 인사 연루설이 제기되고 있는 옵티머스 사태를 집중 추궁했고, 금융위는 이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금융위가 반대 의견을 내지 않은 점, 공매도 제도 방향,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 등을 집중 추궁했다. 공정거래위, 소비자원 등 국정감사에서는 구글 30% 통행세 조치 주문, 뉴스 조작 의혹 등이 쟁점이 되었다. 조성욱 공정거

래위원장은 쇼핑·동영상 부문에서 검색 알고리즘을 자사에 유리하게 바꿨다가 적발된 네이버의 행위와 관련해 “알고리즘 조정·변경이 다른 분야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정무위원회는 국정감사 일정 중 36개 기관에 대해 조명하였으며, 여야간 합심하여 정책 국정감사를 전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6) 농림수산물해양수산물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그동안 여야간 정쟁이 많지 않았던 위원회였으나, 국감 첫날부터 文대통령 농지법위반과 관련하여 “투기 아닌데..야멸찬 국감”이라는 논란이 있었고,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유가족의 증인채택, 해양경찰청장의 위증문제, 옵티머스 펀드 투자경위 등 관련 여야간 뜨거운 논란이 계속 되었다. 둘째날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국감계획을 바꿔 해양경찰청 국정감사까지 동시에 하였으나, 해양경찰청장의 답변 회피로 인해 서해상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월북여부가 나온 경위 등에 대한 진상파악을 하지 못하였다. 다른 상임위 국정감사보다 일찍 마무리되었고, 다른 국감의 내용은 지난해와 비슷하였다. 해양수산물산업의 발전과 소관 기관의 낙하산 인사, 특혜 지원의혹, 모럴 해저드 등이 조명되었다.

(7)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교육의 좌편향성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민주화운동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학력격차 문제 등이 쟁점이었다. 첫날 교육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6·25가 북침이냐, 남침이냐”고 물은 것이 사상검증 논란으로 비화되기도 하였다.

교육위는 15일 서울, 경기, 인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원격수업과 돌봄관련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고,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감사관 자녀 시민감사관 위촉 논란과 제주도연수원 건립 문제 등이 문제되었다. «11년 연속 파행을 기록한 문제의 상임위였으나, 다행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는 파행성 정회가 없었음»

22일 서울대 등 국립대법인 국정감사에서는 학내 권력형 성범죄 근절, 연구윤리 강화 방안, 인사·재정 운영 개선,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마련과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등 정책 국정감사를 전개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장이 직접 국정감사 시작 전에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제3의 장소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주지시켜서 감사장 질서를 바로 잡는 모습도 보여 주었다.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는 10월 14일 국감휴무일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혹’ 관련 네이버 항의방문을 하는 등 ‘네이버 이슈’가 불거져 나왔으며, 탈원전 대책, 미래 먹거리대책, 원자력 안전, 가짜뉴스 근절책, 연구기관의 모럴해저드 등이 조명되었다.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화상국감을 진행하였는데, 피감기관장이 움직이지 않아 화면정지 소동이 벌어지는 등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위원장이 종이 없는 국정감사를 추진하였고, KBS 국정감사에선 KBS의 빚투성이 방만경영이 질타되었고, 화제의 나훈아 콘서트도 등장하였으며, KBS의 검언유착 오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10월 23일 자정이 가까워진 무렵 박성중 의원과 이원욱 위원장간 설전을 파행성 정회가 벌어진 것은 큰 오점이었다.

반면, 과방위에서는 경북대 사고 조명, 금융사기를 벌인 옵티머스 사태가 거론되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누적 1060억원을 투자한 것이 밝혀졌다. 한수원이 월성1호기 가동에 대한 경제성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 것도 드러났다.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전반전에 현장시찰 1회를 하였고, BTS 병역특례 등이 조명되었다. 다른 상임위보다 비교적 조용한 가운데, 코로나19 문화체육계 피해(약 11조원 추정)대책, 고궁 문화재 보호, 문화체육정책, 코로나사태 속 관광위기 극복정책에 대해 조명하였다. 야당의원들은 위원장의 질의시간 배분과 관련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우에는 다른 상임위원회와 달리 종합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문화재청장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 감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과 요구한 사항에 대해 사후조치 내역을 직접 구두로 보고 하는 시간을 가져서 국정감사의 전체 윤곽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10)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첫날 ‘재인산성’으로 불리는 경찰의 개천절 광화문 봉쇄조치에 대한 찬반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차벽 설치하는 경찰로서도 보기에선 좀 그렇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지 않나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과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을 조명하였고, 4·15총선거 관련 재개표문제 점검, 수사권 조정관련 경찰개혁, 선거제도 관련 문제가 쟁점이었고, 고층 빌딩 화재와 관련하여 소방문제가 점검되기도 하였

다. 최초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 국정감사를 외부에서 할 계획이었으나, 대폭 수정하여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 모두 국회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4·15 총선 선거관리 부실문제가 집중 제기되었고, 야당에서 선거부정 의혹까지 제기하며 빠른 재검표를 요구하자 선관위측에서도 ‘대법원의 재검표 결정이 빨리 돼, 의혹이 해소되길 학수고대 한다’ 고 밝히기도 하였다.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관련 서울시 대처 문제가 질의되었고, 서초구의 재산세 인하방침에 대한 서울시의 태도도 쟁점이 되었다. 지난해와 같이 여야간 막말소동 등의 파행은 없었다.

(11)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진선미**)는 첫날부터 김현미 장관의 조문외교로 인하여 국정감사가 미뤄졌다. 도로공사와 토지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모럴 해저드가 부각되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문제도 크게 조명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에 앞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되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해수부 공무원을 추모하는 추모곡을 틀어 화제가 되기도 한 가운데, 여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최근 집값 급등과 전세난 등 부동산 문제들이 문재인 정부 책임인지 박근혜 정부의 책임인지를 두고 고성인 오갔다.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사 요금소 요금수납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 지적이 이어졌다. 10월 16일에도 나훈아의 ‘테스형’ 이 나왔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이 힘들다” 고 질타하는 과정에서 김현미 장관도 갑작스런 테스형 상영에 웃음을 터트리기도 하였다. 김현미 장관에게는 전세를 포함한 부동산가격 앙등에 대한 국민적 피해와 관련하여 흥남기 경제부총리 사례가 질의되기도 하였다.

(12)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두고 여야가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야당이 K방역이 성공했다고 볼 수 없고, 정부가 유독 집회에만 방역을 위해 과잉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여당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한다며 맞서기도 했다. 코로나19 관련 백신개발, 독감백신 유통과정 문제, 국민연금 개혁, 문-케어 등의 정책국감을 5일 동안 실시하였다. 서울대병원장 등 대학병원장들이 10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미응시 문제’ 관련 사과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의대생들의 재응시 기회 부여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었다.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상온노출’ 사태에

이어 '백색 입자' 사태까지 더해진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품질 관리를 놓고 질타가 이어졌다.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임상시험 등을 심사해 인허가 서류를 검토하는 공모직 직원들이 정보 유출 및 금융 투자 조사 등 이익충돌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13)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코로나19로 인해 쓰레기가 산을 이루고 미세 플라스틱 공포가 만연되어 있는 가운데,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관의 원손선서만 화제가 되어 아쉬웠다. 고용노동부 국감은 이스타항공의 대량 해고사태 책임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보안검색 요원들의 잘못된 직접고용 문제에 대한 질타가 있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국공 사태와 관련한 '청와대 개입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올해에도 기상청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여름기상 예측이 실패한 데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기상청 체육대회 날에 비가 온다는 농담 섞인 발언부터 기상청장은 거취를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외에도 이번 국감에서 홍수피해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순배출 제로를 위한 방안, 연초박으로 인한 집단 발병에 대한 법적 책임, 담배필터의 미세플라스틱 문제, 불법폐기물 적치 대책 및 매립량 감축방안 등과 고용분야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확대 방안, 산업재해 반복발생 문제와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와 관련된 지침 준수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택배기사의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한 시찰도 병행하였다.

(1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에서는 160조원이 투입된 '한국판 뉴딜' 과 함께 태양광·원자력발전(탈원전)을 둘러싸고 여야 간 격돌이 이어졌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인 살리기 정책에 대해 조명을 하였고, 여당의 고민정 의원이 야당의 한무경 의원의 질의에 대해 '빨간색 안경론'을 제기해 파행성 정회를 하기도 하였다.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 삼성전자의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의혹, 브랜드K 론칭 행사 수익계약 의혹, 중소벤처기업부의 이벤트 행사와 TV광고 문제, 배달의민족(배민)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앱 서비스 '배달통'의 시장 점유율 조작의혹, 중형슈퍼마켓인 '식자재마트'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었다.

이외에도 코로나 시대 온라인 환경 맞춤형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의 마련, 원전과 산업단지의 안전 관리 강화 및 비정규직

처우 개선, 공기업의 경영 투명성 제고와 재무구조 개선 방안 마련 등의 산업통상 자원 관련 정책과 소상공인 지원예산 증가에 부응하는 정책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공공기관 운영의 공정성 제고 필요성, 온누리상품권 유통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금융 활성화 필요성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방안도 제시되어 심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다만, 10월 22일 20일에 발표된 월성 1호기 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여야간의 입장차로 고성이가 오는 등 파행이 빚어지기도 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15)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태년)에서는 10월 29일 국정감사가 청와대 증인들의 대거 불출석으로 11월 4일로 연기되었는데, 11월 4일 노영민 비서실장의 ‘살인자’ 발언으로 국정감사의 대미를 마지막까지 ‘정쟁 국감’이란 혹평을 면치 못하게 했다. 대통령 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공천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8·15 광복절 집회 주동자는 살인자’ 발언 등을 두고 충돌했다. 다만 지난해에는 강기정 비서실장의 발언 때문에 파행성 정회를 하였는데, 정회를 하지 않고 진행이 이루어졌다.

(16)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정춘숙)에서는 10월 27일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 시작부터 국고보조금 횡령·사기의혹 관련한 윤미향 사건과 박원순·오거돈의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와 관련된 증인·참고인을 채택을 두고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졌으나, 단 1명도 채택하지 못한 채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성불평등 심화 대책, 여성폭력방지정책과 관련하여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대책, 아동돌봄 서비스 자기 부담액 축소 및 장애아동 등 맞춤형 아이돌봄을 위한 지원대책, 청소년쉼터 확대 등 가출 청소년에 대한 보호 지원 강화 등에 대한 질의가 많았고, 2일차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속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시찰하였다.

라. 마구잡이 피감기관 선정, 전문성 부족 및 형식적 국감 여전

조선이 151명이나 되는 제21대 국회는 무려 705개(지난해 788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피감기관을 압도하는 전문성 있는 질의보다는 나열식 질의가 대종을 이루었다.

상대방 의원에 대한 질의도중 끼어들기 등의 구태가 답습되기도 하였다. 법제사법 위원회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끼어들기를 하여 결국 여 야 당 고성으로 위원장이 ‘장마당이 아니지 않으나’ 며 정회를 하는 소동이 벌어지 기도 하였다. 다만 지난해와 같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위원간의 막말로 인해 윤리위 제소까지는 가지 않고 있다.(지난해 10월 8일 민주당 의원 20명이 여상규 법사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위 제출)

조선의원들의 업무미숙으로 인해 피감기관의 ‘이순간만 지나면 된다’ 는 식의 뻔뻔스런 답변에도 의원들이 재반박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났고, 이에 모니터위원들은 ‘국회가 농락당하고 있는 듯하다’ 는 평가를 하였다.

정부가 국정감사를 통해 1년에 한 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질타’, ‘호통’ 을 듣고, 예산 낭비 및 부실한 정책집행에 대해 점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시정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매년 같은 질의가 반복되는 ‘붕어빵’ 국정감사가 되고 있는 것은 피감기관이 국정감사기간만 지나면 된다고 생각하여 안이하게 답변하였고, 국회의원들도 질의만 하고 후속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왔 기 때문이다.

이제 국회가 제도적으로 시정조치요구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실명제(질의한 의원표기) 및 위원회별로 평가팀을 만들고, 국정감사 전에 시정처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위원회 차원에서 직접 점검하도록 하여 매년 반복질의 되는 일이 없이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감사 중 질타를 통해 허위 시정처리보고를 발본색원을 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시정조치사항에 대해 질의한 의원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보니, 정부의 시정조치 보고에 대해 질의한 의원도 관심이 없고, 질의하지 않은 의원은 더욱 관심이 없으며, 상임위에는 담당하는 사람도 없다보니, 시정조치 허위보고가 무책임 하게 다음 해에 다시 질의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국감이 부정부패 면죄부가 되는 오·남용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정조치 내지 예산낭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555.8조원 (2020년 본예산 대비 8.5%증가, +43.5조원)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심사와 직접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증인채택 문제 등으로 인해 의사진행 발언만 풍성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는 10월 6일 첫날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을 빚어 여야간 의사진행만 계속 이어지다가 겨우 진정한 후에 본 질의를 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자괴감 섞인 말이 나오기도 하였다.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송영길)는 첫날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채택 문제로 오전에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졌고,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첫날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증인채택 문제로 의사진행발언이 계속 되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첫날 증인채택 회의 관계로 국정감사가 조금 지연된 후 시작되기도 하였고,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에서도 네이버 관련 증인채택이 논란이 되었다.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정춘숙)에서도 국고보조금 관련 증인채택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참고인 채택이 무산되어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졌다.

■ 증인 채택 불발 사례

- 국방위 :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아들 관련 10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민주당이 모두 거부하면서 채택에 실패하였다.
- 법사위 : 추미애 장관 아들 등 증인으로 거론됐지만 민주당 반대로 무산되었다.
- 외교통일위원회 : 서해상에서 북한의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가 국감 증인을 자청했으나, 민주당은 이씨가 국방위나 농해수위에서 증언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입장으로 거부되었다.
- 과방위 :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혹 관련 증인 신청을 한 바 있으나 불발되었다.

■ 증인과 참고인 인사들의 불출석(사유서 제출) 사례

- 보건복지위 : 추 장관 아들의 무릎 수술을 집도한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 A씨
- 과기정통위 : 구글코리아의 낸시 메이블 워커 대표, 참고인으로 채택됐던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인기 캐릭터 핑수 측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계관의 일관성과 신비감이 지켜져야 한다'며 불출석통보
- 환경노동위 : 증인으로 채택된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 정무위 : 서경배 아모레 퍼시픽 회장은 코로나 19 의심증상으로 불출석 통보

바. 국회사무처의 코로나 방역 가이드라인은 옳은가

국회사무처에서 이번 국정감사 관련 방역 지침으로 50·50·50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각 상임위원회로 내려 보냈다.

10월 7일 국방위원회의 민홍철 위원장은 국회사무처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국정감사의 기관증인들을 다른 장소에 분리 대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10월 8일 첫 국정감사를 하는 국토교통위원회의 진선미 위원장은 “국감장 내에는 기관장 4명과 증인 이외 출입을 금한다” 며 “또한 10명 내외의 의원들만 순서대로 질의에 참석하고, 그 외 인원은 국감장 근처 행정실로 이석해 달라” 고 말

하기도 했다.

피감기관은 책임자가 답변을 하면 되지만, 감사위원들이 감사장을 이탈하여 자리를 뜨는 것은 옳지 않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각 시·도와 경찰청 국정감사를 지역 현지가 아닌 국회에서 한꺼번에 하기로 해 국감의 현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으나, 반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국감장 마련과 의전, 방역 등 국감 준비 시름을 크게 덜게 됐다며 반기는 분위기라는 인터넷 기사가 뜨기도 하였다.

국정감사에 임박해 코로나 방역지침이 내려졌는데, 이러한 방역지침으로 코로나19가 예방될 수 있는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찾기는 어려웠다.

위기나 재난시 국정감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매뉴얼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거기에는 합리적으로 기관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 놓아 지금처럼 잡화점식 감사보다는 선택과 집중의 국정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

사. 제21대 국회 2차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반드시 준수하고 개선돼야

(1) 시정조치 요구사항은 끝까지 파헤쳐 ‘붕어빵’ 국감이 되지않게 해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질의한 의원이 그 내용이 시정되었는지를 직접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실명제’를 도입하고, 복합적 이슈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의 ‘시정조치팀’ 가동, 국회내 국정감사 및 조사의 시정조치 사항 이행을 ‘실효적으로 평가하는 조직 구성’ 등 국회가 제도개선을 통해 국감지적사항을 묵살해온 국정감사의 적폐를 근절시킬 것을 촉구한다.

시정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매년 반복된 ‘붕어빵’ 국정감사가 되고 있는 것은 피감기관이 국정감사기간만 지나면 된다는 안이한 사고로 대처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정감사위원이나 감사반장(위원장)이 시정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국감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번 2020년도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종합감사에서 국정감사 도중 국회의원이 요구한 내용과 시정을 촉구한 내용에 대해서 피감기관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구두로 보고하도록 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 10월 2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도종환 위원장 : 오늘은 먼저 그동안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종합감사 때까지 보고 또는 제출할 것을 요구한 사항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문화재청장의 후속조치 현황에 대해 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이명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은 매년 국정감사가 연례행사처럼 진행되고 있다면서 동료 의원인 박재호 의원이 발간한 ‘국정감사 사후 조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피감기관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할 것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 10월 26일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종합감사에서

이명수 위원은 저도 몇 차례 국정감사를 해 보지만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국정감사가 혹여 연례적인 행사가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국회로서 또 헌법에 명시된 중요한 기능이고 또 행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업무 전반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활용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의 연례행사처럼 끝나고 마무리되면 모두 함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께서 ‘국정감사 사후조치 문제점과 해결방안’ 이런 보고서까지 냈습니다만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행정부에서는 정말 이런 때 고칠 것 고치도록 보완할 것 보완하자 이런 계기로 활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제 국회가 제도적으로 시정조치요구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실명제(질의한 의원표기) 및 위원회별로 평가팀을 만들고, 국정감사 전에 시정요구처리사항에 대해 위원회 차원에서 직접 점검하도록 하여 매년 중복질의 되는 일이 없이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감사 중 질타를 통해 허위 시정처리보고를 발본색원을 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시정조치에 대해 질의한 의원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보니, 정부의 시정조치 보고에 대해 질의한 의원도 관심이 없고, 질의하지 않은 의원은 더욱 관심이 없고, 상임위에는 담당하는 사람도 없다보니, 시정조치 허위보고가 무책임하게 다음해에 다시 질의되는 현상이 없어지질 않고 있어 국감이 부정부패 면죄부가 되는 오·남용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2) 국정감사법 제2조 준수(정기국회 전 30일), 못 지킬 것이면 개정해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라고 하고 있는바, ‘정기 집회일 이전에 30일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나, 한 번도 지키지 않고, 예외규정을 이

용하여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칙 중심의 사회를 만들려면 국회부터 원칙을 준수하거나, 아니면 지키지 못할 조항이면 원칙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외교통일위원회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생산적으로

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코로나19 국정감사로 화상 국정감사로 진행되었는데, 아주 효율적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 잘 보장해 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음에도 이렇게 해외현지 국정감사가 아닌 화상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금껏 문제가 되고 있는 비용 낭비, 국감의 비효율성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4)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부실, 지연 근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서 서류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주무장관에게 해명요구,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요구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거부, 부실, 지연이 여전한 것은 문제이다.

매년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자료제출에 거부나 부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넘어가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제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감기관의 입장에서는 강제력을 동원하기 전까지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어서 입법자인 국회의원이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 10월 16일 국토교통위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이종배 위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토부에 국감 자료를 요청하면 자기들에게 좀 불리한 자료는 어떻게 해서든지 안 내려고 버티기를 하고 마지막까지 수차례 요구를 하고 별 수단을 다 강구할 때 마지못해서 제출하는 그런 일이 상당히 많다. 아직까지도 자료를 제대로 안 내고 있는데 조속히 요구하는 자료들은 빨리 내줬으면 좋겠다”며, “다른 의원실에서도 그런 불평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강조하고, “국감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그런 중요한 행사”인데 “이런 국감을 무력화시키려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위법행위로서 또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로서 마땅히 지탄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10월 7일 환경노동위의 환경부 국정감사

지금 국감을 준비하면서 장관님, 환경부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너무 심하다는 그런 의견을 계속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저희 국정감사도 보면 환경부하고 별도로 소속기관들 국정감사를 따로 치르는데요, 소속기관에 기본 자료를 요청하면 대부분 ‘환경부에서 일괄해서 제출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 거면 뭐 하러 국정감사를 별도로 치르겠습니까? 심지어 한 산하기관에서는 ‘왜 자료 제출이 이렇게 부실하느냐’라고 여쭙보니까 저희 방 비서관에게 ‘환경부에 말 좀 잘 해 달라’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역으로 저희한테 이렇게 부탁할 정도입니다.

○ 10월 7일 교육위의 교육부 국정감사

곽상도 간사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피감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절하고 거부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시간이 길어서 안 된다고만 하실 것이 아니고 당연히 교육부더러 내라고 하든지 경희대 쪽에서 내라고 하든지 자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0월 7일 기획재정부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추경호 의원은 “뉴딜 관련해서 160조 투입해서 190만 개 일자리 그 산출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오전 중에 달라 했는데 전혀 오지를 않는다”면서 계속 자료 주문을 하였으나, 종합국정감사때까지 자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정감사**

조명희 의원은 “해마다 6700억 원 수신료를 국민에게 거둬들이고 759억이라는 적자를 낸 KBS가 매년 북한에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국민 돈 빼내서 북한 호주머니에 찔러 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영업상 비밀이라고 제출을 못 한다고 합니다.”며 조치를 요구했다.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정감사**

황보승희 의원은 “10월 9일 KBS가 방심위에 제출한 검언유착 오보 관련 의견 진술서를 요청했는데 ‘KBS의 손을 떠났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하였다”며 조치를 요구했다.

(5) 적절한 피감기관 선정으로 ‘수박 겉 핥기’ 식 국감 종식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 705개(지난해 역대 최다인 788개) 기관을 국정감사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였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이지만 국정감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국정감사의 위세를 보이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과도한 피감기관 선정으로 인해 일반 증인은 물론 피감기관에 대해 질의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고, 서면으로 대체하는 등으로 수박 겉 핥기식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제21대 국회 2차년도에서는 피감기관 선정과정에서부터 신중하고, 저인망식 피감기관 선정보다는 문제가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집중과 선택의 관점에서 피감기관을 선정해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2. 국회의원 윤리특위 활동 : 처리건수 '0' 건으로 위원장, 간사 감점

= 윤리특위 정상화를 위해 윤리특위 구성원부터 초재선보다 여/야당 중진위원이 나서야 =

징계청구는 많은데, 윤리특위는 개점휴점해
제21대 국회, 징계처리 사실상 '0' 건 - 막장(?) 국회 조장
국회의원 징계안 12건(접수는 14건)중 1건도 징계처리 안한 채 시간 끌기

== 법률연맹, 제21대 국회 1차년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 분석 발표 =

- 징계안 폭주에도 윤리위 회의는 1년동안 1회 15분에 불과
- 오히려, 제20대 국회처럼 상설특위에서 비상설 특위로 전략
- 단 한차례 15분 회의 후 개점휴업, 각종 의원 징계만 적체

가. 국회윤리특별위원회의 역사

1991년부터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설 특별 위원회인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제20대 국회인 2018년 7월, 「국회법」 개정으로 「윤리특별위원회」가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전환되었다. 「국회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라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의원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나, 「윤리특별위원회」 미구성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산하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구성되지 못하였다.

나. 제21대 국회 1차년도 윤리특위 구성

박병석 국회의장은 2020년 9월 1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하여 제 382회 제1차 본회의(2020. 9.1)에서 원안가결되었다.

그 내용은 “①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 및 제46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으로 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는 것이었다.

이 결의안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가 2020년 9월 9일 구성되었고, 9월 15일 윤리특별위원회 첫회의를 개최하였다.

다. 윤리특별위원회 첫회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진표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은 우리 국회의원에게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면서 그에 걸맞은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 또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 제64조는 국회로 하여금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 심사와 징계에 대한 준사법적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국회의원들 스스로의 자정능력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와 평가는 아직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윤리특위가 비상설로 운영되면 의원 윤리 심사가 더욱 위축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윤리에 대한 이러한 우려와 걱정들이 단시간 내에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윤리특위가 국회의원의 윤리 수준을 높이고 국회의 자정능력을 강화하는 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였으나, 우려대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개점휴업을 하였다.

제21대 국회 1차년도에는 3건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의 건」이 제안되었으나, 아직 계류중이다.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 2021. 4. 29. (제38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부개정되어 자문위원의 피촉조건 중에 “언론사의 취재·보도업무에 20년 이상 종사하였었던 언론인”도 포함되었다.

라. 윤리특위의 회의와 처리건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021년 9월 15일 한차례 회의를 하였으며, 오후 1시 31분에 개의하여 46분에 산회해 15분간 위원장 선임과 간사 구성을 마쳤다. 위원 출석은 12명 중 11명이 출석하여 91.67%의 출석률을 기록하였다.

제21대 국회 1차년도에는 국회공직윤리위원회가 제출한 2건 등 14건의 징계안이 접수되었고 의원이 발의한 징계안은 12건이었으나, 한 건도 처리된 것은 없다.

《제21대 국회 1차년도 국회의원이 발의한 징계안 접수현황》

의안번호	의안명	피징계의원	제안일자
2103796	국회의원(윤영찬)징계안(주호영의원등23인)	윤영찬	2020-09-11
2104006	국회의원(황희)징계안(최승재의원등20인)	황희	2020-09-17
2104005	국회의원(윤미향)징계안(최승재의원등20인)	윤미향	2020-09-17
2104156	국회의원(장경태)징계안(전주혜의원등23인)	장경태	2020-09-23
2104521	국회의원(박덕흠)징계안(신동근의원등56인)	박덕흠	2020-10-14
2104584	국회의원(유상범)징계안(조승래의원등20인)	유상범	2020-10-21
2105905	국회의원(윤호중)징계안(정희용의원등21인)	윤호중	2020-11-30

의안번호	의안명	피징계의원	제안일자
2106549	국회의원(김용민)징계안(최형두의원등103인)	김용민	2020-12-16
2107747	국회의원(조수진)징계안(홍정민의의원등20인)	조수진	2021-01-28
2107874	국회의원(남인순)징계안(김정재의원등22인)	남인순	2021-02-02
2108912	국회의원(홍익표)징계안(정동만의의원등20인)	홍익표	2021-03-19
2109134	국회의원(윤호중)징계안(엄태영의원등20인)	윤호중	2021-03-25

국회의원 윤리강령 [제정 1991.02.07.]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정을 위임받은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민주정치의 발전과 국민민복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국회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1. 우리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3. 우리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할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숭수범한다.
4. 우리는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에 정치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정치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5. 우리는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국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

3. 제21대국회 1차년도(21-1), 대정부질문 : 여야 공방장 여전

== 법률연맹 총본부, 제21대 국회 1차년도 국회의원 115명의 대정부질문¹²⁾ 분석 발표 ==

대정부질문(국회법 122조의 2)은 정부의 부패와 독재를 예방/척결하는 책무

막중한 정부견제보다 국무위원 앞에서 여·야간의 고성공방 실망

대안 = 대정부질문 경과보고서 및 대정부질문 국회내 담당부서 마련 평가시스템 구축필요

권력기관간 상호견제(Check & Balance)없다면 권력의 부패/독재는 필연적

- ◆ 질문의원은 민생문제나 당일 의제와는 거리가 먼 특정 정쟁이슈에 집중
 -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정부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고,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의혹관련 변론만
- ◆ 제21대국회 대정부질문은 정부정책 홍보장, 정부 견제는 거의 마비(집권여당 숫적우세)
 - 질문의원 115명중 65명은 집권여당(56.5%), 국민의힘은 39명(33.9%) /대정부 통제기능 마비
 - 대정부질문 질문도중 장내 소란(사과논란 제외) 14번 중 13번은 국민의힘 의원질문중 발생
- ◆ 국회의원들은 출석도장만 찍고(출석률 95.49%) 산회시 24.26%만 재석 —국정에 소극적
- ◆ 대정부 질문 본회의 시간 총 59시간 40분 <질문의원의 대다수(74.78%)가 초·재선>
- ◆ 1차년도 대정부질문과 답변시간이 가장 긴 의원은 더불어 민주당 서동용 의원(2회, 1시간 6분)

가. 제21대 국회 1차년도 대정부질문 : 정책질의보다는 여/야간 공방전으로 전략

입법/사법감시 법률전문 NGO/NPO인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총재 김대인)**는 국회 대정부 통제기능의 중요한 권한의 하나인 제21대 국회 1차년도 (2020.5.30.~2021.5.29.) 대정부질문 현황을 발표했다.

제21대 국회는 총 4회 집회(정기회 1회, 임시회 3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위원 총 13일간의 본회의에서 실시하였고, 대정부질문을 한 현역 의원은 115명(2회 중

12) <<대정부질문 관련 법조문>>헌법 제62조 ①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국회법 제5조의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등) ② 제3. 2월, 4월 및 6월에 집회하는 임시회의 회기 중 한 주(週)는 제122조의2에 따라 정부에 대한 질문을 한다.[전문개정 2018. 4. 17.]

국회법 제76조의2(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76조제2항의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1. 본회의 개의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2. 제122조의2에 따른 정부에 대한 질문을 위한 본회의 개의일시: 개의일 오후 2시

국회법 제122조의2(정부에 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대정부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대정부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의제별 질문 의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⑥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정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대정부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적은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⑧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질문 의원과 질문 순서를 질문일 전날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통지 내용에 따라 질문 순서를 정한 후 본회의 개의 전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 4. 17.]

북하여 질문을 한 의원을 감안하면 136명이 질문)이었다.

대정부질문은 삼권분립원리에 근거한 국회의 국정통제수단으로서 국회의 엄중한 권한이며,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고 답변하도록 하는 권리이면서, 이는 헌법(헌법 제62조)과 국회법(제122조의2)에 의거한다. 우리나라의 대정부질문제도는 제헌헌법과 제정 국회법부터 시행된 헌정과 함께 해 온 중요한 민주정치제도이다.

나. 제21대 국회 1차년도 대정부질문 현황

(1) 제21대 국회1차년도는 제20대1차년도보다 대정부질문 본회의 일수는 늘었으나, 질문 의원수는 줄어듦

제21대 국회 대정부질문은 4개 집회중 총 13일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하였으나, 질문의원은 136명으로 20대 국회 1차년도의 149명 보다 13명이나 줄었다.

《제21대 국회 1차년도 국회의원의 대정부질문 횟수 현황》

질문 횟수	2회	1회	0회	계
의원수	21	94(93)	186	301(300)

* 김진애 전의원은 1번 대정부질문을 함.()은 김진애 전의원을 뺀 현역의원수

(2) **대정부질문 이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탄핵과 그 아들 특혜의혹 휴가문제,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과 일반법관 탄핵문제, 공수처법 시행 등 권력기관 구조개편, 코로나19 방역 백신 등 K-방역문제,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관련된 정부의 주택정책, 추경 등등이었다. 지난 20대 국회 1차년도에서는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대통령 탄핵, 특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거취문제 등이 주제였다.

(3) 21대 국회에서도 초·재선 의원이 75.42%로 질문의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초·재선은 당선횟수별 제21대 국회 원구성 비율보다 높고, 3선 이상은 원구성 비율보다 낮게 되어 원구성비율로는 3선의원이 대정부질문에 가장 많이 참여하였다.

(4) 대정부 질문 도중 **장내소란과 끼워들기는 의례행사처럼** 이루어져서 실제로 제21대 국회의 1차년도를 분석해 본 결과 대정부질문 중 끼워들기 방해 횟수는 총 15회였고, 대표적으로 2020. 7. 24. 광상도 의원이 질문도중 국회부의장이 주의를 주자 의원석에서 거센 항의가 있었다.

(5) 대정부질문 본회의(13회) 평균출석률은 95.49%로 높았으나, 대정부질문 산회시(끝날 무렵) 의원들의 평균참석률은 24.26%에 불과했다.

(6) 2020.9.14. 제4차 정치에 관한 질문 중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문제 의혹에 대해 변호인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발언만을 하였으며, 박병석 의장으로부터 대정부질문은 정부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7) **제도개선 정책대안** : 대정부질문에 대해서도 ①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질문과 답변내용을 정리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② 정부의 답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정부질문 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 ③ 책임지겠다고 답변을 하였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지 확인이 필요하다 ④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사실에 입각한 질문이었는지, 면책권을 악용하여 비방/망신주기 질문이었는지 분석/평가할 필요가 있다.

다. 대정부질문의 충실화와 언론과 NGO의 상시적인 국회의정모니터링이 필요

이번 조사를 총괄한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김대인** 총재는 **대정부질문은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국정전반이나 특정현안을 한눈에 파악·견제할 수 있는 국회의정활동의 중차대한 권한행사와 책무이행**을 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한 후, “**충실한 대정부질문(견제)을 위해서는 국정감사모니터링 이상의 NGO(시민단체)들의 감시와 평가로 국회의원 선거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라. 제21대 국회 1차년도 대정부질문 주요 현황 분석

(1) 총괄

제21대 국회 1차년도 대정부질문을 한 본회의는 4개 집회(정기회 1회, 임시회 3회) 13일간이었다.

질문의원수는 총 136명으로 2회 질문을 한 의원이 21명으로 실제 질문한 의원 115명이었다. 제20대 국회 1차년도과 비교해 볼 때, 20대 국회 1차년도에는 질문의원이 149명이었으므로 질문의원수는 13명이나 줄었다.

회의시간은 59시간 40분으로 평균 4시간 35분 23초 정도 본회의가 진행되었다.

참고로 제20대 국회 1차년도는 박근혜 정부로 4회 집회(정기회 1회, 임시회 3회)를 하였다.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석률은 94.13%로 높았고, 산회시 재석률 역시 31.87%로 양호했다. 대정부질문 본회의 시간 57시간 25분으로 가장 많았다.

《대정부질문 본회의 출석률, 산회시 재석률, 본회의시간 비교》

제21대 국회 1차년도			제20대 국회 1차년도		
본회의 출석률	산회시 재석률	본회의 시간	본회의 출석률	산회시 재석률	본회의 시간
95.49%	24.26%	59:40:00	94.13%	31.87%	57:25:00

《집회별 대정부질문 의제 및 질문의원수 현황》

제21대 국회 1차년도					제20대 국회 1차년도				
집회	회기	일수	의제	질문의원수	집회	회기	일수	의제	질문의원수
제380회국회 (임시회)	20.07.06.~ 20.08.04.	3	정치·외교·통일 ·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26	제343회 (임시회)	2016. 6. 7.~ 7. 6.	2	경제,정치·외교 ·통일·안보·교 육·사회·문화	25
제382회국회 (정기회)	20.09.01.~ 20.12.09.	4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교육사회 문화	33	제346회 (정기회)	2016. 9. 1.~12. 9.	4	정치,외교통일 안보,경제,교육 사회문화	50
제384회국회 (임시회)	21.02.01.~ 21.02.28.	3	정치·외교통일 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44	제347회 (임시회)	2016. 12. 12.~12. 31.	2	경제,정치·외교 통일안보·교육 사회문화	50
제386회국회 (임시회)	21.04.01.~ 21.04.30.	3	정치·외교·통일 ·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33	제349회 (임시회)	2017. 2. 1.~ 3. 2.	2	경제,정치·외교 ·통일·안보·교 육·사회·문화	24
계	4	13		136	계	4	10		149

(2) 제21대 국회 1차년도 이슈 및 눈에 띄는 점

대정부질문 주제는 코로나19와 백신 등 k-방역문제, 한국판 뉴딜, 추경 등 확장재정 문제,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 부동산가격 인상, 부동산세제, 박원순 시장 사건, LH발 부동산투기의혹 등이 많이 조명되었으나,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국회의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던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신났네 신났어’ 등으로 인한 반쪽 대정부질문 등 아쉬움을 남기기도 하였다.

제21대 국회의 대정부질문 첫날(2020.7.22)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의 설전이 일어나서 장내 소란 등 순탄치 못한 시작이 되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장관 임명전 첫 대정부질문에서 ‘공수처 등 권력기관 개편’ 관련 질문을 하였다.

(3) 대정부질문은 신인 의원들의 몫(74.78%가 초·재선 여전)

대정부질문을 하는 의원들의 국회의원 당선횟수를 보면, 초선 의원이 5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재선의원이 28명이었다. 초재선 의원이 전체 대정부질문의원의 74.78%(20대 국회 1차년도에는 77%)를 차지하였다.

참고로 제20대 국회 1차년도에는 5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유일하였으나, 제21대 국회 1차년도에는 5선의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2번이나 대정부질문 주자로 나섰으며, 이상민, 조정식 의원 등 민주당 의원, 국민의 힘 정진석 의원, 무소속 홍준표 의원 등 5명이 대정부질문에 나섰다.

또한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3선의 이광재 의원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대정부질문도 관심을 모았다.

《5이상 의원 중 대정부질문을 한 의원》

의원명	당선횟수	선거구		정당	성별	대정부질문횟수
서병수	5선	부산	부산진구갑	국민의힘	남	2
이상민	5선	대전	유성구을	더불어민주당	남	1
정진석	5선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국민의힘	남	1
조정식	5선	경기	시흥시을	더불어민주당	남	1
홍준표	5선	대구	수성구을	무소속	남	1

〈당선횟수별 제21대 국회 1차년도 대정부질문의원 분석〉

구분	초선	재선	3선	4선	5선이상	계
대정부질문 의원수	58	28	18	6	5	115
비율	50.4%	24.3%	15.7%	5.2%	4.3%	100.0%
현직의원수	152	73	42	19	14	300
현직의원 대비 비율	38.16%	38.36%	42.86%	31.58%	35.71%	38.33%

(4) 대정부질문을 1차례도 못한 의원이 186명(전체의원 62%)

13차례의 대정부 질문에서 2회 질문 의원 21명, 1회 질문의원 94명 등 115명의 의원이 질문하였다. 제20대 국회 1차년도에는 100명의 의원이 질의한 것보다는 많아졌다.

한 번도 질문을 하지 못한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 김의겸 의원(초선) 등 186명이었다. 의원직을 사퇴한 김진애 전 의원(열린민주당, 재선)은 1회 대정부 질문을 하였다.

2회 이상 대정부질문을 한 의원은 질문을 할 때마다 장내 소란이 일어났던 곽상도 의원을 비롯하여 21명이었다. 5선 중진의원 중에서는 서병수 의원이 유일하였고, 3선 의원 중에서는 유의동 의원, 이광재 의원, 하태경 의원 등 3명이었다.

《제21대 국회 1차년도에 2회 대정부질문을 한 의원》

의원명	당선횟수	선거구		정당	성별
곽상도	재선	대구	중구남구	국민의힘	남
김성한	재선	서울	노원구병	더불어민주당	남
김영호	재선	서울	서대문구을	더불어민주당	남
김희국	재선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국민의힘	남
박성준	초선	서울	중구성동구을	더불어민주당	남
박성중	재선	서울	서초구을	국민의힘	남
서동용	초선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더불어민주당	남
서병수	5선	부산	부산진구갑	국민의힘	남

의원명	당선했수	선거구		정당	성별
신원식	초선	비례	대표	국민의힘	남
신현영	초선	비례	대표	더불어민주당	여
양향자	초선	광주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여
용혜인	초선	비례	대표	기본소득당	여
유의동	3선	경기	평택시을	국민의힘	남
이광재	3선	강원	원주시갑	더불어민주당	남
이용우	초선	경기	고양시정	더불어민주당	남
임이자	재선	경북	상주시문경시	국민의힘	여
조정훈	초선	비례	대표	시대전환	남
최기상	초선	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	남
태영호	초선	서울	강남구갑	국민의힘	남
하태경	3선	부산	해운대구갑	국민의힘	남
홍기원	초선	경기	평택시갑	더불어민주당	남

(5) 출석도장만 찍고 자리뜨기 여전

출석을 95.49% vs. 산회시재석을 24.26%(팅빈 본회의장)

대정부질문시 본회의 출석 국회의원은 평균 286.5명(제20대 국회 1차년도 282.3명) 정도로 의원의 출석률은 95.49%(제20대 국회 1차년도 94.13%)이었다. 출석률만 따지면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으나, 개의 시간의 재석률은 55.31%(제20대 국회 1차년도 49.03%)이었다.

국회법 개정으로 인해서 제20대 국회 1차년도 후반(국회법의 개정으로 347회 임시국회부터는 오전에 상임위원회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오후 2시 이후에 개의를 하였음)부터 오후 2시에 개의를 하기 때문에 속개가 사라졌는데, 끝나는 시간(저녁 산회)의 재석률은 24.26%(제20대 국회 1차년도 31.87%)였다.

2021년 2월 임시국회(384회 임시회)에 제1차 대정부질문의 산회 시에는 전체의원 300명중 겨우 36명만이 자리를 지켜서 재석률이 12%로 가장 저조하였다. 재보궐선거와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이었다. 13회 대정부질문의 저녁 산회시 본회의장에 있었던 의원은 평균 72.7명에 불과했다.

(6) 대정부질문 도중 끼어들기 등 장내 소란은 여전

대정부 질문 중 장내소란이 일어난 경우는 15회로 조사되었다. 대부분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질문이나 추미애 장관 관련 질문에서 빚어졌다. 국회법 제147조(발언 방해 등의 금지)에는 “의원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 중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8. 4. 17.]” 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해도 벌칙규정은 없다.

질문도중의 장내소란은 아니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상희 국회부의장에 대한 사과요구를 하면서 퇴장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리고 2021년 2월 4일 임성근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짓말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하라’ 라는 구호를 외쳐서 한때 장내 소란이 있었으나, 대정부질문 중이 아니라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이었고, 대정부 질문 이전에 소란이 멈추어서 사례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제21대 국회 1차년도 대정부 질문시 장내 소란 등의 사례》

일자	질문의원	답변자	소란 이유
2020. 7. 22.	김태흠 의원	추미애 법무장관	수명자 관련 장관의 답변 태도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2020. 7. 23.	서병수 의원	정세균 국무총리	서병수 의원의 질의 중 정청래 의원이 ‘언제’하면서 항의를 하자 소란해짐
2020. 7. 23	김희국 의원	홍남기 부총리	1인 1가구 세부담 안들었다는 보도자료와 관련 질의를 하자 방청석에서 항의를 하여
2020. 7. 23	이소영 의원	정세균 국무총리	주호영 의원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에 나온 상임위원장 포기 관련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하자 방청석에서 항의
2020.7.24	곽상도 의원	추미애 법무장관	정경심 관련 질의를 하자 대정부 질문 사항이 아니라고 하자 국회부의장이 질문의원에 대해 주의를 주는 듯 하자 방청석에서 항의
2020.9. 14.	박형수 의원	추미애 법무장관	보좌관이 군부대에 전화를 건 것 관련하여 질문도중에 방청석에서 항의
2020.9. 14.	전주혜 의원	추미애 법무장관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휴가명령서와 관련하여 질문도중에 의원석에서 항의
2020. 9. 15.	박진 의원	이인영 통일장관	박진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인영 의원이 반박하자, 의원석에서 북한정보원이나 하세요 라고 하자
2020. 9. 15	하태경 의원	정경두 국방장관	하태경 의원이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사오정 답변이라고 하자 의원석에서 항의하여
2020. 9. 15	성일종 의원	정경두 국방장관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휴가관련 특혜여부를 주장하자 의원석에서 특혜는 무슨 특혜야 하자
2020. 9. 15	신원식 의원	정경두 국방장관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휴가 관련 면담일지가 작성되어 있는 지 묻자 의원석에서 조용히 하라며 항의
2020.9. 17	최형두 의원	추미애 법무장관	추미애 법무장관이 의원시절 정치자금 카드를 아들 휴가 관련 썼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의원석에서 항의
2020.9. 17	김승수 의원	추미애 법무장관	추미애 장관이 아들 면담일지에 대해 답변을 하자 의원석에서 항의
2021. 4. 19	정진석 의원	홍남기 부총리	정진석 의원의 백신확보관련 뉴스를 보여주자 홍남기 부총리가 왜 잘못된 뉴스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냐며 반발

(7) 대정부질문 질의/응답시간이 가장 긴 의원은 서동용 의원

국회영상회의록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대정부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지 않고 질문시간만을 계산하는 데, 질문과 답변 시간이 가장 긴 의원은 서동용 의원으로 1시간 6분대를 기록하였으며, 신현영 의원과 양향자 의원이 57분대였다.

《참고》

제21대 국회 1차년도 대정부질문 본회의 현황

횟수	집회	본회의 차수(일자)	주요 처리 안건 등	개의 시각	산회 시각	의원수				회의 시간
						출석	개의	산회	청가	
1	제380회20.07.06.~08.04.	제4차(2020년 07월22일)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14:00	18:30	294	142	104	4	4:30:00
2		제5차(2020년 07월23일)	법무부장관(추미애)탄핵소추안. 경제에 관한 질문	14:02	19:02	296	260	96	3	5:00:00
3		제6차(2020년 07월24일)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14:00	18:37	291	100	101	7	4:37:00
4	제382회 20.09.01.~20.12.09.	제4차(2020년 09월14일)	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예 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정치에 관한 질문	14:00	19:23	294	209	114	5	5:23:00
5		제5차(2020년 09월15일)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14:00	19:15	293	166	81	6	5:15:00
6		제6차(2020년 09월16일)	경제에 관한 질문	14:00	18:38	291	174	94	6	4:38:00
7		제7차(2020년 09월17일)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14:05	19:17	294	187	67	4	5:12:00
8	제384회 21.02.01.~02.28.	제4차(2021년 02월04일)	법관(임성근)탄핵소추안/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14:00	19:46	295	220	36	5	5:46:00
9		제5차(2021년 02월05일)	국무위원(중소벤처기업권 칠승)인사/ 경제에 관한 질문	14:00	18:02	282	118	58	9	4:02:00
10		제6차(2021년 02월08일)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14:00	18:32	287	124	49	9	4:32:00
11	제386회 21.04.01.~04.30.	제1차(2021년 04월19일)	의원(김의겸) 선서 및 인사/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14:00	17:36	267	164	53	26	3:36:00
12		제2차(2021년 04월20일)	경제에 관한 질문	14:00	17:24	264	114	38	28	3:24:00
13		제3차(2021년 04월21일)	국회의원(이상직)체포동의안 /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14:01	17:46	276	179	55	21	3:45:00

《참고 2000년 이후 역대 국회의 대정부질문 본회의 및 질문의원수》

구분	임기	집회횟수	일수	질문의원수	대통령
제16대국회	2000.5.30 ~ 2004.5.29	17	65	545	김대중/ 노무현
제17대국회	2004.5.30 ~ 2008.5.29	15	56	582	노무현
제18대국회	2008.5.30 ~ 2012.5.29	13	55	704	이명박
제19대국회	2012.5.30. ~2016.5.29	15	52	600	이명박/박근혜
제20대국회	2016.5.30.~ 2020.5.29	11	35	443	박근혜/문재인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 예결위 법정시한 준수, 추경심사만 3차례

-- 예산종합질의 및 부별 심사 우수의원은 가점

== 법률연맹, 제21대 국회 1차년도 예결특위 예산/추경/결산 심의/의결과정 분석 발표 ==

예결산 심사 앞서 국민의 담세능력과 국가안보 등을 살펴 조세종목과 세율을 재검토(헌법 54)하고, 국정감사 전, 지난해 결산을 먼저(국회법 128조의2) 해서 국정감사에 반영해야!

무려 45조 증액된 5년전엔-400.7조 2020년-513.5조 558조 예산을 55시간 만에 졸속심사
행정부가 책정한 예산을 국회가 졸속 심사 말고, 미국처럼 국회가 365일 예산안 심의/책정하도록

- ◆ 예산안 처리 - 제20대 국회 1차년도 법정기한(12/2 - 매 회계년도 30일전)지켜
- ◆ 결산심사는 21대 1차년도도 법정기한(매년 8/31- 정기국회 전까지) 못 지켜

제21대 국회 1차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

긍정적인 점	부정적인 점
6년만에 헌정시한(2020.12.2.) 내에 예산안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야 합의안된 반쪽 예결위 출범 ○ 2019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기한 도과(2021.11.19.) ○ 부실한 예산안 심사(종합정책질의 등 각1회로 축소) ○ 전체회의의 저조한 출석률(91%) ○ 예산안심사 도중 불필요한 정쟁 여전

가. 원구성 파행으로 반쪽 예결위로 시작

제21대 국회 1차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원 구성 파행으로 인해 국회의장 직권으로 2020. 6. 15. 위원 선임이 이루어졌고, 6. 29.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위원 선임이 이루어졌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 집회일로부터 2일 이내에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해야 하고, 국회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상임위원장 선거는 첫 임시회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해야 됩니다. 이번 21대 국회의 경우 지난 6월 8일까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위원 선임을 요청하고 국회는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했으나 한 달이 지나 오늘에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장은 위원 선임을 요청하지 않은 교

섭단체에 대해 지난 6월 11일, 15일, 26일 그리고 오늘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위원 선임을 요청하거나 교섭단체에서 조사한 소속 의원의 상임위 수요조사 결과를 제출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회동 과정에서도 구두로 열 차례 이상 요구하며 국회법을 지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섭단체에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국회법 제4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을 선출함으로써 오늘 원 구성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 2001년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한 후 위원장을 선출한 선례가 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위원장을 뽑은 다수 사례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국회법이 준수돼야 되고 그리고 원 구성 문제로 더 이상 국회가 공전하지 않는 국회법의 제도의 틀을 확립해 주실 것을 여야 지도부에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것은 민생의 절박함, 서민들의 비명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서 결단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면서 반쪽 예결위 구성의 경위를 설명했다.

나. 제21대 국회 1차년도 예결위 구성

제379회 임시회(6월) 제6차(2020년06월29일) 본회의에서 위원장 선거를 통해 정성호 위원장이 선출되었다. 총 투표수 181표 중 180표를 얻었다. 정성호 위원장은 당선 인사말을 통해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예산과 재정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이자 마땅한 도리입니다. 코로나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 3차 추경이 경제방역 현장에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야당의 빠른 참여로 제 역할이 신속하게 종료되기를 희망합니다. 원내정당으로서 야당의 핵심적인 역할은 국민의 혈세인 정부의 예산편성안을 심의 의결하는 일입니다. 야당의 조속한 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하게 다시한번 호소하면서 저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하였다.

6월 30일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서 간사 등 조직구성을 하였으나, 반쪽짜리 출범을 하였다. 제1차 전체회의에는 의원 32명이 출석하였는데, 미래통합위원 전원과 홍준표 무소속의원이 결석하여 반쪽으로 운영되었다.

**다. 제21대 국회 예결위 활동 : 총 121시간 32분 회의, 출석률은 91%에 불과
3건의 추경, 1건의 결산, 1건의 예산안을 처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는 총 18차례의 전체회의를 열었고, 121시간 32분 회의를 하였다. 50명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전체회의에서 평균 45.5명이 출석하여 91.00% 출석률을 보였다.

주요 처리안건으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회계연도결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예산안과 관련 기금안을 처리하였다.

〈제21대 국회 1차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현황〉

예결특위활동회기	안건처리 국회본회의	안건	예결특위 활동내역
제379회 6 월 임시회	2020.06.05.~20 20.07.04.	2020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정부가 제출한 원안 35조 3442억 원에서 1조 5110억 원을 감액하고 1조 3067억 원을 증액하여 2042억 원을 순감액함
제382회 정기회	제382회 제8차(9월정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정부가 제출한 원안 7조 8444억 원에서 6177억 원을 감액하고 5881억 원을 증액하여 296억 원을 순감액함
제381회 임시회~ 제382회 정기회	제12차 2020년 11월19일	2019회계연도 결산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총 1667건의 시정요구사항(징계가 1건이고 그 밖에 시정 234건, 주의 523건, 제도개선 1021건)과 1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 2019회계연도 결산 관련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다음 4건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 1) 방위사업청의 중어뢰-II와 장보고-II 함정 간의 장비 미연동 문제 및 이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감사 2) 해양수산부의 펀드출자사업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 3) 중소벤처기업부의 펀드출자사업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 4) 지방자치단체의 생태하천복원사업 중 실집행이 부진한 일부 사업에 대한 감사
제382회 정기회	제14차 2020년 12월02일	2021년도 예산안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555조7900억원에 대하여 5조8876억원을 감액하고 8조848억 원을증액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2조1972억원을 순증액함. 총지출 중 기금을 제외한 예산안의 규모는 370조 8954억 원으로 그중 2조 5641억 원을 감액하고 6조 7070억 원을 증액하여 총 4조 1428억 원을 순증액함
제385회제3차 임시회	2021.03.02.~03. 3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정부가 제출한 추경 증액분 14조 9829억 원에서 4621억 원을 감액하고 1조 3987억 원을 증액하여 9366억 원을 순증액함. (다만 본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약 9800억 원 실시하여 이를 충당함으로써 국채 발행액은 당초 정부안 대비 변동이 없으며 총지출은 440억 원 감소)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구성과 활동

예결특위원회의 소위는 총 5개 구성되어 활동을 하였다. 결산심사 소위는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가 소위원장을 맡았고, 나머지 소위는 정성호 위원장이 소위원장을 맡았다.

<제21대 국회 1차년도 예결특위 소위원회 회의 현황>

소위원회 명칭	소위원장	회의횟수	회의시간	위원출석률
결산심사소위	추경호	6	31:13:00	95.24%
예산안등조정소위	정성호	6	43:51:00	98.89%
2020년도제3회추경예산안등조정	정성호	3	7:19:00	100%
2020년도제4회추경예산안등조정	정성호	2	5:30:00	100%
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등조정	정성호	3	15:23:00	100%

마. 2021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 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회계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2020년 11월 2일부터 2020년 11월 12일까지 7차례의 전체 회의를 하였다.

회의시간은 54시간 55분이었다.

공청회 1회, 종합정책질의 2일, 경제부처 부별심사 2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 2일을 실시하였다.

예산안심사기간 동안 사보임은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사임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보임을 하였다.

<2021회계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회의 현황>

차수	일자	안건	회의시간
제4차	2020-11-02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2:36
제5차	2020-11-04	[2103473]2021년도예산안(정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 종합정책질의	9:36
제6차	2020-11-05	[2103473]2021년도예산안(정부) 등 - 종합정책질의	9:05
제7차	2020-11-09	[2103473]2021년도예산안(정부) 등 - 부별심사 : 경제부처	8:10
제8차	2020-11-10	[2103473]2021년도예산안(정부) 등 - 부별심사(경제부처)	9:21
제9차	2020-11-11	[2103473]2021년도예산안(정부) 등 - 부별심사(비경제부처)	7:44
제10차	2020-11-12	[2103473]2021년도예산안(정부) 등 - 부별심사(비경제부처)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2100027]2019회계연도결산(정부) [2100028]201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 의견(정부) 2019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장)	8:23

바. 예결위 예산심사 가점의원 선정

예산안 심사 가점의원은 종합정책질의(1회)나 부별심사(2회)에서 예산심사에 집중한 질의(본질의, 보충질의, 추가질의)를 한 의원 중에서 비교적 지역구 민원성 질의를 적게 한 의원을 심사 일정별로 선정하였으며, 중복 선정된 경우에는 한번만 가점을 하였다.

5. 21대 국회 1차년도 특별위원회 : 상임위정수특위, 윤리특위외 활동안함

제21대 국회 1차년도 비상설특별위원회로는 국회윤리특별위원회와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개정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유일하였다.

제21대 국회 1차년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국무총리(김부겸)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서병수), 대법관(이홍구)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우상호), 대법관(천대엽)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노웅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조병현·조성대)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장제원) 등 4개였다.

4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조병현·조성대)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국무총리(김부겸)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였다.

6. 상임위 소위 활동 : 총 320회 회의실태 조사

국회(21-1) - “**최중요 소위원회**” (총 320회, 법안소위 255회) 회의실태 - **법률연맹 전수조사** 발표
다수결/합의처리/악법여부간, 10명안팎위원의 ‘**법안소위**’ 통과가 상임위/법사위/본회의 자동(거의)통과는 **망국적 적폐**

국회법 위반 제57조⑥¹³⁾(매월 3회이상 회의) - **중요한 27개 법안소위 한곳도 안 지켜**

- ▣ **입법국회¹⁴⁾ 무색** - 법안심사 소위는 1달에 3회 이상 “**의무**” 커녕, 1년도 회의 안해
- ▣ **예산·결산 등 심사하는 “예결산 소위” 도, 고작 1년 동안 평균 3.94회만 개최**
- ▣ **청원심사소위는 전체 16개 상임위원회에서 1년동안 단 2차례(44분)만 열려**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 - 최소한 3.5배 더욱 가동해야 1차년도 적체법안 처리 가능

- ▣ **법안1개당 평균 심사시간 1분20초 <1회당 163건 심사 - 기재위 조세소위(고용진 소위원장)**
- ▣ **회의시간이 제일적은,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소위원장 김도읍) - 2차례에 3시간36분 회의**
- ▣ **회의횟수가 제일적은 예결소위 - 국방위(소위원장 황희/기동민)와 보건복지위(소위원장 강병원)**
- ▣ **가장 충실해야 할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심사는 - 법안당 5분 14초 꼴로 **졸속 심사****
- ▣ **대표발의위원의 ‘소위’ 에서의 진출권 보장 등 외부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의 확대 필요**

가. 제21대 국회 1차년도 총 320회 소위원회 회의 조사

사법/입법감시 법률전문 NGO인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총재 김대인)**가 제21대 국회 1차년도(2020. 5.30~2021.5.29.) **상임위 소위(320회, 법안소위 , 청원소위, 예결산소위 등 -안건조정소위 제외)의 국회의원 출석상황과,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의 255회 회의실태를 조사하였다.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국회의원 회의 출석률은 94.89%였다.**

《제21대 국회 1차년도 16개 상임위 소위원회 구성 및 회의현황》

구분	법안심사소위	예산결산심사소위	청원심사소위	계
소위구성	27	16	15	58
회의횟수	255	63	2	320
회의시간	734시간55분	226시간18분	44분	961시간 57분

상설소위원회 - 「국회법」 제57조제1항은 ‘위원회는 그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설소위원회는 제13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제도화되었고, **제15대 국회(2000.2.16)**에서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원회에 3개의 상설소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제17대 국회(2005.7.28)**에서 위원회의 운영여건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상설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상설소위원회의 설치를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다. **국회법 제5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 대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인원 및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4. 16.> **②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4. 16.>

13) **국회법 제57조 ⑥**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의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소위원장이 개최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2020. 12. 22.> 참고: 개정전 ‘**모든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회 이상 개최한다**’ 였으므로 이 규정으로 해도 위반임

14)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국회법 제49조의2(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① 위원장(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은 예측 가능한 국회운영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49조제2항의 의사일정 및 개최일시를 정한다. <개정 2019. 4. 16., 2020. 12. 22.>
2. 소위원회 개최일시: **매주 수요일·목요일 오전 10시**

나. '법안심사'의 관문이며, 실질적 입법 결정과정인 법안심사소위의 실태 분석

(1) 제21대 **국회 법안심사소위**는 상임위원회당 1개 또는 2개를 운영하여 **총 27개가 운영**되었으며, 27개 소위의 1년간 회의횟수는 **총 255회**이고, 회의시간은 **총 734시간 55분**이었다.

국민들은 대부분 300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법안을 심사하는 줄 알지만, 사실상 각 상임위원회에 설치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사실상 입법의 최초이자 최종적 핵심기관이다.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대개 6~13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300명 의원을 대표하는 셈이며, 소위원회에서 의결된다는 명분으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300명 전체의원)까지 대부분 거의 자동으로 통과되는데, 함정은 10명 안팎의 소위법안심사위원(국회의원)들도 법안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대부분 소극적이며, 2명의 여/야당 간사(국회의원)와 상임위 소속 전문위원과 정부측 관리들에게(특히 정부입법) 대부분 휘둘리곤 한다.

(2)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안심사의 최중요한 제1관문인 상임위 소위의 법안심사**는 1회당 평균 회의시간은 **2시간 59분 34초**에 불과했다.

(3) 상임위원회 소위 회의록을 보면 1회 평균 **34.26개의 법률안**이 심사(상정)되었는데, 논의하는데 걸린 시간은 평균 **5분 14초**였다. 가장 짧은 소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로 1개 법안당 **1분 20초**였다.

(4) **법안소위원회 회의 중 10분 이내로 매우 짧게 회의**가 진행이 된 곳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제1법안심사위원회(소위원장 **한병도**) 1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법안소위(위원장 임이자) 2회 등 3개 소위원회였고, **여야 합의가 안되어서 파행**된 경우도 있었다.

(5) 현재 **상임위원회별로 1차년도에 제출되어 적체된 법안이 7,834개**(정보위 제외)가 쌓여 있으므로 1차년도에 처리된 법안(2,216개) 대비 법안심사 소위의 가동을 **3.5배 이상** 더 해야 1차 년도 적체법안을 처리할 수 있고, 2차년도에 발의되는 법안을 감안하면 최소한 지금의 5배 이상은 가동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6)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16개 상임위원회 당 1개 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지난 1년 동안 63회 회의를 개최하여, 소위원회당 평균 3.94회 회의를 하였고, 총회의 시간은 **226시간 18분**이었다. 국방예산을 일차적으로 심사하는 **국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황희/기동민)는 1년에 겨우 2차례 8시간 54분 회의를 하였고, 복지예산을 심사하는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소위원장 강병원) 역시 1년에 겨우 2차례 8시간 56분 회의를 하였다.

(7) **21대 국회 1차년도의 특징중의 하나인 다른 상임위원회의 법안을 심사하는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소위원장 김도읍)의 **일거리가 확 줄었다**는 것이다. 2월

과 3월 한차례씩 2회 회의를 열고 겨우 각 4개의 법률안만 심사를 하였다. 제20대 국회 4차년도에도 6번 회의를 하여 수십 건의 법안심사를 하던 것과 대조를 이루었다.

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의 철저한 점검 필요

이번 조사를 총괄한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김대인 총재는 “**법률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 대개는 상임위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거의 자동통과되므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철저한 점검**이 있어야 하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나 **정부의견**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연맹의 지속적인 개선제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법안소위 차원에서의 **외부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나, 대표발의 의원의 진술권 보장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라. 제21대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현황

(1) 제21대 국회 1차년도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횟수 순위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소위원장	회의횟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	한병도/박재호	21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	백혜련	19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고용진	14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2	성일종	13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	박완수	12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	안호영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	이철규	11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박찬대	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위성곤	10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	임이자	10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	조용천	9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	류성걸	9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	이헌승	9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	김영진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	조승래	9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	김병욱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	강훈식/송갑석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	김승수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	이양수	8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심사	강기윤	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	박성중	7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소위원장	회의횟수
보건복지위원회	제2 법안심사	김성주	6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	한기호	6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	김영호	6
문화체육관광	체육관광법안심사	박정	6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	권인숙	5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	김도읍	2

(2) 제21대 국회 1차년도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총 회의시간 순위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소위원장	회의횟수	회의시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	백혜련	19	75:23:00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	한병도/박재호	21	60:05:00
기획재정 위원회	조세	고용진	14	50:55: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	이철규	11	40:51:00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	조응천	9	36:25:00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박찬대	10	35:54:00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	박완수	12	35:14:00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심사	강기윤	7	34:45:00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2	성일종	13	30:36:00
기획재정 위원회	경제재정	류성걸	9	29:55:00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	이헌승	9	28:58:00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	안호영	12	27:16: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	강훈식/송갑석	8	27:08:00
보건복지위원회	제2 법안심사	김성주	6	22:32:00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	한기호	6	22:06:00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	김영진	9	20:34: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	위성곤	10	17:54: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	조승래	9	17:34: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	김승수	8	17:20:00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	김영호	6	16:46:00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	임이자	10	16:06: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	박성중	7	15:56: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	박정	6	15:17:00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	권인숙	5	12:27:00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	김병욱	9	11:48: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	이양수	8	11:34:0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	김도읍	2	3:36:00

(3) 제21대 국회 1차년도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1회의당 평균회의시간 순위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소위원장	회의횟수	회의시간	평균회의시간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심사	강기윤	7	34:45:00	6:57: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	이철규	11	40:51:00	4:32:20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	김성주	6	22:32:00	4:30:24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소위원장	회의횟수	회의시간	평균회의시간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	조응천	9	36:25:00	4:02:47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박찬대	10	35:54:00	3:59:2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	백혜련	19	75:23:00	3:58:0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	강훈식/송갑석	8	27:08:00	3:52:34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	한기호	6	22:06:00	3:41: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고용진	14	50:55:00	3:38:13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	류성걸	9	29:55:00	3:19:27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	이현승	9	28:58:00	3:13:07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	박완수	12	35:14:00	2:56:10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	한병도/박재호	21	60:05:00	2:51:40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	김영호	6	16:46:00	2:47:4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	박정	6	15:17:00	2:32:50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	권인숙	5	12:27:00	2:29:24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 제2	성일종	13	30:36:00	2:21:14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	김영진	9	20:34:00	2:17:0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	박성중	7	15:56:00	2:16:34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	안호영	12	27:16:00	2:16:2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	김승수	8	17:20:00	2: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	조승래	9	17:34:00	1:57:07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	김도읍	2	3:36:00	1:48: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	위성곤	10	17:54:00	1:47:24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	임이자	10	16:06:00	1:47:2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	이양수	8	11:34:00	1:26:45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	김병욱	9	11:48:00	1:18:40

(4) 제21대 국회 1차년도 평균 법안심사소위 위원의 출석률 순위

상임위원회	소위명칭	소위원장	평균출석의원수	소위출석률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박찬대	7.0	100.00%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	조응천	11.0	100.00%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심사	강기윤	11.0	100.00%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	권인숙	8.0	100.0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	김도읍	11.0	100.00%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	김영진	8.9	98.4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	강훈식/송갑석	10.7	97.40%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	임이자	7.8	97.22%
보건복지위원회	제2 법안심사	김성주	9.7	96.67%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	김병욱	12.6	96.5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	박성중	10.6	96.10%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	박완수	8.6	95.37%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	성일종	10.5	95.1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	백혜련	7.5	94.08%

상임위원회	소위명칭	소위원장	평균출석의원수	소위출석률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	한병도/박재호	8.4	93.6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	조승래	7.4	93.06%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	한기호	6.5	92.8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	박정	6.5	92.8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	이철규	10.1	91.74%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	안호영	7.3	91.6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	위성곤	6.4	91.43%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	이헌승	9.1	91.2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	김승수	6.4	91.07%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	김영호	8.17	90.7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	이양수	6.3	89.29%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고용진	10.9	84.07%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	류성걸	9.1	82.83%

《참고》 제21대 국회 1차년도 법안 처리 및 적체된 법안수 현황

상임위원회	위원장	법안소위명칭	소위원장	1차년도 적체법안수	1차년도 처리법안수
국회운영위원회	김태년	국회운영개선	김영진	187	25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법안심사 제1	백혜련	787	140
		법안심사 제2	김도읍		
정무위원회	윤관석	법안심사 제1	김병욱	676	144
		법안심사 제2	성일종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조세	고용진	736	183
		경제재정	류성걸		
교육위원회	유기홍	법안심사	박찬대	353	10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	조승래	299	67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	박성중		
외교통일위원회	송영길	법안심사	김영호	109	30
국방위원회	민홍철	법률안심사	한기호	135	72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법안심사 제1	한병도/박재호	1,232	311
		법안심사 제2	박완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문화예술법안심사	김승수	255	140
		체육관광법안심사	박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	위성곤	353	105
		해양수산법안심사	이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학영	산업통상자원특허	이철규	454	134
		중소벤처기업	강훈식/송갑석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제1 법안심사	강기윤	950	199
		제2 법안심사	김성주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환경법안심사	임이자	578	280
		고용노동법안심사	안호영		
국토교통위원회	진선미	국토법안심사	조용천	604	231

상임위원회	위원장	법안소위명칭	소위원장	1차년도 적체법안수	1차년도 처리법안수
		교통법안심사	이현승		
여성가족위원회	정춘숙	법안심사	권인숙	126	48
계		27개소위		7834	2,216

※ 상임위별 두 개 법안소위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법률안으로 분배되어야 함

마. 제21대 국회 1차년도 상임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실적

(1) 제21대 국회 1차년도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소위 회의실적

상임위원회	소위명칭	소위원장	소위원수	회의횟수	회의시간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	김성원	4	3	7:08:00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김도읍	7	3	16:44:00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	김한정	7	3	14:29: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기동민/정일영	5	7	18:51:00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곽상도	8	3	12:37: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	변재일	8	4	13:29:00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김석기	9	4	12:51:00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	황 희/기동민	6	2	8:54:00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김민석/박완주	6	6	16:11: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심사	이상현	7	4	17:36: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	이만희	7	5	17:54: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	김정호	13	5	30:55:00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	강병원	11	3	8:56:00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김성원	9	6	9:38:00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박성민	10	2	15:39:00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사	김정재	7	3	4:26:00
계			124	63	226:18:00

(2) 제21대 국회 1차년도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소위 위원의 출석률 순위

상임위원회	소위명칭	소위원장	회의횟수	회의시간	평균회의시간	평균출석의원	소위출석률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김도읍	3	16:44:00	5:34:40	8.0	100%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곽상도	3	12:37:00	4:12:20	8.0	100%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김석기	4	12:51:00	3:12:45	9.0	100%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박성민	2	15:39:00	7:49:30	11.0	100%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김성원	6	9:38:00	1:36:20	8.8	98.15%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김민석/박완주	6	16:11:00	2:41:50	6.8	97.6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	이만희	5	17:54:00	3:34:48	6.8	97.1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	변재일	4	13:29:00	3:22:15	7.8	96.88%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사	김정재	3	4:26:00	1:28:40	8.7	96.3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기동민/정일영	7	18:51:00	2:41:34	4.7	94.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	김정호	5	30:55:00	6:11:00	12.2	93.8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심사	이상현	4	17:36:00	4:24:00	6.5	92.86%

상임위원회	소위명칭	소위원장	회의횟수	회의시간	평균회의시간	평균출석의원	소위출석률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	김한정	3	14:29:00	4:49:40	7.3	91.67%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	김성원	3	7:08:00	2:22:40	8.0	88.89%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	황희/기동민	2	8:54:00	4:27:00	6.0	85.71%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	강병원	3	8:56:00	2:58:40	9.3	84.85%

(3) 제21대 국회 1차년도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소위 회의시간 순위

상임위원회	소위명칭	소위원장	회의횟수	회의시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	김정호	5	30:55: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기동민/정일영	7	18:51: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	이만희	5	17:54: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심사	이상헌	4	17:36:00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김도읍	3	16:44:00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김민석/박완주	6	16:11:00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박성민	2	15:39:00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	김한정	3	14:29: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	변재일	4	13:29:00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김석기	4	12:51:00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곽상도	3	12:37:00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김성원	6	9:38:00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	강병원	3	8:56:00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	황희/기동민	2	8:54:00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	김성원	3	7:08:00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사	김정재	3	4:26:00

(4) 제21대 국회 1차년도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소위 회의횟수 순위

상임위원회	소위명칭	소위원장	회의횟수	회의시간	평균회의시간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기동민/정일영	7	18:51:00	2:41:34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김민석/박완주	6	16:11:00	2:41:50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김성원	6	9:38:00	1:36:2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	김정호	5	30:55:00	6:11: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	이만희	5	17:54:00	3:34:4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심사	이상헌	4	17:36:00	4:24: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	변재일	4	13:29:00	3:22:15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김석기	4	12:51:00	3:12:45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김도읍	3	16:44:00	5:34:40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	김한정	3	14:29:00	4:49:40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곽상도	3	12:37:00	4:12:20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	강병원	3	8:56:00	2:58:40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	김성원	3	7:08:00	2:22:40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사	김정재	3	4:26:00	1:28:40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박성민	2	15:39:00	7:49:30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	황희/기동민	2	8:54:00	4:27:00

바. 제21대 국회 1차년도 청원심사소위원회 실적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상임위원회의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총 2회 개최되었다.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청원심사소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

1년 동안 두 번 2회당 회의시간은 44분에 불과했다.

참고로 국회에 아직 처리되지 않고 계류중인 청원은 모두 40건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이 8건으로 가장 많다.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021. 5. 30. 방문)

《제21대 국회 제1차년도 국회 청원 처리 및 계류현황》

위원회	청원심사소위 위원장	접수	처리내용					위원회 계류
			채택	본회의 불부의	철회	폐기	계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장 없음	8		1			1	7
정무위원회	윤재옥	5		1			1	4
기획재정위원회	소위 자체 없음	4						4
교육위원회	조경태	4		1			1	3
과학기술정보통신	허은아	0						
외교통일위원회	이태규	1		1			1	
국방위원회	김민기	1						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달곤	1						1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3		1			1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맹성규	3						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재	2						2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8						8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2						2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4		1			1	3
국회운영위원회	소위원장 없음	0						
여성가족 위원회	양경숙	0						
계		46		6			6	40

참고자료 1

제21대 국회 본회의별 주요 안건, 출석 및 재석 등 현황

회수	집회	본회의	주요 처리 안건 등	개의시각	산회시각	출석	개의	속개	산회	청가/출 장	회의 시간
1	제379회 (2020.06.05. ~07.04.)	제1차 (2020년06월05일)	국회의장 · 부의장선거	10:00	11:17	294	284		181	2	1:17:00
2		제2차 (2020년06월08일)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 관 한 규칙개정특위위원회구성 건(의장제의)	16:10	16:14	281	270		277	5	0:04:00
3		제3차 (2020년06월10일)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03	15:07	287	279		286	5	0:04:00
4		제4차 (2020년06월12일)	의사진행발언	14:00	14:16	192	191		191	2	0:16:00

회수	집회	본회의	주요 처리 안건 등	개회시각	산회시각	출석	개의	속개	산회	청가/출장	회의 시간	
5		제5차 (2020년06월15일)	상임위원장 선거	18:04	19:37	191	186		151	2	1:33:00	
6		제6차 (2020년06월29일)	국회운영위원장등 선거 202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14:10	16:32	189	186		178	2	2:22:00	
7		제7차 (2020년07월03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등	22:05	23:00	188	187		187	3	0:55:00	
8	제380회 (20.07.06.~08.04.)	개회식 (2020년07월16일)	제21대국회 개원식 겸 제380 회국회(임시회) 개회식	14:00	14:53	299					0:53:00	
9		제1차 (2020년07월16일)	정보위원장 선거	11:04	11:32	185	184		136	3	0:28:00	
10		제2차 (2020년07월20일)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 설	10:01	10:37	296	262		280	2	0:36:00	
11		제3차 (2020년07월21일)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 설(계속)	10:00	10:32	293	231		275	3	0:32:00	
12		제4차 (2020년07월22일)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 한 질문	14:00	18:30	294	142		104	4	4:30:00	
13		제5차 (2020년07월23일)	법무부장관(추미애) 탄핵소추안 경제에 관한 질문	14:02	19:02	296	260		96	3	5:00:00	
14		제6차 (2020년07월24일)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 문	14:00	18:37	291	100		101	7	4:37:00	
15		제7 차(2020년07월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 률안(대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일부개 정법률안(정부제출)	14:00	15:02	295	253		146	3	1:02:00	
16		제8차 (2020년08월04일)	법안처리	14:00	16:36	292	255		148	6	2:36:00	
17		개회식 (2020년09월01일)	제382회국회(정기회) 개회식	14:00	14:24	292						0:24:00
18		제1차 (2020년09월01일)	제382회국회(정기회)회기결정 의건(의장제외) 윤리특별위원회구성건의건(의장 제외)	14:24	14:31	292	292		290	8	0:07:00	
19		제2차 (2020년09월07일)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 설 대법관(이홍구)임명동의안 3.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대안)	10:00	11:16	288	244		269	10	1:16:00	
20		제3차 (2020년09월08일)	국정에관한교섭단체대표연설 (계속)	14:00	14:41	279	250		270	20	0:41:00	
21	제4차 (2020년09월14일)	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에대한정부의시정연설정치에 관한질문	14:00	19:23	294	209		114	5	5:23:00		
22	제5차 (2020년09월15일)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 문	14:00	19:15	293	166		81	6	5:15:00		
23	제6차 (2020년09월16일)	경제에관한질문	14:00	18:38	291	174		94	6	4:38:00		
24	제7차 (2020년09월17일)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 문	14:05	19:17	294	187		67	4	5:12:00		
25	제8차 (2020년09월22일)	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22:00	22:31	288	263		284	6	0:31:00		
26	제9차 (2020년09월24일)	법안처리	14:00	16:54	293	167		113	4	2:54:00		
27	제10차 (2020년10월28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 설	10:01	10:46	293	291		290	4	0:45:00		
28	제11차 (2020년10월29일)	국회의원(정정순)체포동의안	14:10	14:48	194	185		103	16	0:38:00		
29	제12차 (2020년11월19일)	2019회계연도결산, 법안처리	14:01	16:34	292	269		97	6	2:33:00		
30	제13차 (2020년12월01일)	법안처리	14:02	15:34	286	243		124	13	1:32:00		

회수	집회	본회의	주요 처리 안건 등	개회시각	산회시각	출석	개의	속개	산회	청가/출장	회의 시간
31		제14차 (2020년12월02일)	법안·예산안처리	20:00	23:22	291	202		109	7	3:22:00
32		제15차 (2020년12월09일)	정보위원장(전해철) 사임의 건 법안 등 안건처리	15:10	24:00:00	298	272	262	156	2	7:04:00
33	제 383회 (20.12.10.~2 1.01.08.)	제1차 (2020년12월10일)	법안처리	14:11	118:06:00	298	289	30	188	2	88:08:00
34		제2차 (2021년01월08일)	법안처리	10:03	18:22:00	290	171	181	57	6	5:47:00
35	제 384회 (21.02.01.~0 2.28.)	개회식 (2021년02월01일)	제384회국회(임시회) 개회식	14:00	14:19	281					0:19:00
36		제1차 (2021년02월01일)	국무위원(법무박법계·환경한 정애)인사 제384회국회(임시회)회기결정 의건	14:20	14:27	282	281		282	17	0:07:00
37		제2차 (2021년02월02일)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더불어 민주당)대표연설	10:00	10:42	294	235		276	4	0:42:00
38		제3차 (2021년02월03일)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국민의 힘)대표연설(계속)	10:01	10:47	290	252		268	7	0:46:00
39		제4차 (2021년02월04일)	법관(임성근)탄핵소추안 정치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14:00	19:46	295	220		36	5	5:46:00
40		제5차 (2021년02월05일)	국무위원(중소벤처기업권철승) 인사 경제에관한질문	14:00	18:02	282	118		58	9	4:02:00
41		제6차 (2021년02월08일)	교육·사회·문화에관한질문	14:00	18:32	287	124		49	9	4:32:00
42		제7차 (2021년02월26일)	법안 등 안건처리	14:01	17:42	291	135		57	6	3:41:00
43	제 385회 (21.03.02.~0 3.31.)	제1차 (2021년03월05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10:00	10:14	281	248		268	9	0:14:00
44		제2차 (2021년03월24일)	법안처리	14:10	17:48	294	196			4	3:38:00
45		제3차 (2021년03월25일)	2021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	8:10	8:41	267	254		257	9	0:31:00
46	제 386회 (21.04.01.~0 4.30.)	제1차 (2021년04월19일)	의원(김의경)선서 및 인사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 한질문	14:00	17:36	267	164		53	26	3:36:00
47		제2차 (2021년04월20일)	경제에 관한 질문	14:00	17:24	264	114		38	28	3:24:00
48		제3차 (2021년04월21일)	국회의원(이상직)체포동의안 /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 문	14:01	17:46	276	179		55	21	3:45:00
49		제4차 (2021년04월29일)	대법관(천대엽) 임명동의안, 법 안처리	20:31	22:25	275	215		61	16	1:54:00
50	제 387회 (21.05.03.~ 05.31.)			19:07	19:56	260	249		103	8/ 출장 4	0:49:00
51		제2차 (2021년5월21일)	법안처리	10:00	12:47	276	170		23	15	2:47:00

※제381회 임시회는 본회의 없음

참고자료 2

제21대 국회 제1차년도(2020년도) 국정감사 주요통계

위원회	위원장	감사 위원수	피감 기관수	감사일수	감사진행 시간	시찰횟수	국회사용 일수	영상회의 록수	감사위원평 균출석률
국회운영	김태년(민)	28	9	2	19:49:00	0	2	3	100.00%
법제사법	윤호중(한)	18	76	11	114:29:00	0	11	14	100.00%
정무	윤관석(민)	24	46	10	106:40:00	0	10	10	100.00%
기획재정	윤후덕(민)	26	29	9	102:30:00	1	6	12	99.57%
교육	유기홍(민)	16	64	7	77:58:00	0	5	13	100.00%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이원욱(민)	20	82	9	99:16:00	1	8	9	100.00%
외교통일	송영길(민)	21	30	9	83:14:00	1	9(8)	11	96.43%
국방	민홍철(민)	17	63	10	67:15:00	2	3	9	99.26%
행정안전	서영교(민)	22	35	10	96:26:00	0	7	15	100.00%
문화체육 관광	도종환(민)	16	56	8	66:37:00	1	7	7	93.75%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이개호(민)	19	37	10	97:21:00	0	10	10	96.84%
산업통상지원 중소벤처기업	이학영(민)	30	44	8	96:06:00	0	8	8	96.67%
보건복지	김민석(민)	24	22	8	77:51:00	0	8	8	100.00%
환경노동	송옥주(민)	16	70	10	98:17:00	1	7	9	93.75%
국토교통	전선미(민)	30	31	10	105:03:00	1	5	10	100.00%
정보	전해철(민)	12	5	4	20:52:00	1	2	0	97.22%
여성가족	정춘숙(민)	17	6	2	8:44:00	1	1	1	100.00%
17개	17인	356	705	137	1329:44:00	10	109	149	98.44%
참고	1. 감사진행시간은 국회공보상 종료시간에서 감사개시시간을 뺀 시간임 2. 화상모니터링 가능 영상회의록수는 2020. 11. 15. 기준임								

참고자료 3

주요국가의 예산관련제도와 우리나라의 예산안 확정절차

▣ 주요국가의 예산 관련제도 ▣

구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정부 형태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준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의원 내각제	의원 내각제
주요 재정 관련 법률	예산 회계법,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통제법 등	1998년 재정법, 2000년 정부자원 및 회계법, 2011년 예산책임 및 감사법	헌법, 재정에 관한 조직법률, 결산법률, 사회보장재정 법률	기본법 (연방 헌법), 경제안정 및 성장 촉진법, 예산 원칙법, 연방 예산법, 연방회계감사원 법	헌법, 재정법, 회계법, 국회법, 회계검사원법, 지방재정법 등	재정 시행법
예산 형식	예산 법률주의	예산 법률주의	예산 법률주의	예산 법률주의	예산 비법률주의	예산 법률주의
예산 구조	연방펀드, 신탁펀드로 구성	통합국고자금, 국가대부자금, 기타기금으로 구성	확정예산(일반 예산, 부속 예산)과 잠정예산(재무 특별계정)으로 구성	단일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의 구분이 없음	일반회계예산, 특별회계예산, 9개 준 재정활동	일반계정, 특별계정
재정 관련 제도	PAYGO 재정소요 점검	중기재정계획, 재정권한(Fiscal Mandate), 자원예산 회계제도	중기재정계획, 다년도 예산, 미션별 지출분류방식, 지출감사제도	재정준칙, 중기재정계획, 지방재정조정제도	행정쇄신회의, 예산결산위원회 (상임 위원회)	사전예산자문, 성과관리제도
회계 기간	10월~ 9월	4월~3월	1월~ 12월	1월~ 12월	4월~3월	4월~3월
예산 제출 기한	2월 첫째 월요일	세입 예산안은 3월, 본 세출 예산안은 4~5월	10월 첫째 화요일	매 회계연도 9월에 연방 상·하원에 제출	1월	3월 1일
예산 관련 주요 첨부 서류	향후 5년간의 수입지출 추계 등	예산책임청의 경제 및 재정전망, 국채관리보고서, 정책비용 산출 보고서	재정 평가서, 의무지출에 관한 보고서, 경제 및 재정전망에 관한 보고서, 정책통합보고서, 황서, 백서, 청서	중기재정계획	세입예산 명세서, 각성 각청의 예정경비 요구서 등 (재정법 제28조 참조)	예산보고서
예산 심의 기간 (관행 포함)	2월~ 9월(8개월)	3월~ 7월(5개월)	10월~ 12월(70일)	8월~ 12월	1월말~ 3월31일	2월~ 6월(5개월)
예산안 미의결 또는 미확정시	잠정예산결의안을 통한 지출	1968년 잠정조세징수법 (Provisional Collection of Taxes Act 1968)과 잠정예산(Votes on Account)에 근거 시행	정부가 당해 예산안을 법률명령 형식으로 시행	예산이 법률화될 때까지 법에 명시된 필요업무 유지·수행을 위해 연방 정부가 지출 권한을 위임받음	잠정예산	잠정예산
의회 주요 지원 기관	CBO, GAO, CRS 등	없음	없음	없음	조사 및 입법 고사국, 중의원 조사국	의회 예산처

자료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업무 가이드, 2018

* PAYGO제도 ◦ "PAYGO(Pay-as-you-go)"는 의무지출 증가나 세입 감소를 내용으로 하는 신규 입법 시 세입증가나 다른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조달 방안을 동시에 강구하도록 하는 제도 ◦ 최근 세수 증가를 감소 및 복지수요 증가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 및 국가채무 증가에 따라 중장기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PAYGO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 대두 ◦ 미국에서는 재정적자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1990년 한시적으로 도입 후 2002년 폐지되었다가 2010년 「PAYGO 법」 제정으로 제도입

▣ 우리나라의 예산안 편성 및 확정 절차 ▣

기 간	사 항	비 고
매년 1.31 까지	▪ 당해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 재\$28(국가재정법 제28조) · 연도별 투자수요 및 대상사업선정
3.31 까지	▪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기획재정부 → 각 부처) ▪ 국회 예결위 보고 (기획재정부 → 예결위)	▪ 재\$29·30 ▪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 주요비목의 기준단가
5.31 까지	▪ 예산요구서 제출 (각 부처 → 기획재정부)	▪ 재\$31 · 예산조정작업착수 · 기획재정부안 마련 후 관계기관협의 및 국무회의 의결
9.3 까지	▪ 예산안 국회제출	▪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까지 국회제출(헌\$54 및 재\$33)
12.2 까지	▪ 예산안 국회심의·의결	▪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매년 12.2.) 까지 의결해야한다(헌\$54-2)
12월 초	▪ 예산공고	▪ 확정된 예산의 정부이송 ▪ 국무회의의결 대통령 재가 후 공고

【국회 예산안 심의·확정 과정】

기 간	사 항	비 고
9월 3일 까지	▪ 예산안 국회 제출	▪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재\$33)
9월 3일~ 9월 중순	▪ 본회의 보고 ▪ 정부시정연설	
9월 중순~ 10월 중순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위원회 상정 · 대체토론 (위원질의·정부답변) · 소위원회 심사 · 토론 및 표결(의결) · 예비심사보고	▪ 정부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 상임위 예산안 조정 (증액·삭감)
10월 중순~ 11월 30일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위원회 상정 · 종합 정책질의 (위원질의·정부답변) · 부별심사 ·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소위원회 심사보고 · 토론 및 표결(의결)	▪ 추경안과 기금계획변경안은 위원회 의결로 생략가능 ▪ 정부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정부전체에 대한 정책질의·답변 ▪ 부별심사 ▪ 11~15인의 예결위원으로 구성하며, 검토보고· 상임위예비심사 결과와 종합정책질의 내용 및 교섭단체 의견을 참고하여 예산을 증액 또는 삭감 ▪ 예산안 수정안 첨부
12월 2일	▪ 본회의 심의·확정 · 예결위 심사보고 · 토론 · 표결(의결) : 확정 · 예산안 정부이송	▪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12월2일)까지 의 결하여야 함(헌\$54).

국회윤리특별위원회 관련 국회법 조문

국회법 제46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44조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8. 7. 17.>

- ② 삭제 <2018. 7. 17.>
 -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④ 삭제 <2018. 7. 17.>
 - ⑤ 삭제 <2018. 7. 17.>
 - ⑥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7. 17.>
- [전문개정 2018. 4. 17.]

국회법 제4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의원의 검직 및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의장의 자문과 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 ③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른다. 이 경우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그 밖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와 같아야 한다.
 - ④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의원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의 자격, 임기 및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8. 4. 17.]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 1. 헌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2. 제29조의 검직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 3. 제29조의2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 4.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 5. 제102조를 위반하여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발언시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하였을 때

- 6. 제1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게재되지 아니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또는 복사하게 하였을 때
 - 7. 제1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표 금지 내용을 공표하였을 때
 - 8. 제145조제1항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 9. 제146조를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였을 때
 - 10. 제148조의2를 위반하여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제145조에 따른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 11. 제148조의3을 위반하여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 12.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집회일 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
 - 13. 탄핵소추사건을 조사할 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1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 15.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 16.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
- [전문개정 2018. 4. 17.]

제156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제1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하며,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의원 20명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징계대상자로부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위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 ⑤ 제3항과 제4항의 징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 ⑥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5명 이상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윤

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할 수 있다.

⑦ 제155조제10호에 해당하여 징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의장은 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지체 없이 의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157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제155조제10호에 해당하여 요구되는 징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요구를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여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징계 요구를 회부할 수 없을 때에는 제46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3일 이내에 징계 요구를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7.>

1. 제156조제1항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2. 제156조제2항의 경우: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3. 제156조제5항의 경우: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
- ② 제156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징계 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그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회 국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일부개정 2017.03.02 국회규칙 제200호]

제1조(윤리강령준수)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품위유지)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청렴의무)

국회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직권남용금지)

①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직무관련 금품등 취득금지)

국회의원은 법률안 기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국가기밀의 누설금지)

국회의원은 직무상 지득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사례금)

국회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8조(겸직금지등)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기업체 또는 단체에서 보수를 받는 임직원의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겸직신고)

국회의원은 보수를 받고 있는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기업체 또는 단체의 명칭과 임무등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피의무)

국회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재산신고)

국회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기부행위의 금지등)

① 국회의원은 경조사 및 지역구 행사등에 화환이나 화분을 보내서는 아니된다.

② 국회의원은 경조사 및 지역구 행사등에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서는 아니된다.

③ 국회의원은 연말연시와 명절등에 연하장, 달력 기타 선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의정활동보고를 겸한 인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국외활동)

① 국회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국회의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의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회의출석)

① 국회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식해외출장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② 국회의원은 결혼식 주례나 지역구 활동등을 이유로 국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보좌직원의 임용 및 관리)

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좌직원으로 임용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보좌직원을 성실하게 지휘·감독하여야 하며, 국회가 그 보좌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국회의원 사무실의 운영경비 또는 보좌하는 국회의원의 후원금 등 여하한 명목으로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끝>